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38-01

정책보고서 2010-82-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삼식 · 이지혜 · 최효진 · 박보미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 위기,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체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의 정책 목표는 국민이 갈등 없이 출산·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고령사회 분야의 정책 목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건강·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것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성과평가는 시행계획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실적을 투명화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향후 계획의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김나영 부연구위원과 엄지혜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히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평가 대상	24
제3절 평가 방법	24
제4절 평가 절차	25
제5절 평가결과 활용	26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29
제1절 저출산 분야	31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31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54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68
제2절 고령사회 분야	83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8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6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111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116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23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123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155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69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80
1. 전략적 홍보·교육	180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81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82

제5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183
1. 목표달성도 비교	183
2. 예산집행실적	204
제3장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29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231
1. 저출산 분야	231
2. 고령사회 분야	249
3. 성장동력 분야	261
제2절 지수에 의한 평가	275
1. 총괄	275
2. 저출산분야	275
3. 고령사회분야	277
4. 성장동력분야	278
제4장 종합평가	281
제1절 총괄	283
제2절 저출산분야	284
제3절 고령사회분야	292
제4절 성장동력분야	298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304
제5장 결론	305
부록	313

표 목차

〈표 1- 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24
〈표 2- 1〉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추진 실적	33
〈표 2-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추진 실적	34
〈표 2- 3〉 2009년도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기준	35
〈표 2- 4〉 2009년도 두자녀 이상 보육비·교육비 지원기준	37
〈표 2- 5〉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추진 실적	38
〈표 2- 6〉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실적	39
〈표 2- 7〉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실적	41
〈표 2- 8〉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 실적	42
〈표 2- 9〉 주거안정 지원 추진 실적	43
〈표 2- 10〉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추진 실적	43
〈표 2- 11〉 육아지원 시설 확충 추진 실적	44
〈표 2- 1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추진 실적	45
〈표 2- 13〉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실적	46
〈표 2- 14〉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추진 실적	48
〈표 2- 15〉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추진 실적	53
〈표 2- 16〉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실적(2009년 11월 기준)	55
〈표 2-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실적	57
〈표 2- 18〉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실적	58
〈표 2- 19〉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실적	59
〈표 2- 20〉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실적	60
〈표 2- 21〉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실적	62
〈표 2- 22〉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63
〈표 2- 23〉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64
〈표 2- 24〉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65
〈표 2- 25〉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66

〈표 2- 26〉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68
〈표 2- 2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추진 실적	70
〈표 2- 28〉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 실적	72
〈표 2- 29〉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추진 실적	73
〈표 2- 3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추진 실적 ..	74
〈표 2- 31〉 아동의 발달 지원 추진 실적	76
〈표 2- 32〉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실적	78
〈표 2- 33〉 유해환경 차단 강화 추진 실적	78
〈표 2- 34〉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추진 실적	81
〈표 2- 3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82
〈표 2- 36〉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추진 실적	82
〈표 2- 37〉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태	86
〈표 2- 3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실태	87
〈표 2- 39〉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실태	88
〈표 2- 40〉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실태	90
〈표 2- 41〉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실태	91
〈표 2- 42〉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실태	92
〈표 2- 43〉 퇴직연금제도 확대 실태	94
〈표 2- 44〉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실태	95
〈표 2- 45〉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실태	98
〈표 2- 46〉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실태	101
〈표 2- 47〉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실태	102
〈표 2- 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실태	106
〈표 2- 49〉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실태	107
〈표 2- 50〉 독거노인 보호 강화 실태	109
〈표 2- 5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실태	110
〈표 2- 52〉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실태	112
〈표 2- 5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실태	113

Contents

〈표 2- 54〉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실태	115
〈표 2- 55〉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117
〈표 2- 56〉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태	118
〈표 2- 57〉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실태	121
〈표 2- 58〉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122
〈표 2- 59〉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실적	127
〈표 2- 60〉 2009년 여성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추진실적 ..	129
〈표 2- 6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실적	131
〈표 2- 62〉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실적	132
〈표 2- 6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실적	134
〈표 2- 6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실적	136
〈표 2- 65〉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추진실적	137
〈표 2- 66〉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실적	138
〈표 2- 67〉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적	140
〈표 2- 68〉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실적	141
〈표 2- 69〉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실적	144
〈표 2- 70〉 2009년 WCI 신규 지원과제 현황	146
〈표 2- 71〉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실적	148
〈표 2- 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실적	151
〈표 2- 73〉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실적 ..	155
〈표 2- 74〉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추진 실적	157
〈표 2- 75〉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 실적	160
〈표 2- 76〉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실적	163
〈표 2- 77〉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추진 실적	166
〈표 2- 7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 실적	168
〈표 2- 79〉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추진 실적	170
〈표 2- 80〉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추진 실적 ..	171
〈표 2- 8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실적	172

〈표 2- 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 실적	176
〈표 2- 8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 실적	178
〈표 2- 84〉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178
〈표 2- 85〉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 실적	179
〈표 2- 86〉 전략적 홍보·교육	181
〈표 2- 87〉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82
〈표 2- 8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82
〈표 2- 89〉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	183
〈표 2- 90〉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185
〈표 2- 9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	186
〈표 2- 9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188
〈표 2- 9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189
〈표 2- 9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192
〈표 2- 95〉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193
〈표 2- 9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194
〈표 2- 97〉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195
〈표 2- 98〉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195
〈표 2- 99〉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197
〈표 2-100〉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	198
〈표 2-101〉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200
〈표 2-102〉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202
〈표 2-103〉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203
〈표 2-1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203
〈표 2-10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205
〈표 2-106〉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208
〈표 2-107〉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액	209

Contents

〈표 2-108〉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 210
〈표 2-109〉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212
〈표 2-11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213
〈표 2-111〉 고령사회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215
〈표 2-112〉 고령사회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216
〈표 2-113〉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예산집행률217
〈표 2-11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218
〈표 2-115〉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219
〈표 2-116〉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219
〈표 2-117〉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222
〈표 2-118〉 성장동력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223
〈표 2-119〉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 224
〈표 2-120〉 성장동력분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226
〈표 2-121〉 성장동력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226
〈표 2-1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 227
〈표 2-12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예산집행률228
〈표 3- 1〉 대표영역별 성과(가중지수)275
〈표 3- 2〉 저출산분야의 성과지수(가중치 적용 결과)276
〈표 3- 3〉 고령사회 영역 성과(가중점수)277
〈표 3- 4〉 성장동력영역 성과지수 가중점수(5점 만점)279
〈표 4- 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 283
〈표 4- 2〉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의 사업규모284
〈표 4- 3〉 2009년도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285
〈표 4- 4〉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286
〈표 4- 5〉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290

〈표 4- 6〉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292
〈표 4- 7〉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293
〈표 4- 8〉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293
〈표 4- 9〉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296
〈표 4- 10〉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298
〈표 4- 11〉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299
〈표 4- 12〉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300
〈표 4- 13〉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303

그림목차

[그림 1- 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25
[그림 2-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임 강화(중영역) 구성	31
[그림 2-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구성 ..	54
[그림 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구성	68
[그림 2- 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83
[그림 2- 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96
[그림 2- 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구성	111
[그림 2- 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116
[그림 2- 8]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구성	123
[그림 2- 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구성	155
[그림 2-1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169
[그림 2-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기본계획구조 ..	180
[그림 2-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204
[그림 2-13] 저출산분야 예산	206
[그림 2-14] 고령사회분야 예산	214
[그림 2-15] 성장동력분야 예산	220
[그림 3- 1] 육아서비스이용률 추이	233

Contents

[그림 3- 2]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을 추이	234
[그림 3- 3] 방과후학교 참여율	235
[그림 3- 4] 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및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이행율	236
[그림 3- 5] 국공립보육시설정원충족률과 민간보육시설정원충족률간의 차이 ..	237
[그림 3- 6] 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증가율 ..	238
[그림 3- 7]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239
[그림 3- 8] 불임부부 지원건수	239
[그림 3- 9] 주출산 연령층(25~34세) 여성고용률과 남성고용률 간의 차이 ..	240
[그림 3-10]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가율 및 육아휴직률	241
[그림 3-11] 가족친화지수 추이	242
[그림 3-12] 요보호아동·청소년비율	244
[그림 3-13] 아동·청소년위험환경경험수	245
[그림 3-14]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246
[그림 3-15]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246
[그림 3-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247
[그림 3-17]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	248
[그림 3-18] 65세이상 노인 공적소득보장수혜율 및 20-59세 퇴직연금 가입률	249
[그림 3-19] 20~59세 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률	251
[그림 3-2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251
[그림 3-21]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률	252
[그림 3-22] 65세 기대수명	253
[그림 3-23] 노인치매검진율	254
[그림 3-24]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256
[그림 3-25]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추이	257
[그림 3-2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257
[그림 3-27]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259
[그림 3-28]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259

[그림 3-29]	저상버스 도입률	260
[그림 3-3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령자고용률 추이	262
[그림 3-31]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263
[그림 3-32]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추이	263
[그림 3-33]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 연령 추이 ..	264
[그림 3-3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추이	265
[그림 3-35]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추이	266
[그림 3-36]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및 산업재해발생자 증가율 추이	266
[그림 3-37]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및 증가율 추이	267
[그림 3-38]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 추이	268
[그림 3-3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추이	269
[그림 3-40]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자수 추이	270
[그림 3-41]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270
[그림 3-42]	산업재해율 추이	271
[그림 3-43]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추이	272
[그림 3-44]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	273
[그림 3-45]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추이	273
[그림 3-46]	역모기지 대출건수	274
[그림 4- 1]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	287
[그림 4- 2]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287
[그림 4- 3]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	294
[그림 4- 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	294
[그림 4- 5]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포 ..	300
[그림 4- 6]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류 ..	301

요약

I. 서론

□ 평가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실적(성과)을 평가하여,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2006년도 시범성과평가와 2007년도, 2008년도 성과평가에 이어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8년도 보완판 기준) 및 2009년도 시행계획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중앙정부의 평가 대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4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국민인식개선) 226개 사업으로 구성(사업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중영역과 소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 대상 설정)
 - 저출산분야 90개, 고령사회분야 56개, 성장동력분야 77개, 국민인식개선분야 3개
-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에 편입된 관계로 본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1차 평가와 2차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

- 1차 평가(추진실적 평가): 시행계획상 목표달성과 예산집행 정도 평가
- 2차 평가(사업성과 평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변화를 지표로 측정·평가(대표영역-중영역-소영역의 단계별 가중치 적용)

II.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1차 평가)

1. 전 분야

가. 목표달성 실적

- 분야별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사업은 저출산분야 77개(85.6%), 고령사회분야 50개(89.3%), 성장동력분야 69개(89.6%), 국민인식개선 분야 3개(100.0%)
-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70% 미만) 사업은 저출산분야 4개 (4.4%), 고령사회분야 6개(10.7%), 성장동력분야 3개(3.9%), 국민인식 개선분야 0개 등

나. 예산집행 실적

- 2009년도 예산사업 145개, 비예산사업 78개로 구성
 - 저출산 분야의 예산이 분리되지 않는 3개 과제는 예산집행 실적 평가에서 제외
- 예산은 총 11조8천억원으로 저출산분야 4조6천억원(39.4%), 고령사회 분야 5조4천억원(45.9%), 성장동력분야 1조7천억원(14.8%)
 -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은 91.0%, 70~90% 집행 6.9%, 50~70% 집행 1.4%, 50%미만 집행 0.7%
 - 분야별로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저출산분야 89.1%, 고령사회

- 분야 100%, 성장동력분야 89.3%, 국민인식개선분야 100.0%
- 예산집행률이 90%미만인 사업은 저출산분야 7개, 고령사회분야 0개, 성장동력분야 6개, 국민인식개선분야 0개
- ☐ 비예산사업수는 총 78개로 저출산분야 23개, 고령사회분야 33개, 성장동력분야 21개, 국민인식개선분야 1개

2. 저출산분야 추진실적 평가

가. 목표달성 실적

- ☐ 저출산분야에서 목표를 90%이상 달성사업은 77개(85.6%), 70~90% 달성 9개(10.0%), 70~90% 달성 2개(2.2%), 50%미만 달성 2개(2.2%)
- 중영역별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의 비율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88.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84.8%,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사회문화 조성’ 84.2%,로 유사
- ☐ 당초목표를 90%미만 달성한 사업은 총 13개(14.4%)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7개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특수교육기관(유치원과정만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학생수 증가 및 일반유치원 취원 특수교육대상자 감소로 당초목표의 89.3% 달성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인 차상위 이하 계층을 과대추정한데다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가 감소하여 당초목표의 59.6% 달성에 그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업의 경우, 지역가입자 다자녀가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모의운영 실시, 기본계획 수립, 법령개정안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목표인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함.
 - 직장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6개 사업장에 대해 용지를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75% 달성하였으며, 주된 이유로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장 도산 등에 기인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입력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정보 건수가 14,000건으로 당초목표를 70% 달성(정보입력 참여 비희망 의료기관 및 정보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 정보입력 비활성화)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사업은 세부사업 중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2009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홍보 부족 및 대상자 발굴 미흡 등으로 인하여 당초목표를 52.7% 달성에 그침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사업은 2009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건수가 81만건으로 목표달성도가 14.8%에 불과 (주된 사유로는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30%밖에 지원하지 않아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3개

- ‘육아휴직 활성화’ 사업은 2009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하였으나 (32,691명에게 1,273억원 지원), 휴직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62.5%로 당초목표(70.5%)의 88.7% 수준에 그침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여성고용여건 취약으로 당초목표의 20.0% 달성에 그침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미시행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3개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 아동 보호건수가 5,685건으로 당초목표의 83.7% 달성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총 219천명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88.3% 달성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 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신고·고발보다 사정·권고중심 활동에 따라 실적이 730건(당초목표의 73.3%)에 그침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90% 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89.3%)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59.6%)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미시행)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확충(75%)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70%)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52.7%)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14.8%)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70.5%)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0.0%)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미시행)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83.7%)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88.3%)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73.3%)
3-3. 빈곤아동의자활·자립지원	

나. 예산집행 실적

- ☐ 저출산분야는 예산사업 64개와 비예산사업 23개로 구성
- 전체 예산사업 중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89.1%, 70~90% 집행 사업은 6.9%, 70%미만 집행 사업은 4.6%
- ☐ 중영역별 예산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4.0조원(86.3%),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536억원(9.8%),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794억원(3.9%) 순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93.7%,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91.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78.6%

[저출산분야 예산집행실적 미진 사업]

영역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52.5%)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64.1%)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71.8%)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82.1%)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0.0%)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74.0%)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자능력향상서비스(85.9%)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은 총 7개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3개
 - ‘I-사랑카드 도입’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예산 집행률이 52.5%로 저조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사업 대상자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추정을 다소 높게 잡은데다가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예산집행률이 64.1%로 저조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사업은 보육교사가 야간 근무를 꺼려 예산 집행률이 71.8%로 다소 저조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3개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사업은 예산에 비해 산전후 휴가 사용 인원 감소로 예산집행률이 82.1%로 상대적으로 저조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경기불황에 따른 여성고용 여건 악화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당초예산의 20.0%만 집행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역시 지원대상 감소로 예산의 74.0%만 집행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1개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이용자수가 당초목표에 이르지 못해 예산집행률이 85.9%로 다소 저조
- 저출산분야의 예산은 일부 사업들에 집중 경향
 -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71.6%, 사교육비 부담 경감 5.1%,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4.3%,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3.8%,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3.5%,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3.5% 등 6개 사업의 예산이 저출산분야 전체예산의 90% 상회
 - 이외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80여개 사업의 예산은 10%미만에 불과

3. 고령사회분야 정책추진성과 평가

가. 목표달성 실적

- 고령사회분야에서 당초목표 90%이상 달성 사업은 50개(89.3%), 50~70% 달성 2개(3.6%), 50%미만 달성 4개(7.1%)
- 중영역별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과 ‘노인의 사회 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100.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88.9%,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77.3% 순

- 당초목표를 90%미만 달성한 사업들은 총 6개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5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1개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5개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사업의 결과, 노후설계상당 달성률이 11.2%(목표대비 37.3%), 전환 달성률이 4.1%(목표대비 51.3%)
 -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였기 때문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학연금법 개정(2001년, 책임준비금 적립 신설 등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책임준비금 계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정부연금보험준칙』을 마련 중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사업으로 2009년에 퇴직연금 세제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2010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부여 불가능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사업의 경우, 2009년에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87개소(2009.11)로 2008.12월 77개소에 비해 13%가 증가하여 당초목표(20% 증가)의 65%만 달성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사업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등과 같은 연금소득 세제 개편은 재정여건, 연금소득세 납부추이 등을 보아가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간주하여 개선방안을 입안하지 않았음(장기과제로 전환 필요).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1개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조정과정에서 일부 연기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90% 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37.3%, 51.3%) • (특수직연금)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미시행)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미시행)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65.0%)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미시행)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2-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2-3. 노인 권익 증진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3-2. 생산적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 참여여건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연기)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개발	

나. 예산집행 실적

- ☐ 고령사회분야는 예산사업 23개와 비예산사업 3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5조3,978억원
 - 23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 ☐ 고령사회분야 예산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3.6%, 독거노인 보호 강화 15.5%로 2개 사업에 총예산의 약 80% 집중
 - 이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6.1%,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8%,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3.7% 등을 합할 경우 총 5개 세부영역의 예산이 총예산의 93% 정도를 차지

4. 성장동력분야 추진실적 평가

가.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분야에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사업은 69개(89.6%), 70~90% 달성 5개(6.5%), 50~70% 달성 3개(3.9%)
 -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사업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94.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85.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83.3% 순
- 당초목표를 90%미만 달성한 사업은 총 8개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2개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에서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문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워 당초목표(전문외국인력 체류자 증가율)의 절반정도(54.0%)만 달성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사업은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의 방송노출 회피 등으로 방송 제작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목표의 60.5%만 달성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3개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사업은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1종과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1종 중 전자만 완료하여 50.0% 달성에 그침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66.2%로 당초목표를 87.9% 달성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광고,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교육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안전의식 제고율이 사업주는 4.3% 증가하고 근로자는 4.2% 증가하여 당초 목표를 각각 86%, 84% 달성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54.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60.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50.0%)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교과부)(87.9%)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85.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 통합DB 개발 및 구축 (73.0%)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77.3%, 66.7%)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66.7% 등)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3개

- 고령친화산업 통합DB 개발 및 구축 사업의 결과 2,198건을 구축하여 당초 목표를 73% 달성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사업을 통해 297개 제품을 지정 공고하여 당초목표 77.3% 달성,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으로 2개 품목을 지정 고시하여 당초목표 66.7% 달성
 - 당초 우수제품만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급여 품목으로 가능하였으나, KS 등 모든 규격 인정 제품으로 완화(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됨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다소 저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사업의 결과, 2개 품목의 우수 품목 확대, 297개의 우수제품 지정, 550개 제품의 DB구축 등으로

당초목표를 각각 66.7%, 77.3%, 122.2% 달성

- 우수품목 확대의 경우, 제약으로 인해 당초 우수품목을 3개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2개만 확대하였기 때문에 목표달성률이 저조
- 우수제품 지정의 경우, 기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급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었으나 이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장기요양 급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게 변경되어 우수제품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목표달성률이 저조

나. 예산집행 실적

□ 성장동력분야는 예산사업 56개와 비예산사업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조7,384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 중 89.3%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0.7%가 예산을 70~90% 집행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100.0%,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88.2%,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85.7% 순

□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6개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4개
 - ‘정년제도 개선’ 사업은 정년연장장려금 지급 대상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예산집행률이 79.3%로 상대적으로 저조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사업의 경우, 41개소, 1,366명에 대하여 25억원을 지원(11월말 현재)하여 총예산 28억원 중 89.3% 집행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사업의 경우 10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예산의 88.2%를 집행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사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리비용의 감소나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등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76.4%로 상대적으로 저조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2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의 경우, 훈련 후 훈련비가 1달반~2달반 정도 후에 지급되어 후반기 사업비 지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어 예산 집행률이 77.2%로 다소 저조
 - ‘직장복귀지원금 확대’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지원 대상인 원직장 복귀 인원이 줄어들어 예산집행률이 73.8%로 다소 낮음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실적 미진 사업]

영역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제도 개선(79.3%)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89.3%)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88.2%)
1-3. 외국인력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76.4%)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77.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73.8%)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5개 세부영역에 전체예산의 90% 집중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에 72.9%의 예산이 집중
- 이외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6.3%),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5.2%),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3.9%),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2.5%),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2.2%)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93% 수준
-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은 2%미만으로 미약한 수준

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평가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는 3개 중영역에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전략적 홍보교육’,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
- 동 분야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III.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2차 평가)

1. 저출산분야

- ☐ 저출산분야 전체의 성과(3.5점)는 보통 다소 상회
 - * 이하에서 5점 만점 중 1~2점미만 매우 미흡, 2~3점미만 미흡, 3~4점 미만 양호, 4점이상 우수로 평가
-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성과(3.6점)는 양호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소영역 성과(3.8점)는 양호
 -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3점)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을 2008년 41.0%→ 2009년 45.6% 증가
 - i-사랑카드 도입,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당초목표 미달성,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한정
 - (사교육비부담 경감지원 4점) 방과후학교참여율 2008년 52.8%→ 2009년 59.5% 상승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확대 5점) 세제지원금액 목표치대비 차액 0
 -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소영역 성과(3.0점)는 양호
 - 국공립보육시설증가를 2008년 4.5%→ 2009년 5.0% 증가, 직장보육 시설 설치의무이행률 다소 증가 등(4.5점)
 - 기본보조금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정원충족률

- 차이 2008년 8.5%p→ 2009년 10.2%p 증가(1점)
-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 육아지원서비스증가를 2008년 14.1%→ 2009년 4.7% 둔화(4.0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의 성과(4.5점)는 우수
 - 산모도우미 수혜율(목표치 대비) 91%
 - 불임부부 지원건수 2008년 13,269건→ 2009년 17,238건 증가
 - ‘일과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성과(3.6점)는 양호
 -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의 성과(4.0점)는 우수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2점) 휴가급여 수급자 증가율 3.0%
 - (육아휴직 활성화 5점) 육아휴직률 2008년 42.5% → 2009년 50.2%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5점) 가족친화지수 2008년 44.0→2009년 49.2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점) 엄마채용장려금 등 수급자 증가율 -25.5%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소영역 성과(3.5점)는 양호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청소년 가족 가치관(3점),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4점)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 성과(3점)는 보통수준
 - (안전사고 예방 사회기반조성 5점) 아동안전사고사망률 2008년 6.0명
 -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강화 1점) 학생대상전문상담건수 증가율 -44.1%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소영역 성과(3점)는 양호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5점) 아동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이용률 43.0%
 - (유해환경 차단 강화 1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신고·고발건수 2008년 830건→ 2009년 730건 감소

2. 고령사회분야

- 고령사회분야 전체의 성과(4.5점)는 우수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성과(4.4점)는 우수
 -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의 성과(4.2점)는 우수
 -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2008년 66.0%→ 2009년 66.3% 증가(2점)
 - 기초노령연금수급률 2008년 57.8%→ 2009년 69.9% 증가(5점)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의 성과(5.0점)는 우수
 - 20~59세 퇴직연금가입자증가율 2008년 107.4%→ 2009년 121.0% 증가(5점)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중영역의 성과(4.5점)는 우수
 -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의 성과(4.4점)는 우수
 - 노인건강검진율 2007년 50.1%(4점)
 - 노인치매검진율 2008년 2.9%→ 2009년 9.7% 증가(5점)
 -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의 성과(5점)는 우수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2008년 3.9%→ 2009년 5.0% 증가(5점)
 - 노인요양시설구축률(목표치대비) 2008년 110.6%→ 2009년 116.6% 증가(5점)
 - “노인 권익 증진” 소영역의 성과(4.0점)는 우수
 - 노인 삶의 만족도는 2008년 3.1(4.0점)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성과(5.0점)는 우수
 - “노인일자리 창출” 소영역의 성과(5점)는 우수
 - 노인일자리 창출률(목표치대비) 107.1%(5점)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의 성과(5.0점)는 우수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성과(4.0점)는 우수
 -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목표대비) 134.3%, 저장버스 도입률(목표대비) 105.8% 등 5점, 노인 주택만족도는 69.7%(2008년)로 3점

3. 성장동력분야

- 성장동력분야의 성과(3.5점)는 양호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성과(3.0점)는 양호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 성과(3.8점)는 양호
 - 여성직업능력개발 참여율 2008년 33.3%(5점)
 - AA사업장여성고용률 증가율 34%(1%p대비), AA사업장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가율 14.1% 등은 낮은 수준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 성과(2.4점)는 미흡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수급자수 증가율 47.9%(5점)
 - 정년제도 도입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의 평균연령증가율(1세 대비) 17.0%(1점)
 - 고용장려금 수혜자증가율 -4.0%(1점)
 -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 13.8%(2점)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소영역 성과(2.5점)는 미흡
 -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2.4%(2.0점)
 -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증가율 9.1%(3.0점)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성과(3.4점)는 양호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 성과(3.8점)는 양호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41.3%(5점)
 - 평생학습참여율 28.0%(5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p 대비) -30.0%(1점)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소영역 성과(2.8점)는 미흡
 -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97.1%(4점)
 - 산재장해인직업복귀율 증가율 -3.8%(1점)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성과(5점) 우수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소영역 성과(5.0점)는 우수
 -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증가율 33.5%(5점)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지정·표시건수 297건(5점)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소영역 성과(5.0점)는 우수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9건(5점)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소영역 성과(5.0점)는 우수
 -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 61.7%(5점)

IV.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높아 대체적으로 추진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정책 대상 제한,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사업의 영세성, 일부 사업 들에의 예산 편중 등 한계성 존재
- 그리고 여전히 일부 중요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미흡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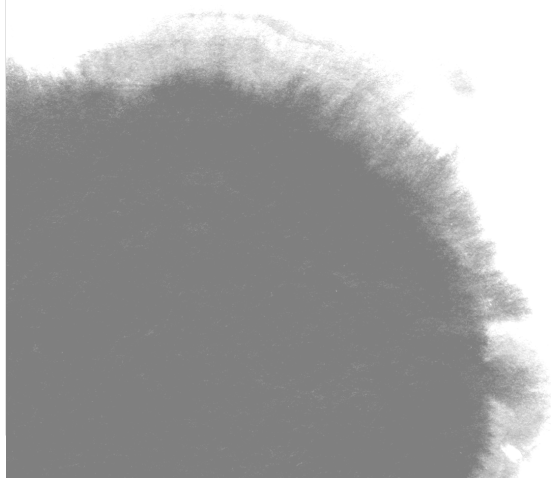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저출산분야의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고령사회분야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 226개 정책들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핵심정책과 기초정책으로 구분 하여 효율적인 정책 관리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 목표달성도가 낮은 저출산분야 13개 정책, 고령사회분야 6개 정책, 성장동력분야 8개 정책 등
- 추진성도가 낮은 정책들에 대해 대상, 지원수준 등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저출산분야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확대,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사업 등
 - 고령사회분야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구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등
 - 성장동력분야의 경우 AA사업장여성고용 촉진, 정년연령 증가, 고용 장려금 제공, 산업재해 예방, 방문취업시증 소지자 증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 등
- 2009년도 추진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정책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및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시행(2006)
 - 동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제1차 기본계획의 중간년도인 2008년에는 보완판을 마련하여 2009년도 시행계획부터 반영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시행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 마련(2006. 6~2007. 3)
 -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시범평가 실시(2007. 8~12)
 -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실시(2008. 3~11)
 -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실시(2009. 3~11)
 - 성과지표 간명화 및 지수화 작업 추진
- 여기에서는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2008년에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에 의거하여 실시

제2절 평가 대상

- 2009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중앙정부의 평가 대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4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국민인식개선) 226개 사업으로 구성(사업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중영역과 소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 대상 설정)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에 편입된 관계로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

〈표 1-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대영역	중영역	사업수
전체		226
저출산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90
고령사회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 건강하고 보호받은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 조성 	56
성장동력분야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77
국민인식개선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교육·홍보 •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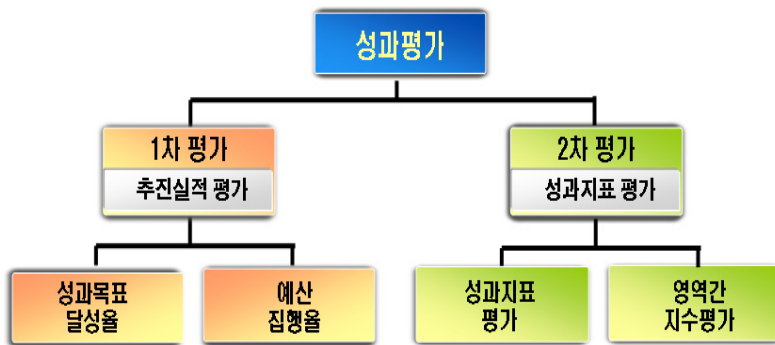
제3절 평가 방법

-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1차 평가(추진실적 평가)
 -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사업목표를 달성한 정도(목표달성률)와 확보한 예산의 집행률(예산집행률)을 평가

○ 2차 평가(사업성과 평가)

- 개별사업들의 수행을 통해 달성(개선)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¹⁾ 값을 중앙부처, 관련기관, 통계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
- 대표영역·중영역·소영역의 단계별로 사업별 성과지표값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과점수를 산정하여 영역별 달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

[그림 1-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제4절 평가 절차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 7단계로 구분·실시

- 1단계: 평가지침 통보
 - 2009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 지표 및 가중치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단계: 중앙부처 추진실적 제출
 - 각 부처에서 2009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사업목적, 추진일정,

1) 별도의 연구용역에서 도출되었으며, 소영역별로 가중치와 함께 설정됨.

추진내용 및 목표달성률, 예산내역 및 집행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3단계: 추진실적 검토·보완
 - 성과평가연구기관(필요시 보건복지부 경유)에서 각 부처의 제출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문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
- 4단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평가연구기관에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추진실적을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사업별 및 영역별(소영역, 중영역, 대표영역)로 분석·평가
- 5단계: 성과지표 평가
 - 소영역별 성과지표의 값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의 내부자료,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 성과지표의 값에 가중치(소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를 적용하여 중영역별 및 대표영역별 성과점수를 산정·평가
- 6단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평가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7단계: 성과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기년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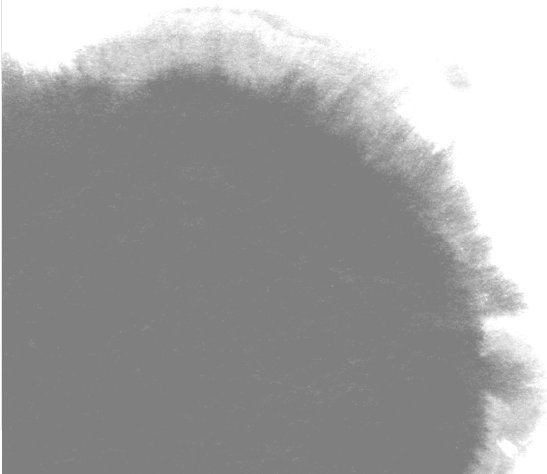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제5절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익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정부는 시행계획 평가결과가 확정 되면 국회에 보고
- 평가결과는 익년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 합리화, 예산배분 효율화, 정책 간 연계강화 등에 활용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평가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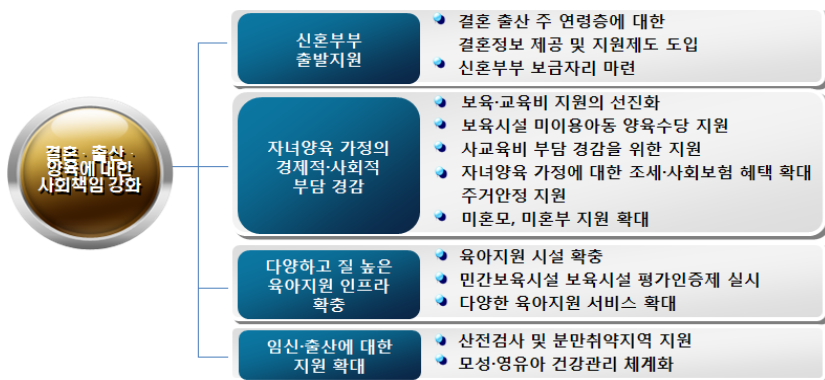
제1 절 저출산 분야

- 저출산정책의 기본목표는 출산을 제고로, 주요 전략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대표영역)”으로 설정
 -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개 중영역으로 구성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신혼부부 출발지원, ii)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iii)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iv)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4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구성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①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 결혼 관련 정보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관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율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만남에서부터 결혼 준비, 결혼, 결혼 후 가정생활 등 단계 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가능한 전문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결혼전문 포털사이트 1식을 구축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억원 전액 집행).
- 이외에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범사회적인 결혼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관련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였고, 종교계 등 민간단체를 통해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을 확립하였음.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신혼부부나 교제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부갈등과 가정 해체 문제를 예방하고 결혼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결혼생활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전국 97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7천 명이 참여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75%)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강사풀 구축, 바람직한 혼례문화 매뉴얼 배포 등이 이루어졌음.
-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하지 않음.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부는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관련 남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국방일보(성인지 정책, 모성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사 11회 게시), 국방인트라넷 홈페이지(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교육용 동영상 게시), 국군방송(저출산 시사방송 2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저출산 교육자료를 게시하였음. 그에 따라 목표를 초과달성(110%)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입영 대상자 중 유자녀기혼자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고, 6세 이하의 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출산·양육생활을 위한 병역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유자녀 기혼자 488명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였으며, 411명에 대해 병영기일을 연기하여, 목표를 초과달성(112.4%) 하였음(비예산사업).

〈표 2-1〉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결혼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여부	포털사이트 구축(1식)	포털사이트 구축(1식)	100.0	5	5	100.0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센터 결혼준비교육 참여자	4천명	7천명	175.0	-	-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교육 강화	국방일보에 교육자료 게시	10회 이상	11회	110.0	비예산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유자녀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인원 + 배우자임신시 입영기일 연기자 수	800명 이상	899명	112.4	비예산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국토해양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주택청약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저리의 전세·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8년에 도입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하였음.

- 2009년에는 155개 단지에서 총 23,334호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여 (2009.11월 기준) 당초목표의 93.3% 실적을 보였음(비예산사업).

〈표 2-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공급실적/계획×100	25,000	23,334	93.3	비예산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①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차등보육비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기구 평균소득에서 영유아가구 소득으로 변경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은 상반기에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되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시설 지원으로 원상 복구됨.
- 2009년에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0~4세 아동 692천명(전액지원 482천명, 일부지원 210천명)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4.1%)한 것으로 나타남(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보육료만 지원받는 아동을 포함 시에는 835천명).
- 예산은 22,859억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차등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 7월부터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서 영유아가구 소득으로 변경
- 2009년에는 유치원 이용 만3~4세아 153,505명(취원아동수 대비 53.8%)에게 1,946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1.9%)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2009년도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기준

지원기준(2009년 상반기)	지원비율	지원기준(2009년 하반기)	지원비율
1층: 법정 저소득층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
2층: 차상위 계층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6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8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6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30%		

주: 0~4세 보육료 지원단가는 만0세 383천원, 만1세 337천원, 만2세 278천원, 만3세 191천원, 만4세 172천원임.
 국·공립 유치원 기준 지원단가는 만3~4세 57천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191천원, 만4세 172천원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

□ 만5세아 무상보육비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취학 전 만5세아 학업준비를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 소득기준은 상반기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하반기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
- 2009년에는 보육시설 이용 만5세 아동 109천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9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388억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 소득기준은 상반기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하반기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
- 2009년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 134,216명(취원아동수 대비 53.3%)에게 1,979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4.3%)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 무상보육비

-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만12세 이하 장애아동 15.6천명에게 보육료 650억원(예산 전액)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1.4%)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만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2,233명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89.3%로 나타남(예산은 총 95억원 전액 집행).
- 목표달성률 미진 사유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특수교육기관(유치원 과정만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학생수가 늘고 일반 유치원 취원 특수교육대상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임.

□ 두 자녀 이상 보육비

- 보건복지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0~4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도 소득기준은 상반기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하반기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

- 2009년에는 110천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118.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251억원 전액 집행).

□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만3~4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도 소득기준은 상반기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하반기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
- 2009년에는 13,585명(취원아동수 대비 100%)에게 92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5.3%)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2009년도 두자녀 이상 보육비·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상반기)	지원비율	구 분	지원기준(하반기)	지원비율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0%	두자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4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40%	두자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5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			

주: 0~4세 보육료 지원단가는 만0세 383천원, 만1세 337천원, 만2세 278천원, 만3세 191천원, 만4세 172천원임.
 국·공립 유치원 기준 지원단가는 만3~4세 57천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유아학비 지원변경 계획』.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어업인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농지소유규모기준은 2004년 1.5ha미만에서 2005년 2ha미만, 2006년 5ha미만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금액은 보육·교육시설 이용 시 법정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단가의

70%,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시 35%

- 2009년에는 월평균 53천명(농어가 총 영유아수 대비 66.3%)의 농어업인 자녀에 양육비용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94.7%로 나타남(예산은 383억원 전액 집행).

〈표 2-5〉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차등보육료 지원	실제 지원아동수	665천명	692천명	104.1	22,859	22,859	100.0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실제 지원아동수	116천명	109천명	94.0	2,388	2,388	100.0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실제 지원아동수	14천명	15.6천명	111.4	650	650	100.0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실제 지원아동수	93천명	110천명	118.3	1,251	1,251	100.0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수×100	48.1%	53.8%	111.9	4,998*	4,631*	92.7
만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수×100	51.1%	53.3%	104.3			
두자녀이상 추가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수×100	95.0%	100.0%	105.3			
장애아 무상교육비	계획 지원인원 대비 실제 지원인원 비율	2,500명	2,233명	89.3	95	95	100.0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아동 비율	70.0%	66.3%	94.7	838	838	100.0
아이사랑카드 도입	전국 확산	전국 확대 실시	전국 확대 실시	100.0	54.5	28.6	52.5
보육정보포털 구축	접속자수	연간 110만명	월10만명 연120만명	109.1	21	21	100.0

주: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제외한 유아 학비 지원의 경우 만3·4세아 차등교육비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두자녀이상 추가 교육비 외에 종일반비 지원, 시·군 자체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예산이 분리가 불가능하여 통합하여 제시 하였음. 사업별로 집행액은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946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979억원, 두자녀이상 추가 교육비는 92억원, 종일반비 지원은 592억원, 시·군 자체사업은 21억원.

□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 보육료 신청·지원 행정비용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9.12.7일 현재

828천 건 카드를 발급하였고, 전국에 약 34천개 시설에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이외에 부모의 결제 편의성을 위해 분기단위 자동결제를 도입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월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였음.

- 예산은 총 54.4억원 중 52.5%만을 집행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 보육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0~7세 자녀를 둔 부모나 임신 예정 부부를 위해 보육 정보(정책,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보육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 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접속자수가 연 120만명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9.1%)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1억원 전액 집행).

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0~1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2009년 7월부터 시행).
- 2009년에는 68,000명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당초목표의 59.6%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총 688억원 중 64.1%만 집행하였음.
 -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당초 차상위이하 계층에 대한 추정을 다소 높게 설정한데다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가 감소 했기 때문임.

〈표 2-6〉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지원아동수 취합	114천명	68천명	59.6	688	441	64.1

③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새터민 자녀·보훈대상자 자녀·시설수용 학생,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저소득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공·사립학교 저소득층 학생 35만명, 국립학교 2,070명에게 각각 1,265억원, 621백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271억원 전액 집행).
 - 이 외에 국립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하여 방과후 및 방학 중 초등학생을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교육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4,146개 초등학교의 4,622개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지원 (수혜 학생 77,155명)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66.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74억원 전액 집행).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수준별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충학습 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수요 억제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가정학습 수준별 학습용·교수용 콘텐츠 개발,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지원, 컨설팅, 홍보, 관련 연구 등)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중점서비스대상 학생 중 담임형 가입비율이 75%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25.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211억원 중 97.2% 집행).

〈표 2-7〉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월 평균 지원 인원	35만명	35만명	100.0	1,271	1,271	100.0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확대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실 수	2,800개	4,662개	166.5	874	874	100.0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제제 구축	중점서비스대상 학생 중 답입형 가입비율	60%	75%	125.0	211	205	97.2

4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혁

-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조세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기본공제 인상(1인당 100→150만원), 교육비(취학전,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증가) 및 의료비(연간 500→700만원) 등 특별공제 인상 등에 따라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편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월 급여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완료(2009년 2월)하여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지역가입자 다자녀가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모의운영 실시, 기본계획 수립, 법령개정안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목표인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가장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09년 11월말 현재 13명에 추가급여(노령연금)를 지급(7백만원)하고, 2010년 예산 2백만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혁	개편방안(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 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여부	'09.2월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개정	2009.2.22 시행	100	비예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기본계획수립 ·개정법령안 마련	70	비예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10년 예산 확보	2백만원	2백만원	100.0	0.07	0.07	100.0

5 주거안정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국토해양부는 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공급량의 3%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주택 특별공급(분양)을 하거나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3%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정확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09년 11월까지 총 분양주택 200,965세대 중 6,029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24,903세대에 대해 향후 2,490세대 우선공급 예정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국민주택자금 이용시 저리의 전세 또는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구입자금 대출한도 5천만원 상향(금리 0.5%우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700만원을 각각 상향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9〉 주거안정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비율	공공주택 5%, 국민임대주택 10%	공공주택 5%, 국민임대주택 10%	100.0	비예산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한도상향, 금리우대	100%	100%	100.0	비예산		

6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기관을 통해 재가미혼모·부자에게 의료비 지원, 정보 제공, 자녀양육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직업 연계, 보호 시설 연계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양육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9년에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위기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6개소 운영을 시범 지원하였으며, 미혼모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미혼모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향상도 시도하였음.
 - 총 4,705명이 미혼모지원 거점기관을 이용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 (117.6%)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2억원 전액 집행).

〈표 2-10〉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이용자수(명)	4,000명	4,705명(건)	117.6	3.2	3.2	100.0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 육아지원 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신축 39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5개소 등 총 84개소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5%)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76억원 전액 집행).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여성의 취업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 실적으로 설치 지원은 43개 사업장 2,351백만원(당초목표의 122.9%), 용자 지원은 6개 사업장 1,777백만원(당초목표의 75%), 운영비 지원은 181개 사업장 14,968백만원(당초목표의 94.8%)으로 각각 나타남(예산 209억원 중 91.4% 집행).
-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장 도산 등으로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2-11〉 육아지원 시설 확충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확충시설 수	80개소	84개소	105.0	176	176	100.0
직장 보육 시설 확충	직장보육 설치지원	설치 지원 사업장수	35	43	122.9	209	191
	직장보육 용자지원	용자 지원 사업장수	8	6	75.0		
	직장보육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장수	191	181	94.8		

②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9,440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2009년 1~2기 인증심의 결과로서 3,324개소가 인증을 통과하는 등,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시설 비율이 52.2%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30.5%)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34억원 전액 집행).

〈표 2-1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보육시설 평가인증	평가인증율 (평가인증 시설수 / 전체 시설수)	40%	52.2%	130.5	34	34	100.0

③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양립 기반을 조성하고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 6월 현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5천명), 야간 보육 아동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시간연장형 보육이용 아동수는 17,080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4%)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798억원 중 71.8%를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자주 그만두어 인력을 바로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이용 비용을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 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사업의 전국 확대,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지원건수가 951,854건(11월말 기준)으로 증가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2.1%)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총 348억원 중 91.4%집행).
- 아이돌보미서비스 만족도는 87.5점으로 당초목표의 96.2%로 나타남.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육아돌봄이 필요한 5~10가구(만0~12세 아동 양육)를 돌봄 품앗이 조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 필수사업으로 지정·수행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표 2-13〉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이용아동수 취합	15,000명	17,080명	113.9	798	573	71.8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건수	849,000건	951,854건	112.1	348	318	91.4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91점	87.5점	96.2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품앗이 육아망 사업 시행 기관 수	97	97	100.0			
종일반 운영 확대	종일제 운영 유치원 / 전체 유치원×100	95%	95.5%	100.5	484	484	100.0

□ 종일반 운영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사립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해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맞벌이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전체 유치원 중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을 95.5%까지 확대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0.5%)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종일반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210억원), 4,530개원에 종일제 보조인력 지원(274억원) 등을 추진하였음(예산 484억원 전액 집행).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 산전검사료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산전진찰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일 4만원) 내에서 부가급여를 시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651,065명(11월말 기준)의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비용을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인 고운맘카드 지원을 신청하고,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를 반영한 법령을 개정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의 임신부에게 이동 산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여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음(2009년 신규사업).
- 2009년에 산부인과가 없는 전남 1,121명과 경북 180명 가임기여성에게 산전·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88.6%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26.6%)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6억원 전액집행).
- 단, 중앙정부에서 차량 및 장비비의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함.

□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비 융자사업」 추진시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분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인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고흥 종합병원에 9천2백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14〉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전검사로 지원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를 반영한 법령개정	법령개정	법령개정	100.0	(건강보험)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70%	88.6%	126.6	4.6	4.6	100.0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분만취약지역 융자지원	1개 지역	1개 지역 지원	100.0	비예산		

②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생아 출생 시 전산망을 활용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정보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된 임신부·영유아 건강 정보제공 등을 위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배부하며,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출생 시 전산망을 활용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등록·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대광역시, 6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전산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입력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정보 건수가 14,000건으로 당초 목표를 70%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은 2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추진 실적

미비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정보입력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의료기관 및 정보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 정보입력이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의 경우 82만부(산모수첩 390,000, 어린이 건강수첩 430,000)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철분제는 임신5개월 이상 임신부 254,939명(9월까지)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철분제 이용률이 54.4%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36%)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7.4억원 전액 집행).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 제공, 인공임신중절 예방,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고위험 임신예방관리 24회, 직장여성생식건강증진 33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역요원 파견(15개 보건소, 30명 통역요원, 7개 언어 서비스), ‘준비맘 건강맘 병어집 4종(한/영, 한/중, 한/베, 한/필) 4,000부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 결과, 여성생식보건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96%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20%)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임기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보콘텐츠 개발·제공, 여성장애인·결혼이민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출산지원시책 정보 제공,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UCC 공모 및 우수작품 극장·지하철 광고, 전국 36개 대학에서 50명의 대학생의 생명사랑서포터즈 선발·운영, 인공임신중절 예방 생명포럼 3회 운영, 상담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및 악영향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80.8%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24.3%)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을 통한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행사 추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모유수유클리닉 설치·운영 개소수가 85개소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6.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4억원 전액 집행)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사업 수행(예산 104.3억원 전액 집행)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구의 339천명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검사지원율 72.3%) 목표달성도가 75.3%로 나타남. 총 1,321명에게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9,748명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목표달성도가 80.8%로 나타남.
 - 차상위가정의 신생아 14천명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여(신생아 난청 검사율 36.9%) 목표달성도가 52.7%로 나타났음. 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이유로는 2009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후 4개월~6세 미만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5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60개월)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71만 건의 검진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1.4%)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을 제외한 11억원 전액집행).
 - 이 외에 사업 효과 분석이나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검률 관리 및 검진 취약계층을 배려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보충영양관리

- 보건복지가족부는 취약계층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사업 참여 전·후의 빈혈 유병률 비교 시 57.7%에서 31%로 감소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46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314억원 전액 집행).
 - 사업 전·후로 영양섭취적정도가 0.74점에서 0.87점으로 높아졌으며, 영양지식 점수가 7.61점에서 8.30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 시의 보험급여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보험급여 인정기준 중 ‘재태기간’ 및 ‘출생 체중’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신생아 건강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재태 기간(당초 32주 이하에서 33주 이하로)과 출생 체중(당초 1,500g 이하인 경우 1,750g이 될 때까지 → 1,750g 이하인 경우, 2,000g이 될 때까지)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한 건강 보험 인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와 관련된 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대학병원을 지역센터사업자로 선정하여 병상 확충을 지원 함으로써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 거점기관을 육성하여 신생아 환자 가정의 질병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지방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2개소(충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총 20개 병상 확충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0억원 전액 집행).
- 불임시술 지원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시술비 지원건수 대비 임신건수가 31%로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101.6%)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21.3억원 중 99.8% 집행).

□ 산모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3,401명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91%를 달성하고, 수혜자 만족도가 75.7점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0.9%)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40억원 중 91.1% 집행).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 질병관리본부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달성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총예산 722억원(99.6% 집행)을 들여 사업지침 개정·보급, 예방접종 수가 책정·고시, 보건소 및 참여 의료기관 대상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병·의원 접종 비용 지원 건수가 81만건으로 목표달성도가 14.8%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사유로는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30%밖에 지원하지 않아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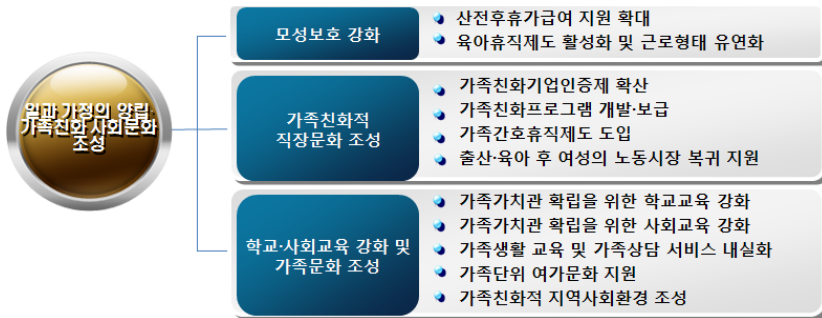
〈표 2-15〉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전산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입력한 건강정보 건수	20,000건	14,000건	70.0	2	2	100.0
	철분제 지원	(철분제 지원인원 / 대상자수) × 100	40%	54.4%	136.0	87.4	87.4	100.0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설치·운영 개소수	80개소	85개소	106.3	14	14	100.0
	인공임신 중절 예방 및 홍보 여성생식 보건 증진프로그램지원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및 악영향에 대한 국민인지도	65%	80.8%	124.3			
		생식보건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0%	96%	120.0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이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율 (정부지원검사건수/출생아수×100)	검사율 96%	검사율 72.3%	75.3	104.3	104.3	100.0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인원	12천명	97백명	80.8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검사율	70%	36.9%	52.7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건수	70만건	71만건	101.4	11	11	100.0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참여 전·후 혈중헤모글로빈(빈혈) 추정을 통해 판정	10% 감소	46.3% 감소	463.0	314	314	100.0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급여 확대		건강보험급여 기준확대 인정기준 고시 개정 완료 여부	건강보험 인정기준 고시 개정 완료 여부	개정완료	100.0	비예산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설치 병상수	20병상	20병상	100.0	30	30	100.0
체외수정사술비 지원		지원건수대비 임신건수	30.5%	31.0%	101.6	121.3	121	99.8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수혜자수 수혜자 만족도	58,698명 75%	53,401명 75.7%	91.0 100.9	340	309.7	91.1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보급 예방접종수가 책정·고시 교육계획 수립·시행 여부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건수	개발 설정 수립·시행 5,462천	완료 완료 완료 81만건	100.0 100.0 100.0 14.8	725	722	99.6

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모성보호 강화, ii)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iii)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구성



2-1. 모성보호 강화

①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2)

-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중 사용자부담분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종전 산전후휴가급여로 최초 60일분은 사업주,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3)에 한하여

2)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급여지원은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1개의 과제 번호를 사용하여 통합 기술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별로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등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데 단, 중소기업은

9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 2009년에는 대기업 사용자의 부담(60일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회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한 재원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획 하였음.
- 2009년에 산전후휴가급여는 64,092명에게 1,620억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191명에게 4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음(11월 기준)(예산 총 1,978억원 중 82.1% 집행).
- 그러나 산전후(유·사산)휴가사용자 중 72.0%가 휴가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 당초목표(80.0%)의 90.0% 수준으로 나타남.

〈표 2-16〉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실적(2009년 11월 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확대	휴가사용 후 1년 경과후고용유지율 (1년 경과후 고용유지자 ÷산전후휴가자)×100]	80.0%	72.0%	90.0	1,978	1,624	82.1

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 노동부는 육아휴직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06년 만 1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급여수준을 월 50만원으로 증가, 2008년에는 휴가대상을 만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음(급여수준은 50만원으로 동일).
- 2009년에는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걱정 소득보장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수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happy mail 시스템” 운영,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 사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32,691명에게 1,273억원, 육아휴직장려금은 12,509명에게 208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음(예산 1,618억원 중 91.5% 집행). 또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은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육아휴직 관련 심사항목을 조정하였음.
- 그러나 휴직6개월후 고용유지율이 62.5%로 당초목표(70.5%)의 88.7% 수준으로 나타남.

□ 근로형태 유연화

- 노동부는 근로형태를 유연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근로형태 유연화 관련 교육 실시, 매뉴얼 및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여 왔음.
- 2009년에도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일자리 나누기, 직무재설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사례 홍보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홍보리플렛을 9만부 제작·배포하여, 당초목표(1.5만부)를 초과달성(600.0%)한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기업(6,610명)과 지방관서(7,012개소, 8,154명)에 주40시간제 도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초목표(교육인원 4,000명)를 초과달성(165.3%)한 것으로 나타남. 일-가정양립형 단시간근로모형 시범사업으로서 3개 사업장(청주의료원, 인천한림병원, 볼빅)에 단시간근로모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당초목표(시범사업 실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⁵⁾

4) 동 시스템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체계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 방법, 권리침해 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제도임.
5) 청주의료원 사례는 단시간근로 우수모델로 사업장 홍보 실시(단시간 세미나)

- 예산은 당초 4.7억원 중 95.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육아 휴직 활성화	직장복귀 후 고용유지율(%) (6월후 고용유지 근로자수/ 육아휴직근로자수×100)	70.5	62.5	88.7	1,618	1,481	91.5
근로 형태 유연화	· 교육실시(명) · 홍보자료 제작배포(천부)	· 4,000 · 15,000	· 6,610 · 90,000	· 165.3 · 600.0	4.7	4.5	95.7
	·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모형시 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3개 사업장	100.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①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7인) 및 민간전문가(7인)를 위원으로 구성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08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준 및 심사단가 등에 대한 고시제정, 인증기업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추진하였음.
- 2009년에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준 고시 개정 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결과를 심의하는 등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우수기업에 대한 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을 위해 2007년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과 인증마크를 개발하였음. 2008년에는 1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2009년에는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20개의 인증 기업을 선정하여, 당초목표(17기업 인증)를 초과달성(124.0%)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 가족친화인증제 홈페이지 구축(9~12월) 등을 추진하였음.
- 예산 0.7억원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8〉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운영	-				비예산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수	17	20	124.0	0.7	0.7	100.0

②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친화 지수 측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지수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⁶⁾ 도입 확산 정도를 측정하여 가족친화기업경영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06년에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고, 매년 기업, 대학, 정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였음 (정부·기업 가족친화지수 2007년 41점, 2008년 44점).
- 2009년에는 정부,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제도 관련 48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⁷⁾하여 가족친화지수를

6) 가족친화제도에는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 친화문화조성 등이 포함됨.

측정한 결과 49.2점으로, 당초목표(가족친화지수 45점)를 초과달성(109.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4억원 전액 집행).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가족친화 교육컨텐츠 개발, 가족친화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직장내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음.
- 2009년에 가족친화경영 온라인직장교육(20차시 900명), 기업CEO 대상 가족친화경영교육(300명), 기업CEO 및 임직원대상 전국순회직장교육(20회, 1,050명) 등을 통해 당초목표(가족친화방문교육 100회 1,800명)를 초과달성(108.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5억원 전액 집행).

〈표 2-19〉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친화 지수 측정	가족친화지수 측정점수	45점	49.2점	109.3	0.4	0.4	100.0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방문교육 실시 횟수	100회 (1,800명)	1,950명	108.3	0.5	0.5	100.0

③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노동부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간호휴직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2009년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법제화 완료)을 위해 활용실태 파악,

7) 유효응답수 1,202개소 확보(2008년 대비 28.3% 응답수 추가 확보)

제도 설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가족돌봄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1개월 ~1년 이내의 무급가족간호휴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100.0%)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⁸⁾

〈표 2-20〉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간호휴직 제도 도입	가족간호휴직 제도 설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설계 여부 등	제도설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0.0	비예산		

④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동부는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을 신규 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⁹⁾을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복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7년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를 그만 둔지 5년 이내 취업」 요건을 삭제¹⁰⁾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한시제도(2007~2009)인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연장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2010.2월 중 시행 예정)하였음.
- 그러나 장려금은 당초목표 인원의 20.0%에게만 지원되어 당초목표의

8) 회의에서 노동계는 가족휴직제 범정의무화, 경영계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제도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하였음. 이에 담당부처에서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주력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9) 장려금은 1인 기준으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급함.

1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008.4.30)

2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예산도 100억원 중 20.0%만 집행).

- 주된 이유로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사업장에서의 신규채용 부진과 여성취업자 수의 지속 감소(전년대비 2009.1~10월 간 100천명 감소) 등 여성고용 여건 취약을 제시하였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16주 이상) 중인 계약직 및 파견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종료 즉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¹¹⁾을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에 기여코자 하였음.
- 동 제도는 2006.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임신 34주이상의 계약직 및 파견직 여성근로자를 유기계약으로 계속 고용 시 6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7년에는 지원 대상을 당초 임신 34주에서 16주 이상자로 확대 하였으며, 2008년에는 무기계약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지원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음(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2008.4.30).
- 2009년에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임신 16주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완화(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0.2월 중 시행 예정)하고, 홍보책자 배포, 라디오·잡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함(예산은 총 300억원 중 74.0%만 집행).
- 그 결과 139개 사업장 222명(당초목표 117명)에 총 589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98.6%로 나타나 당초목표 (80.0%)를 초과달성(123.3%)한 것으로 나타남.

□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노동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복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한 단기 적응훈련 등을 추진하여 왔음.

11) 지원금으로 유기계약 시, 6월간 월 4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 시, 6월간 월 60만원을 지원 함.

- 2009년에는 단기적응훈련사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 규모 확대 및 강화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주부단기적응훈련으로 4,241명이 수료함에 따라 당초목표(목표 인원 3,000명 대비 80% 수료)를 초과달성(176.8%)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당초 4억원을 초과집행(4.7억원으로 117.5%)
 -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훈련사업과 대상이 중복되어 2009년에 종결
- 고용지원센터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 노동부는 육아문제 등으로 구직활동에 애로가 많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¹²⁾ 취업정보와 보육정보 동시 제공을 위한 전담 상담원지정제도 도입 등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복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08년 고용지원센터 내에 수유시설, 놀이시설을 설치(15개소)하고, 여성전문상담원 지정제도를 운영하였음.
 - 2009년에도 고용지원센터 내 수유시설과 놀이시설을 27개소 추가 설치 (총 42개소)하고, 여성전문상담원 65명을 운영하여, 당초목표(상담원 운영)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표 2-21〉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원목표달성률 (지원인원수/목표인원수)	80.0	20.0	25.0	100	20	2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6개월 후 고용유지율 (6월후고용유지자수/ 계속고용근로자수×100)	80.0	98.6	123.3	300	222	74.0
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목표달성률 (지원인원수/목표인원수)	80.0	141.4	176.8	4	4.7	117.5
여성전담상담원제도 운영	상담원제도 운영	운영 여부	65명	100.0	비예산		

12) 취업인프라 강화에는 고용지원센터 내 수유시설, 놀이시설 설치 확대 등이 해당됨.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과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이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및 양성평등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발행·보급하고, 차년도 사용될 일부 교과서(도덕, 사회, 기술·가정 등) 내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함으로써,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쓰도록 조치하였음.
- 2009년도에는 도덕과, 사회과,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당초목표(교과서 수정·보완)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표 2-22〉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교과서 수정·보완	도덕과, 사회과, 실과 (기술·가정) 교과서 수정·보완	좌동	100.0	비예산		

②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부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남녀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에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은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6,884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당초목표(6,110명)를 초과달성(112.7%)한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중 공무원(4,968명)의 비율이 72.5%로, 당초목표(61.3%)를 초과달성(118.3%)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이수자들의 교육만족도가 90점으로, 당초목표(89점)를 초과달성(101.1%)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교육운영자 및 종사자, 사회교육강사(337명), 교도소, 군경 등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국제결혼사전교육 전문가 양성(37명), 16시·도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총괄 관리 등을 추진하였음.
 - 일반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35개 과목) 및 교육(35,214명) 실시, 원격교육연수원 구축(진도율 98.0%) 등을 추진하였음.

〈표 2-23〉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교육 확대	교육수료자 수	6,110명	6,844명	112.7	43.9	43.9	100.0
	공무원교육비율 (공무원+교육이수자×100)	61.3% (3,750명)	72.5% (4,968명)	118.3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89점	90점	101.1			

③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관련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족 상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가족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2009년도에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여 100,260명 대상 가족 교육, 80,044명 대상 가족상담¹³⁾을 실시하여(2009.10월 기준), 당초 목표(교육 15만명, 상담 10만명)를 초과달성(147%, 110%)한 것으로 나타남. 78개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사업도 실시하였음.¹⁴⁾

-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되지 않음.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가족 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 97개소(국비지원 54개소)로 확충 하여 센터이용자수가 70만명으로 당초목표(95개소, 48만명)를 초과달성 (102.1%, 145.8%)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14억원 전액 집행).

〈표 2-24〉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교육이용자	15만명	22만명	147	-		
	가족상담이용자	10만명	11만명	110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센터 개소수	95개소	97개소	102.1	114	114	100.0
	센터 이용자 수	48만명	70만명	145.8			

④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을 이용한 복합 문화 공간 마련, 국민 여가를 위한 다목적 캠핑장(오토캠핑장 등) 확장 및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등 체험위주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여행 및 여가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13) 주요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예비부부교육·상담, 부부교육·상담, 부모교육·상담, 이혼전·후 상담, 군가족교육상담 등을 포함함.

14) 지방센터 : 65개소(2007년) → 82개소(2008년) → 95개소(2009년)

- 2006년부터 매년 종교시설(템플스테이, 수도원 체험 등), 국민여가 캠핑장 등을 확충하는 등 가족단위 여가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음.
- 2009년도 추진결과 대체적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70.2억원 전액 집행).
 - 100개 사찰에 대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을 통해 총 136,100명이 참여하여, 당초목표(95개 사찰, 150천명 참가)를 각각 90.7%, 110.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템플스테이 참여인원이 당초 목표보다 적은 이유로 담당부처에서는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였음.
 - 서원·향교(제주, 경주 등 5개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에 총 11,886명 참가(전통예절강좌 목표인원 15,000명의 79.2%),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에 5,400명 참가(목표인원의 415.4%), 총 25회 문화축제 개최(목표횟수 20회의 125.0%) 등으로 나타남.
 - 종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써 수도원 체험(3회, 375명), 교회·성당 활용 문화행사(21개 프로그램, 22,556명)를 개최하였음.
 - 12개소의 다목적캠핑장 조성 및 4개소의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정비 등을 통해 당초목표(캠핑장 13개소, 이용인원 75,696명)를 초과 달성(각각 123.1%, 300.1%)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을 확충 지원하여 총 38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당초목표(지원개소 35개소)를 초과달성(108.6%)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5〉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사찰수	95개	100개	90.7	185	185	100.0
	참가인원	150,000명	136,100명	110.2			
	참여인원 (전통예절강좌, 선비문화체험, 문화축제 횟수)	15,000명 1,300명 20회	11,886명 5,400명 25회	79.2 415.4 125.0	13.7	13.7	100.0
	캠핑장 조성 개소 이용인원	13개소 75,696명	16개소 227,176명	123.1 300.1	140	140	100.0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개소수	35개소	38개소	108.6	31.5	31.5	100.0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족프로그램 참여자 수	500명	1,831명	366.2	1.2	1.2	100.0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채로운 가족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실시 등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갈등의 적극적 예방, 가족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에는 패밀리데이¹⁵⁾, 이웃사촌 한가족 선포식(5.15) 등 가족 관계증진프로그램에 1,831명이 참여하여 당초목표(500명)를 초과달성(366.2%)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 가족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민간 단체 공모사업(7개 기관) 및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2~5)를 실시하였음.

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보건복지가족부는 언론매체,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유형과 연령별·유형별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고려하여 소통과 돌봄의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6년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가족친화형마을 시범사업(3개 마을) 추진,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개발·측정 등을 추진하였음.
- 2008년에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2009년에는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2개 마을 조성)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7억원 전액

15)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정시퇴근, 학교당일 야간학습 중지 등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패밀리데이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프로그램 실시, 롯데마트(65개점) 가족상품 할인, 가족무료공연, SBS 8시 뉴스 5회 연속 기획보도 등을 추진하였음.

집행).

- 다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16),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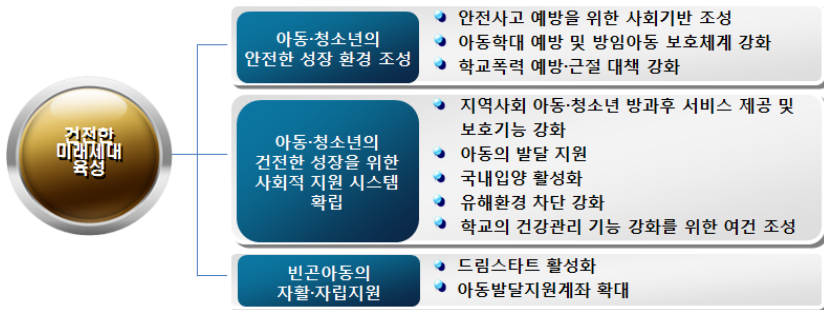
〈표 2-26〉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지원마을 수	2개 마을	0	0.0	0.7	0.7	10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은 i)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ii)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iii)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구성



16) 18개 시·군·구 대상 표본조사 실시,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지역환경 여건 실태파악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교통사고나 추락, 익사, 가정내 안전사고 중심으로 종합적인 아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03년 5월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2008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2차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조직 통합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9년으로 이월되었음.
- 2009년에는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설정 및 대책을 아동·청소년정책5개년기본계획에 포함·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 10만명당 아동안전사망자수가 5.96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4%)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그러나 아동청소년기본법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안전지킴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범죄다발지역, 아동운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민·관협력 지역단위의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2009년 신규사업).
- 2009년에는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학로나 놀이터 주변 등을 순찰하도록 하여 범인 검거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2억원 전액 집행).
- 특히,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으로 23,140건의 범인 검거 지원과 범죄예방 및 보호 활동 실시(범인검거 지원 10건,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등 범죄예방 및 보호 23,130건)로 목표(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실적 20,000건 이상)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다양한 정부·민간기관과 아동안전 업무 협조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어린이 안전통계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아동안전 사고를 감소 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E-Book, 온라인 동영상 강좌 개발, 가정안전수첩 및 아동안전꾸러미 제작·배포(2,800세트), 어린이집 부모 대상 안전교육(서울, 부산, 인천 3개 지역 28호 1,856명), 어린이 안전 홍보 DVD “뽕뽕이와 안전안전” 제작·배포(15천개) 등을 추진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사업 만족도가 91.8점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0.6%)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66억원 전액 집행).
 - 이 외에 인터넷 어린이 안전학교 사이트에 구축된 15개 어린이 안전 교실에서 사이버 교육 실시, 수도권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표지판 설치(16개소), OECD 등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14개 지표 영역, 25개 세부지표)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어린이안전종합 대책마련	아동10만명당 안전사고사망자수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14세이하인구×10만명)	6.2명	5.96명	104.0	비예산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실적 (범인검거 지원, 범죄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 건수)	20,000건 이상	23,140건	115.7	32	32	100.0
아동안전사고 예방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사업만족도	83점	91.8점	110.6	2.66	2.66	100.0

②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홍보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룹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학대행위자 특성별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신고 의무자 및 일반인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개설·운영(11월말기준 4,350명 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확대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아동 보호건수가 5,685건으로 당초목표의 83.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2억원 전액 집행).

□ 통합적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 여성부는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추진체계 강화,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범국민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비라기아동센터 6개소 확충, 아동 성폭력전담센터 및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지원센터 수혜자가 총 11,522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 (103.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5억원 전액 집행).
 - 이 외에 관계부처·당정 합동으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지표를 개발하였음.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 초등학생, 실종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홍보, 실종아동 실태조사·연구, 실종가족을 지원하고 실종아동 조기

발견 신속대처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이동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동 구역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경찰청 실종신고DB와 실종아동 전문기관 무연고실종아동DB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실종아동 조기발견 저해요인 및 장기실종아동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어린이재단 간 MOU 체결을 통한 아동 실종예방 홍보물 및 장기실종아동 사진 방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이를 위해 예산 13.7억원 전액 집행).
- 성과지표17)인 아동 대상 실종예방교육 만족도는 98.5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23.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이수자수 역시 99.7천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69.0%)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8〉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아동의 보호건수(산출통계)	6,796건	5,685건	83.7	5.2	5.2	100.0
아동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자원서비스 내실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수의 합	11,153명	11,522명	103.3	95	95	100.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실종예방교육 만족도 · 실종예방교육 이수자수	· 80점 · 59천명	· 98.5점 · 99.7천명	· 123.1 · 169.0	13.7	13.7	100.0

③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학교폭력피해 신고 및 상담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대학·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17) 당초 성과지표는 실종아동 신상카드 DB 구축률이었으나, 실종아동 수를 확인할 수 없어 성과지표가 변경됨. 또한 실종·유괴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도록 아동복지법이 2008년 개정되고 2009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과지표로 하였음.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 및 정책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단체 지원, 각종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근절사업 추진, 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학교부적응 지표, 학교폭력신고가이드라인, 학교폭력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보급,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은 317억원으로 41.2% 초과집행).
- 성과목표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한 학교 비율은 68.4%로 당초목표의 91.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9〉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 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4시간 이상 실시학교 비율 = 4시간이상 실시 학교수/총학교수	75%	68.4%	91.2	224.5	317	141.2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방과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 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음.

- 방과후아카데미(178개소)와 청소년공부방(355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17천여명이 수혜 받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초과달성(113.3%)하였음 (예산 324억원의 99.7% 집행).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활 등 맞춤형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CYS-Net사업지역을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81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CYS-Net을 통해 지원한 청소년이 100,113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1.2%)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27억원 전액집행).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중 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의 집, 학교, 친구 등 주변 환경에 찾아가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지, 필요기관으로 연계서비스 제공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의 상황과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수혜 청소년이 17,439명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39.5%)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5억원 전액 집행).

〈표 2-3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방과후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수혜자수	15,000명	17,000명	113.3	324	323	99.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CYS-Net 직접지원 청소년수	90,000명	100,113명	111.2	127	127	1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수혜 청소년수	12,500	17,439	139.5	55	55	100.0

② 아동의 발달 지원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2~6세 아동에게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 지급(대여),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관계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25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급을 통해 초기 인지발달을 지원하여 출신 배경 및 성장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총 219,112명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의 88.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예산 583억원 중 85.9% 집행).

□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12세 경도이상 비만 아동에게 운동처방·운동 지도·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40천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기의 비만이 성인기 노동력 감소 등으로 연결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85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아동건강관리 사업 개선계획을 수립(2009.6.)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아동건강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2009.12.)하였음.
-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여건·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394개 사업 중 하나로 성과목표와 예산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정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관련 전문적 개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2천원~20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정서 및 심리적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문제해결을 통해 장애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108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108%)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여건·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394개 사업 중 하나로 성과목표와 예산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 아동체험발달 서비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7~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초기 발달에 경험이 결여되기 쉬운 아동에게 양질의 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100천원~20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인지발달을 견인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등 성장환경으로 인한 아동발달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108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108%)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여건·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394개 사업 중 하나로 성과목표와 예산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표 2-31〉 아동의 발달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아동인지사업	서비스 이용자수	248,085명	219,112명	88.3	583	501	85.9
아동건강발달 서비스	아동건강관리 사업 개선계획 수립여부	계획수립	수립	100.0	분리불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시·군·구 수	100개	108개	108.0	분리불가		
아동체험발달 서비스	시행 시·군·구 수	100개	108개	108.0	분리불가		

③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수수료,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국내입양비율이 53.9%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7.8%)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24억원 전액 집행).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절차를 개선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입양인 뿌리찾기 원스톱서비스 제공, 입양업무를 통합관리 하는 중앙입양정보원 설립,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입양 숙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2010.1.18일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나 학교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밀입양이나 혈액형·성별을 중시하는 국내입양 문화를 개선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입양부모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입양교육, 입양 반편견 교육, 입양가족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입양의날 및 입양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음(예산 1.7억원 전액집행).
- 그 결과 국내입양비율이 53.9%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7.8%)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2〉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국내입양비용 (국내입양/전체입양아동)×100	50%	53.9%	107.8	124	124	100.0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법개정 절차 진행 정도	법령 개정	TF팀구성,공청회개최 등	100.0	비예산		
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국내입양비용	50%	53.9%	107.8	1.7	1.7	100.0

4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모니터링 및 예방제도 개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및 사회적 관리강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단위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은 730건으로 당초목표의 73.3%로 나타남. 이 외에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홍보 등 유해 약물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음 (예산 7억원 전액 집행).
- 최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직접 신고 또는 고발보다 시정·권고 중심으로 활동을 함에 따라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 성과목표 달성률이 다소 저조

〈표 2-33〉 유해환경 차단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	996	730	73.3	7	7	100.0

5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보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건교육 시설·설비 확충으로 학교보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기능중심의 체계적·지속적인 학교보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충족 학교수가 87%로 나타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2.4%)하였음(비예산사업).
 - 이 외에 학교 보건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로 2009. 3. 1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보건교사 교수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과정 개설·운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신체 발달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등 기존 보건실 중심의 소극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학교 전체가 참여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모든 학교에서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과 약물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시·도교육청 자체예산사업).
 - 이 외에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였음.

□ 흡연 등 건강 유해 행태 감소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연령대별 및 수준별 약물남용예방 표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예방관련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 사전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정규수업이나 재량시간 등을 이용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이 외에 학교별로 매년 “흡연·음주·흡입제 등 약물 사용여부” 조사 후 학교장 책임 하에 보건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교원 87,700명의 연수를 통해 약물남용 예방교육 및 지도능력 배양, 약물 오·남용예방 표준프로그램 보급·운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 외에 특별교육, 유인물 배부,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도자 교육, 금연침 시술,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시범학교운영, 협의체 운영 등으로 학생 약물남용 예방사업 전개, 복지부와 공동으로 “학교 흡연 예방교육” 등의 지원사업 전개,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건강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인 학생건강정보센터 구축·운영

□ 학교흡연예방교육

- 보건복지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3,283개교에 학교흡연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금연교육이나 금연캠프, 글짓기·포스터 등 흡연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제작하여 청소년 흡연율이 12.8%로 나타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34.4%)하였음(예산 58억원 중 98.3% 집행).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변화되고 있는 학생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건소·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지역특성(대도시, 농·산어촌 등) 및 보건인프라, 예산형편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 상담, 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지역보건소 등 전문기관과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흡연, 음주, 척추측만증 검진, 결핵관리, 예방접종, 응급처치, 비만, 정신건강 관리, 구강보건실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건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당초 목표인 전체 보건소 대비 보건사업 연계 추진학교 비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34〉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학교보건교육여건개선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충족 학교수	85%	87%	102.4	비예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비만프로그램 운영 학교수	100%	100%	100.0	시·도 교육청 자체예산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감소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수	100%	100%	100.0	비예산		
청소년 흡연을	청소년흡연실태조사를 근거로한 흡연을	17.2	12.8	134.4	58	57	98.3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관리 강화	전체 보건소 대비 보건사업 연계 추진학교 비율	100%	100%	100.0	비예산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①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0~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 단절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사업실시 지역 및 서비스 수혜 아동 확대, 사업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등을 이루어 수혜대상자의 만족도가 88.5%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5억원 전액 집행).

〈표 2-3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86%	88.5%	102.9	75	75	100.0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시 국가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통장개설 아동수가 36,494명, 적립액이 447억원으로 당초 목표(계좌발급 아동수 33,000명)를 초과달성(111%)한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후원자를 개발하고, 아동의 자립심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도 실시하였음(예산 66억원 전액 집행).

〈표 2-36〉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발급아동수	33,000명	36,494명	110.6	66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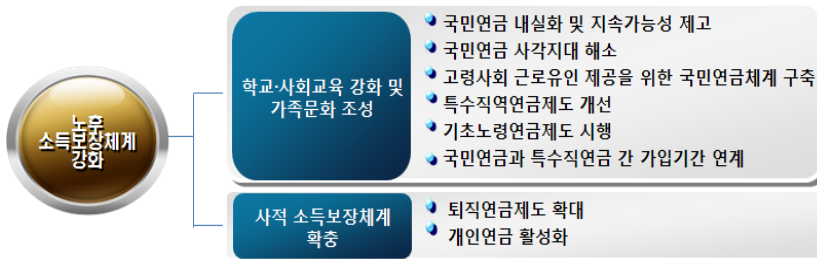
제2절 고령사회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기본목표는 노인들이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고령사회분야는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은 i)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ii)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의 2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①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영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금운용체계의 한계(정부 및 가입자가 기금운용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자율성·전문성 부족 및 수익제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¹⁸⁾

- 기금운용위원회(금융투자전문가 7명)를 기금운용공사 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며, 자금운용 전담기관인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설립함.
-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8.8.6), 상임위 상정(2008.11.12),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6회)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법안소위 1회 이상 심사)를 달성함(비예산사업).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간의 합리적인 역할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2007년 사학연금재정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였음. 2008년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국민연금 운영개선 방향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2009년 12월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선방안 2건(재정평가방안, 수행체계)을 검토하여 당초목표(2건)를 달성함(비예산사업).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개선

-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국민연금이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적정화 등 제도 합리화를 모색함.
- 2007년 국민연금법 주요 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됨에 따라 2008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18)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성장기(2043년 2,465조까지 성장)에 최대한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수익률 1%p 상승시 보험료율 2%p 절감 또는 기금 소진 9년 연장(2060년에서 2069년으로 연장).

제출하였음(11~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 2009년도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2009.2 시행), 국민연금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격 논의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당초목표(2건 이상 재정계산 제도개선사항 검토)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장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현실화하고자 하였음.
- 지난 1995년 이후 조정하지 않은 국민연금 기준소득⁹⁾을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2009년에는 12월 3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것(동 사업 완료)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 : 2010.1.1)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2009. 9 ~ 2009.12
- 국무회의 심의 완료 : 2009.12.22
- 공포 : 2009.12.30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전략적·체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2007년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민이 14.4%, 불신하는 국민이 50.5%로 불신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에 2008년부터 국민연금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 등 대책이 시행됨.
- 2009년에도 TV·라디오 홍보 1,357회, 신문 및 전문지 광고 68회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캠페인 실시, 인터넷 홍보활동 2,513건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 홍보활동 추진, 보도자료 배포, 간담회

19) 월소득 상한 360만원~하한 22만원

등 461회에 걸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홍보효과는 72.6점으로 당초목표(70점)를 초과달성(103.7%)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37〉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금운영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국회 법안소위 1회 이상 심사	법안소위 1회 이상 심사	법안소위 6회 심사	100.0	비예산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재정계산 제도개선 사항 검토	2건	2건	100.0	비예산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련 제도개선	자격, 징수, 급여 분야 법령지침 제도개선 건수	20건	20건	100.0	비예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09.12.31 법령통과	100.0	비예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홍보효과도	70점	72.6점	103.7	비예산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연계를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를 축소를 추진하였음.
 - 2009년도에는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노후설계상담(CSA)을 실시하기 위하여 45세 이상 납부예외자 중 가입이력 1년 이상자 등 468천명에게 노후설계상담 안내문을 발송하고, 53천명(10월 현재)에게 상담을 실시함. 이들 중 19천명이 납부재개를 위한 소득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노후설계상담 달성률이 37.3%, 전환 달성률이 51.3%로 부진한 편임. 담당자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음(비예산사업).

〈표 2-3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 상담율(상담실적/상담대상자) · 전환율(소득신고자/상담대상)	30% 8%	11.2% 4.1%	37.3 51.3	비예산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제도개선 준비	제도 개선 준비	제도개선 준비	100.0	비예산
	사후정산제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률	가입자 증가	2008년 161,397명 2009.10월 170,941명	100.0	비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제도개선	제도 개선	개선(안)마련 및 법령 국회 상정	100.0	비예산
	실업급여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 제도개선 준비	제도 개선 준비	제도개선 준비	100.0	비예산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후정산제 확대를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특례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 특례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하였음.
- 2009년도에는 기존 사업장 18,376소에서 170,941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가입”을 2010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는 등 당초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 기초생활수급 직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신청시 적용제외허용)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8.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2009.4.27) 등을 추진하였음(계류 중). 실업급여수급자 85만명에 대한 당연적용(신청시 납부예외 허용) 및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였음.

- 이를 통해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③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근로를 유인하고자, 기 도입한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를 모니터링하고자, 노령연금 제도를 재설계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 및 감액결정 요인인 소득 있는 업무기준 조정,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 개선,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2009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연기연금 신청자 현황 및 신청률 추이 모니터링(143명)
 -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현황 및 추이 분석²⁰⁾
 -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재직자노령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회 개최, 조기노령연금 신청요건인 소득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소득 있는 업무 기준 및 조기 노령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2회 개최 등
 - 그에 따라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9〉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1회	2회	200.0	비예산		

20)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2006.3월 5.9%에서 2009.6월 현재 8.2%로 증가함.

4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공무원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행정안전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지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부담 및 급여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 2009년도에는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국회 본회의 통과(2009.12.30) 및 공포·시행(2010.1.1)
 - 공무원연금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0.1.1)

□ 사학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와 제도의 선진화 추구하고자, 사학연금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2009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2009년 12월 중 개정됨에 따라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2009. 1. 8)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009. 1. 8)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009. 3.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2009. 12월)
 - 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09.11.28)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퇴역군인의 적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에는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6차례 군인연금제도 실무위원회(2008)에 이어 6회에 걸쳐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술적·실무적 검토 확인을 위한 제1차 군인연금제도 소위원회회를 개최하였음.
- 관계기관(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및 민간전문가에 군인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추진하였음.
- 군인연금제도 개선관련 홍보 컨설팅, 브로셔/멀티PT 제작·배포, 홍보 계획 수립·시행 등을 추진하였음.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연금부채 산정과 적정규모의 책임준비금 확보를 통하여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고 부담급여의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2008년에는 책임준비금 계산을 위한 규정 제정을 검토하였음.
-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실질적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도에는 사학연금법 개정(2001년, 책임준비금 적립 신설 등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책임준비금 계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정부연금보험준칙』을 마련 중임(비예산사업).

〈표 2-40〉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공무원연금 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추진 진척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안 국회제출	100	비예산		
		하위법령 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0			
사학연금	제도개선	사학연금법 개정	사학연금법 개정	100.0	비예산		
군인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개선추진 진척도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개선안 마련	100.0	비예산		
사학연금 개선	연금부채 계산 여부	연금부채 계산	-	0	비예산		

5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²¹⁾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노인의 공적노후소득보장율이 33.3%에 불과하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2007년 4월에 제정·공포하고 2008년 1월에 시행함.
-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09년 기준 88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등을 통해 수급자가 361만명에 도달하여, 당초목표(338만명)를 초과달성(106.8%)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전체노인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2009.1)하여 수급자가 2008년 288만명에서 2009년 361만명으로 증가
-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수급자 기준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시(2009.10)
-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도입(2009.9)하여, 65세 생일 도래 2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결정심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2개월) 동안의 지원 공백기를 축소하였음.
- 예산은 총 34,324억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1〉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338만명	361만명	106.8	34,324	34,324	100.0

21)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자산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함.

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고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연계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당초목표를 달성(동 사업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2009.2.6공포, 8.7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완료(2009.8.7시행)
 - 대국민 집중 홍보(법 공포 및 시행 전·후 집중 실시)
 - 연계급여 공동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각 연금관리기관별 자체 예산 확보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부 시스템 개발(2009.4~7)

〈표 2-42〉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연계제도	연계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	연계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	연계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	100	비예산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①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설계가 노사간 합의에 맡겨져 있음에 따라, 제도의 조기 도입·정착을 위하여 노사 대상 교육과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 2005년부터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 하였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45,871개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9.1%에 해당함(2008.11월 기준).

- 2009년에도 퇴직연금 도입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노사대상 무료교육을 35회(2,519명) 실시하여, 당초목표(30회 1,500명)를 초과달성(168%)한 것으로 나타남.
 - 1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절차·설계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당초목표(100개 사업장)를 초과달성(105%)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4.7억원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DC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축소폐지, DB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부담금의 손비인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됨.
- 2009년에 퇴직연금 세제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당초목표였던 세법령 개정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10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부여가 불가능하였음.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 노동부는 세제 인센티브 확충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 동 사업은 2008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완료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영모델을 선도·제시하고자 하였음.

- 2006년 말 공공기관 451개소 중 21개소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8월 33개소, 2008년 말 77개소가 각각 도입하였음.
- 2007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기업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계획을 마련·배포하였음.
- 2008년에는 퇴직연금 수수료, 소급적용 등의 근거를 2009년도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독려함.
- 2009년도에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87개소(2009.11)로 2008.12월 77개소에 비해 13%가 증가하였으나, 당초 목표(20% 증가)의 65%수준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공공부문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별다른 인센티브 등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 노동부는 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동 사업은 2008년에 근로장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완료(비예산사업)

〈표 2-43〉 퇴직연금제도 확대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퇴직연금 정착지원	교육수료 인원수	1,500명 이상	2,519	168.0	4.7	4.7	100.0
퇴직연금 정착지원	컨설팅지원 사업장수	100개소 이상	105	105.0			
퇴직연금 정착지원	세제혜택 개선 위한 관련 세법령 개정	세법령 개정	미개정	0.0	비예산		
복수·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복수·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법개정	08.11.28. 완료	100.0	비예산		
퇴직연금 정착지원	공공부문 도입사업장 증가율	20% 증가	13.0	65.0	비예산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제도마련	08.11.28. 완료	100.0	비예산		
퇴직연금 정착지원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 마련	재정부 협조공문, 회의개최	제도 적용	100.0	비예산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노동부는 금융기관 및 사업장의 도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2006.6.9),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② 개인연금 활성화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연금 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음.
 - 개인연금은 1994년 최초 판매이후 비교적 빠르게 발전 중이며,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운용됨(조세특례제한법)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등과 같은 연금소득 세제 개편은 재정여건, 연금소득세 납부추이 등을 보아가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감안함에 따라 2009년에 개선방안을 입안하지 않음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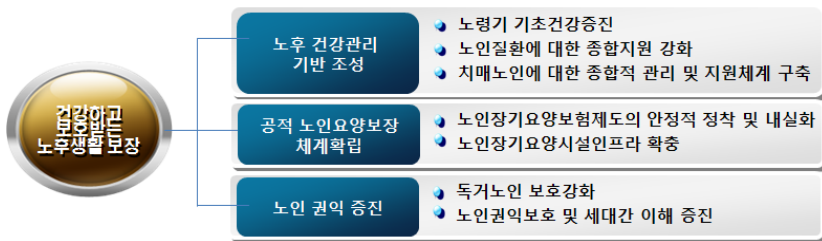
〈표 2-44〉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개인연금세제 정비추진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입안 여부	100.0	0.0	0.0	비예산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i)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ii)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iii) 노인 권익 증진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①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노인병을 예방하고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층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게이트볼, 정구, 생활체조 등 16개 종목을 포함한 전국규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2009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에 배치된 전담지도자 350명이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함으로써,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3.6%)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에서 개최한 ‘2009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10,000여명이 참가하여, 당초목표(1회 개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보건복지부가죽부는 국민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 암검진 수검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5대 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의 검진 수검률²²⁾ 향상을 위하여 홍보 강화, 본인부담금 추가경감, 검진기관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당초목표(암검진수검률 27%, 17,265천건 중 4,630천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
 - 암검진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2010.1), 암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이 10%에서 5%(2009.12)로 각각 감소함.
 -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아의 경우 2008년 2,200명에서 2009년 3,530명으로, 성인의 경우 46,000명에서 49,938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음.
 - 암검진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함.
 - 암조기검진 대상자를 2008년 450만건에서 2009년 463만건으로 확대
 - 암종별 암검진기관 지정(2008.3) 등으로 암검진기관 인프라를 3,127개소(2008.12)에서 3,477개소(2009.10)로 확대
 - 5대 암 검진비용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2010.1)
 - 암예방을 홍보하고 신속한 암정보를 제공함.
 - 지역암센터와 함께하는 암예방의 날(3.21) 행사 및 암검진 문자보내기, 민간단체 및 학회와 Pink Ribbon 등 공동 캠페인 추진 등
 - 암검진 TV광고, PPL 등 대중매체 홍보, 네이버 의료진 답변서비스

22) 수검율의 경우 2002년 6.9%, 2004년 12.0%, 2006년 24.5%인 것으로 나타남.

등 실시

- 민간단체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실시
- 예산은 총 15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년기 연령에 맞는 노인특화검진을 도입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60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검진의 60세 이상 연령에 치매 선별 검사를 도입하고자 함.
-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만70세와 74세에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개편하여 사업 목적을 기달성하였음(비예산사업임).

〈표 2-45〉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 배치율 [배치인원/정원×100]	95.0%	98.5%	103.6	76.5	76.5	100.0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회	1회	100.0	15.7	15.7	100.0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암검진수검자/암검진대상자×100	27.0%	27.0% ('09.11)	100.0	15.0	15.0	100.0
노령기초건강증진	생애전환 건강진단 사업 시행 및 치매 선별검사 도입	제도도입	제도도입	100.0	비예산		

②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보건복지부가죽부는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²³⁾ 만성질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보건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1차 예방서비스 제공과 고혈압·

23) 2007년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7가지(27.6%) 차지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4.2조원임.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 등 2차 예방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민간협력모형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강화하여, 당초목표(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등록 관리율 45%)를 초과달성(128%)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5.2억원 전액 집행).

- 대구시 등록관리 시범사업 2주년 성과평가 실시
 - 병원 640개(대상의 80%), 약국 1,070개(대상의 82%) 참가
 - 총 98,280명 환자 등록(65세 이상 91,132명, 외래 실인원 대비 82% 등록)
 - 보건교육 총 78,271명 이수, 투약 지속율 적정수준 80% 초과
- 광명시 등록관리 신규 추진(2009.7~)
 - 병원 75개(대상의 79%), 약국 106개(대상의 100%) 참여
 - 총 10,145명 환자 등록(65세 이상 8,621명, 추정환자대비 49%)
- 인천시 건강포인트 시범 실시(2009.3~)
 - 병원 212개(대상기관의 38%) 참여
 - 총 19,453명 환자 등록(65세 이상 8,159명, 추정환자대비 5.48%)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정립, 인력 및 시설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호스피스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발 및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안) 확정 추진, 수가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시범사업기관 공모·선정(8기관), 시범사업지침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시범사업 실시(2009.12~2011.5)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를 개발·적용하고자 하였음.
 -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한 환자분류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설정하고, 일부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병행하고자 하였음.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음.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 적용(2008.1.1 시행)으로 2007년 완료 과제가 됨.

□ 눈, 귀 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 질병관리본부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오는 노인성 눈·귀 질환, 낙상 후 골절(골다공증, 관절염) 등 다빈도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²⁴⁾
 - 구체적으로 예방, 조기진단, 관리대책 등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구성·운영, 감시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일상생활 가정내 만성질환관리 예방대책 가이드라인 개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노인관련 조사 강화, 저소득층 노인대상 지원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당초목표(건강정보생산수 40건)를 초과달성(49건, 123.0%)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눈, 귀, 코, 목, 골다공증 및 관절염 건강(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구성(2009.12.31)

24) 삶의 질 지수(EQ-5D: EuroQol Group 5-Dimension Self-Report Questionnaire score) 2005년 0.81 → 2010년 0.83 → 2015년 0.85.

-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각 4~5회 회의 개최
- 역학과관리·예방관리수칙·건강검진가이드라인·자주하는질문(FAQ)에 대한 내용 개발 및 최종보고서 관련 학회인증 완료(단, 관절염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은 학회 인증 예정)

〈표 2-46〉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시범사업	65세이상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대구지역) ¹⁾	45.0%	58.0%	128.0	55.2	55.2	100.0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정성평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시범사업	100.0	비예산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개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 적용('08.1.1 시행)	07년 완료 과제	-	-	-	-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건강정보 생산 수	40.0	49.0	123.0	1.2	1.2	100.0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의치보철 수혜자율 ²⁾	22.0%	22.0%	100.0	332.0	332.0	100.0

주: 1) 시범사업지역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수/시범사업지역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수×100

2) 의치보철 수혜자수/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 0.28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가죽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틀니)를 시술하고, 불소도포스케일링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2002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무료보급
 -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노인 23,500명에게 전부 의치(75만원/1악당), 부분의치(119만원/1악당)를 제공하였음.
 - 노인(저소득층 우선) 53,501명에게 불소도포스케일링(26천원)을 지원하였음.
 - 기 시술혜택 노인 7천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여 의치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도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노인으로 확대 하여 17,500명이 서비스를 받고,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량을 확대

하여 26,688명이 서비스를 받고, 의치사후관리는 7,000명이 신규로 서비스를 받아,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32억원 전액 집행).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노인이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20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192개 보건소로 확대(2008년 대비 60% 확대)하고,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치매조기검진을 266천건 (2009.10)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72.0%)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20억원 전액 집행).
 - 70세와 74세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시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관리수칙 마련 및 보급
 - 치매노인 실종 방지를 위해 인식표 6천개 보급
 - 치매관련 의료진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전문인력 1,431명이 수료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83천명(2008년 대비 132% 증가)으로 확대 하여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
 - 제2회 ‘치매극복의 날(9.21)’ 행사 및 공로자 시상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표 2-47〉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치매조기 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 실적 건수	155천건	266천건 ('09.10)	172.0	20	20	100.0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²⁵⁾를 시행하고, 2012년까지 수혜 대상자를 현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당초목표(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매월 누적장기요양 인정자수 합계/12, 23만명)를 초과달성(28.6만명, 124.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284억원 중 99.9% 집행).
 - 노인인구의 5.4%(28만명)가 혜택을 받고 있음(2008.12월 21만명, 4.3%).
 - “장기요양 대상자 및 시설인력의 중장기 추계” 연구용역 추진
 - 2010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TF운영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급자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 및 보험료 결정,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통한 건전한 재정구조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2010년도 소요재정 확정, 사업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당초목표(재정수지율 95%)를 달성(96%)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10년도 총 소요재정은 28,367억원(요양보험료수입 17,432억원)으로 확정
 - 국가의 운영지원예산으로 3,869억원 확보
 - 대상자 확대,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5%로 결정(2009.11)

25)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수준의 적정한 관리 및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함으로써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 12월 현재 저소득층 20,774명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
 - 비급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9.9.16~25까지 466개 입소 시설 대상 본인부담수준 적정성을 관리·감독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음.
 - 준비기(2008년)에는 평가지표 개발, 관련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도입기(2009년)에는 고시 제정 등 근거 규정 마련, 평가단 구성 및 교육, 장기요양기관 대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교육, 평가 실시, 평가 결과 인터넷 공표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정착기(2010년~)에는 수가 가감지급 등 평가결과에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009년에는 당초목표였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장기요양기관 평가고시 제정·공포, 장기요양계획 공고, 평가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결과 공표
 - 대상기관 1,668개소 중 1,227개소(73.7%)가 신청하고, 실제 1,194개소(97.3%) 평가 완료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이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 장기요양운영센터 요양직 직원을 활용하여 방문 조사, 등급 판정, 서비스 이용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정기적 상담 실시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여건 마련하고자 하였음.
 - 노인의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욕구를 함께 조사한 후 등급판정 결과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안내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수급자 만족도가 당초목표(만족도 70%)를 초과달성(만족도 80%)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 12월 말 현재, 시설급여 이용자 65천명, 재가급여 이용자 163천명, 등급외자 10만 명에 대한 정기적 상담 실시
 -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합체크리스트²⁶⁾ 개발하여 점검항목별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가족 등 보호자에게 통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 기능 상태에 따른 표준급여모형 개발

□ 등급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에게 복지·예방에서부터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간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 추진
 - 연계체계 구축으로 장기요양 등급 외 경증노인의 기능상태 개선
 - 등급판정을 마친 대상자 중 등급외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26) 통합체크리스트란 수급자 상담내용(비용, 만족도, 위생상태, 건강상태 등), 기관현황(이용자 현황, 시설 환경,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사표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와 연계시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 2009년 12월말 현재 지자체 연계 및 건보공단 자체 연계 등 총 19만 건이 연계되어, 당초목표(10만건)를 초과달성(190%)한 것으로 나타남 (비에산사업).
- 지자체 연계사업 결과 노인돌보미(16.4천건), 가사간병(19.9천건), 독거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11.9천건), 보건소 연계(53.6천건), 복지관 연계(17천 건) 등 총 150천건이 연계
- 건보공단 연계사업 결과 병원, 종교단체 등 총 37.6천건이 연계
- 치매 등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교육 상담 등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음(6개 센터 시범사업).

〈표 2-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보험인정자수(1~12월)누적장기요양인정자수의합계/12)	23만	28.6만	124.3	3,284	3,282	99.9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재정 수지율	95.0	96.0	100.0	비에산		
본인부담 수준 관리	본인부담 경감확대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개정완료	개정공포	100.0	비에산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	평가 실시	평가 실시	100.0	비에산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수급자 만족도	70.0	80.0	115.0	비에산		
등급외 판정자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	10만	19만	190.0	비에산		

②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재가)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8년에 노인요양시설 237개소를 확충하고, 요양보호사 총 18만명을

양성하였음.

- 2009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역간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 결과, 당초목표(병상수 75,722개)를 초과달성(88,266개, 116.6%)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0억원 중 99.8%를 집행하였으며, 노인치매병원 확충의 경우 20.6억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9〉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충족율[시설확충병상수/시설보호필요노인수×100]	75,722 개	88,266 개	116.6	2,000	1,996	99.8
	노인치매병원확충				20.6	20.6	100.0

2-3. 노인 권익 증진

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가죽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재가돌보미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사업을 시행하였음.
 - 노인돌보미 12천명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주거상태 점검, 정서지원 및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생활실태복지욕구 파악, 필요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과 통합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사례관리 독거노인 129,326명, 가사활동지원 이용 노인 14,573명(2009.11월 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13만명)를 초과달성

(107.7%)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34억원 전액 집행).

- 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시스템 연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제공자 효과성 조사 등 실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충족도 등 조사 실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우수운영사례 모델 보급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독거노인 생활 교육 교재,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및 교육 실시(3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의 온오프라인 연계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통합운영지역에서는 노인돌보미 1인당 독거노인 60여명 보호(기존에는 22명 보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노인)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 도모
- 폭염 대비 노인보호대책, 동절기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등 수립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외 안전필요 노인가구(노노가구 등)에 대한 대책 추진
- 독거노인의 소득, 주거, 건강, 영양, 여가·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생활지원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 추진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음.
- 1차 설치 대상지역(성남, 부여, 순창) 5,550가구, 2차 설치 대상지역(동해, 삼척, 서산, 문경, 김제, 광양) 9,000가구
-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 구조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

24시간×365일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 독거노인 u-Care시스템과 소방청 u-119서비스 실시간 구조 구급 연계

- 2009년에는 삼척, 동해, 서산, 김제, 광양, 문경의 9,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당초목표(10,000가구)의 90%수준으로 나타남(예산 7억원 전액 집행).
- 독거노인택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였음.

〈표 2-50〉 독거노인 보호 강화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수혜노인 수	13만명	14만명	107.7	8,341	9,990	119.8
독거노인 u-Care	관리자 기능에서 모니터링	1만가구	9천가구	90.0	7.0	7.0	100.0

②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서비스 및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인식 개선, 예방 등을 통해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2005년 노인학대예방사업 현황보고서 발간, 200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2007년 캠페인 실시, 2008년 상담서비스 제공 등 추진
- 2009년에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2,497건, 상담횟수 42,907건(2009.11 기준)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43.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4.6억원 전액 집행).
- 그 외 충북 북부와 전남 서부에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확충,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 당 2명씩 인력 증원, 2008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발간, 제4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

□ 노인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판매행위 등 노인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신고창구 다양화, 노인 대상 불법 부당판매에 대한 행위 제재 조치,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대상 교육 및 홍보를 하기로 함.
 - 2008년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였고, 관련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 보급함.
- 2009년도 법안 마련(4.20) 및 부처의견 조회결과(~4.30)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방문판매법 및 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중복규제 문제, 청약 철회기간 연장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 유지 등의 사유로 개정안을 반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정거래위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규정 개정 요청함에 따라 본 사업을 종결함(7.17)(비예산사업).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효행자, 이웃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장한아버이 등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 및 격려하고자 하였음.
 - 2006년 218명, 2007년 123명, 2008년 202명에게 상을 수여함.
- 2009년에는 총 181건(효행자 114건, 장한아버이 15건, 노인복지기여 단체 40건, 복지기여자 12건)을 포상하여, 당초목표(190건)의 95% 수준으로 나타남(예산 0.3억원 전액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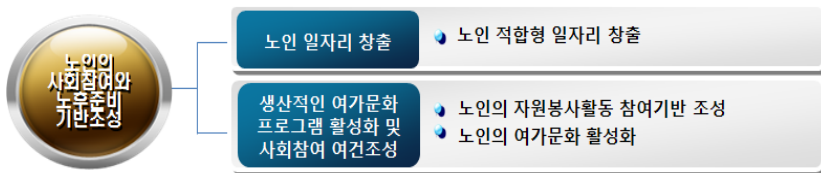
〈표 2-5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노인보호·상담 횟수	30,000건	42,907건	143.0	54.6	54.6	100.0
노인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여부	개정안 제출	부처합의 하에 중단	-	비예산		
새로운 효문화 정착 정책 추진	포상 수여자수	190명	181명	95.0	0.3	0.3	100.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은 i) 노인일자리 창출, ii)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구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속한 고령화 및 경제 위기에 따른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비하여 일 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05년 3.5만개, 2006년 8만개, 2007년 11만개, 2008년 11.7만개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2006년부터 공익형 일자리를 점차 축소하고, 복지형 및 시장형 일자리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음.
- 2008년 민간사업에서는 모델사업을 확산 보급하여, 창업 지원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 개발하게 함.
- 2009년에는 노인일자리 222천개(추경 36천개 포함)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196천개)를 초과달성(107.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602억원)

중 90.1% 집행).²⁷⁾

- 공공분야의 경우 목표치 174천개(추경 제외)의 106%(185천개)를 달성하였음.
- 맞춤 지원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7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이주여성, 노노케어 등)을 지원하였음.
- 민간분야의 경우 노인택배원, 노인주유원 등 적극적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노인생산물 공동브랜드 은모닝 런칭으로 목표치(22천개)의 112%(25천개)를 달성하였음.
- 관련부처와 기업의 공동협력에 의해 신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였음.
 - 국토해양부는 해안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리(지자체), 폐광지역 적합형 일자리(강원랜드), 보안문서 파쇄사업(모세시큐리티), 편의점 스태프(훼밀리마트), 음수대 관리원(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원(농어촌공사), 자연학습체험장 등 확대 또는 신규 개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확대(2008년 3개소에서 2009년 5개소), 시니어클럽 확충(2008년 66기관에서 2009.11월 82기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기능을 강화하였음.

〈표 2-52〉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수	196천개	210천개	107.0	1,602	1,443	90.1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27) 2010년 사업통합에 따라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원’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으로 통합 운영됨.

및 노인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 2007년 이래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 2009년에는 당초목표(조직화된 노인자원봉사자 수 10천명)를 달성(10,403명)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억원 전액 집행).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노인 특성에 맞는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33개)을 개발·보급
- 제3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조직화를 통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국 333개 사업단, 1만명 조직화)
- 노인리더 500명 양성 및 노인전문자원봉사관리자 교육 2회 실시 등

〈표 2-5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조직화된 노인 자원봉사자수	10천명	10,403명	100.0	7	7	100.0

②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2008년부터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308개소를 확충하여, 당초목표(1인당 체육시설 확보면적 2.47㎡)를 초과달성(102.8%, 2.54㎡)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611억원 중 99.9% 집행).
- 노인건강체육시설 6개소, 생활체육공원 18개소, 국민체육센터 52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7개소,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25개소 등의 건립을 지원하여,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확충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세대에 게임을 활용한 여가문화를 체험시키고, 세대차이 극복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 전시 관람비용 지원, 실버세대 게임정보화 교육 실시 및 게임문화 컨퍼런스 개최, 노인세대와 손자녀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1080 우린 한가족 게임 한마당’ 개최 등
- 문화바우처 수혜자는 2006년 151,096명, 2007년 21,102명, 2008년 17만명이었음.
- 2009년에 문화바우처 수혜인원은 238,976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9%)하였으며, 고령친화형 문화콘텐츠 개발관련 참가자 수도 총 332명으로 당초목표(150명)를 초과달성(221%)한 것으로 나타남(문화바우처 예산 40억원 및 실버세대여가문화 인식개선사업 예산 0.7억원 전액 집행).
-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09년도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불투명으로 관광 수요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보류됨(사업 삭제).

□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 행정안전부는 민간고령층정보화교육기관과 어르신IT봉사단을 활용하여 55세이상 고령층에게 정보화관련 기초·실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2000년부터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시, 2005년 어르신 IT봉사단을 전국 8개 지역에서 약 40개팀으로 운영 시작, 2006년 실버세대 게임문화 인식제고 사업 추진, 2007년 어르신정보화제전 개최, 2008년 배움나라(estudy.or.kr)에서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제공 등 추진
- 2009년에는 노인단체, 대학 등 50개 민간정보화교육기관 및 어르신IT봉사단을 통하여 고령층 17,689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13,600명)를 초과달성(130.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74억원 전액 집행).

〈표 2-54〉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1인당 체육시설 확보면적(m ²)	2.47	2.54	102.8	1,611	1,609	99.9
다양한 노인이가 프로그램-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200000	238976	119.0	40	40	100.0
다양한 노인이가 프로그램-실버세대 여가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참가자 수	150	332	221.0	0.7	0.7	100.0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정보화교육생수	13,600	17,689	130.0	4.74	4.74	100.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수	150	197	131.3	19	19	100.0
	수혜자 수	4,000	6,000	150.0			
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혜자 수	3,500	3,580	102.2	9.1	9.1	100.0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수	300	431	144.0	비예산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퇴직자·노인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기회를 마련하며, 노인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령인구의 여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06년 50개 문화원의 51개 실버문화프로그램에 1,723명 참가, 2007년 76개 문화원의 76개 프로그램에 2,500여명 참가, 2008년에 100개 문화원의 100개 프로그램에 4,000여명 참가
 - 2006년부터 노인관광인력 양성교육 지원, 노인시설 방문(2006년 143개소, 2007년 186개소, 2008년 164개소), 문화예술교육 실시(2006년 3,783명, 2007년 806명, 2008년 3,788명) 등 추진
- 2009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137개)의 137개 프로그램에 4,000여명 참가, ‘나이 없는 날’ 행사에 2,000여명(60개 문화원) 참여 등으로 프로그램 수는 당초 목표의 131.3%, 수혜자 수는 당초목표의 150.0%를 각각 달성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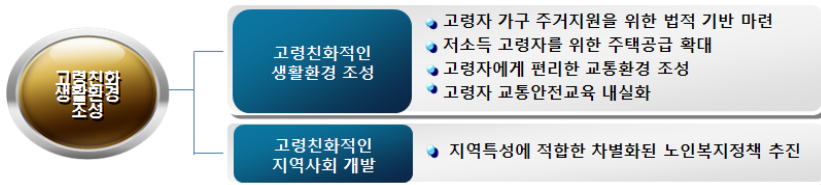
나타남(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예산 19억원 전액 집행).

- 167개 시설 3,580명을 대상으로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2.2%)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1억원 전액 집행).
- 노인관광교육프로그램으로서 관광안내원 교육을 431명이 수료하여, 당초목표의 144.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은 i)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ii)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2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국토해양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지원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음.²⁸⁾

- 2006년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계획 및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및 공청회 개최, 2007년 고령자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주거공간 규모(안) 및 안전기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08년에 ‘고령자 주거안정법’ 국회 제출 및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등을 추진

- 2009년에는 고령자주거안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55〉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	하위법령(안) 마련	100.0	100.0	100.0	비예산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고령자가구가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고령친화적 설계가 고려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음.
 - 시범사업(2005~2007)의 일환으로 2005년 855세대, 2006년 575세대, 2007년 1,100세대에 대해 사업 승인
 - 고령자주거안정법 및 하위법령 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2008년에 1,135호 사업 승인
- 2009년에는 하남 미사 등 5개 지구에서 총 680호의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써, 당초목표의 68.0% 수준을 보임(비예산사업).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2009.10)되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사업이 연기

28) 고령자 주거안정법 주요내용은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공고(안 제8조 및 제9조),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안 제10조), 고령자 임대주택 신고 및 생활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고령자용 주택개조 비용 지원(안 제16조), 고령자 주거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되었기 때문임.

〈표 2-56〉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공급	공급확대 사업승인	1,000호	680호	68.0	비예산		

③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저상버스

- 국토해양부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승하차가 편리한 친환경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4~2013년 간 3,972억원(2009년까지 1,137억원/2,370대)을 투자하여 총 14,500대(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늘리고자 하였음.
- 2009년에 980대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실적 대비 달성률이 99.7%인 것으로 나타남(예산 442억원 중 99.7% 집행).

※ 도시철도

- 국토해양부는 2003년 이전에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8~2017년 간 2,370억원(2009년까지 586억원)을 투자하여 엘리베이터 432대, 에스컬레이터 581대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 엘리베이터 62대, 에스컬레이터 51대를 확충하여, 예산집행 실적 대비 당초목표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20억원 전액 집행).

※ 수도권전철

- 국토해양부는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수도권전철 등 일반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3년~2012년 간 37개 역사에 이동편의시설 282대(E/L 86대, E/S 196대)를 설치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 7개 역사에 승강설비 22대(E/L 17대, E/S 5대), 16개 역사에 133대(E/L 19대, E/S 114대) 등을 설치하여, 예산집행실적대비 당초 목표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80억원 전액 집행).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및 사고로 인한 노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 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중 여가·의료·주거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부를 정해 30km/h 이하 속도제한 등 규제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2007년 노인보호구역 시범운영, 200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필요 대상 759개소 선정 및 노인보호구역 97개소 지정
- 2009년에 노인보호구역 101개소 추가지정(2009.11)을 통해 2008년말 97개소에서 2009년 11월 198개소로 확대되어, 당초목표를 초과달성 (130.3%)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병행 실시 및 효과 분석
- 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행시 안전해졌다는 의견이 63.9%, 지정 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8% 감소하고, 3주 이상 중상자 수는 72.7% 감소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효과 확인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경찰청은 고령자 및 위험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통안전용품을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6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 2007년부터 안전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용품 배포
- 2009년에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34.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노인정 등 현장 방문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배포 지속 실시
 - 교통간부, 교통안전교육 전담경찰관(289명) 등이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2,052,28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광조끼 (29,751매), 아광반사재(485,300매) 등 교통안전용품 2,104,662개를 제작·배포
- “1경찰관-1노인정”을 전 경찰서로 확대·추진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고령자 대상 교육교재 개발 및 배포
 -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생활안전연합 등과 공동으로 고령자 교육용 ppt자료, DVD자료(노래교실형태의 교육용 영상물), 홍보노래 CD (무조건, 어머니를 개사) 등을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교육시 활용)
- 고령자에 특화된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 도입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교통 위험지역을 감시·순찰하여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사고율 감소를 기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 「노인교통안전봉사당 구성·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노인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 시달하고, 노인교통안전봉사단 161개소 (4,571명)를 설치·운영하였음.
- 2009년에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으로서 교통안전봉사대를 운영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교통안전봉사대 발대식 개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봉사대 교육 경진대회 실시 등

〈표 2-57〉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0	100.0	99.7	884.0	881.6	99.7
도시철도이동 편의시설확충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0	100.0	100.0	885	885	100.0
이동편의 시설확충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0	100.0	100.0	280	280	100.0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인보호구역 지정 개소	152	198 (09.11)	130.3	비예산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34.7	34.7	100.0	비예산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노인교통안전 봉사대 수	245	245	100.0	비예산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보건복지가족부는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보급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실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2007년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모형설계 세부지침 개발」 연구
- 2009년에는 노인복지우수프로그램 15개를 발굴·포상하여(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2), 당초목표(16개 표창)의 94.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가사활동 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취약농가의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도우미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천원(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월 1회)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전국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

전국 시·군으로 확대 실시

- 2009년에는 65세 이상 고령농가 및 취약농가 19천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당초목표(이용만족도 5분위 중 2분위까지 비율 90%)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3억원 전액 집행).
- 단, 가사도우미 지원 단가는 10천원/1일으로 교통비 상승 등에 따라 활발한 지원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 농촌진흥청은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농촌 노년 장수생활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70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4영역 활동(건강한 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활동, 소득활동) 지원
 - 2009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141개소 육성으로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2008년 65.2%에서 2009년 69.5%로 향상되어,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7.0%)한 것으로 나타남. 시범마을 참여노인의 연간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총 8회로 당초목표(7.3회)를 초과달성(110.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0.4억원 전액 집행).
 -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생활자세 확립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 및 홍보

〈표 2-58〉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모델 개발	지자체 우수프로그램 포상	16개	15개	94.0	비예산		
가사활동 지원사업	5분위 만족도 조사결과 상위 2분위까지 비율	90.0	90.0	100.0	13	13	100.0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마을 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설문 측정)	65.2	69.5	107	70.4	70.4	100.0
	시범마을 참여노인의 연간 프로그램 참여 횟수('08 실적)	7.3회	8회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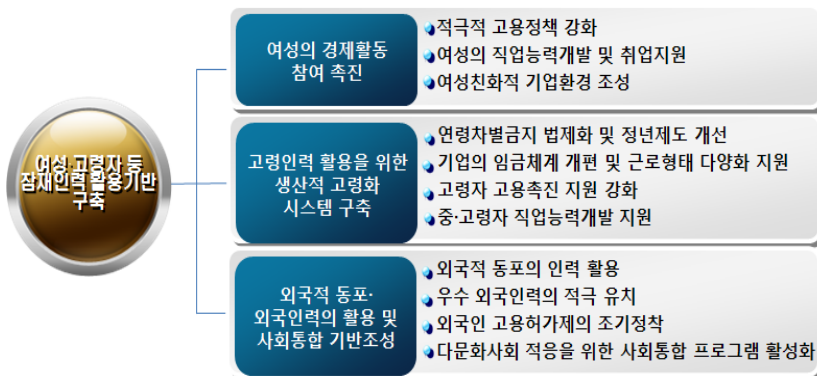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 번째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3가지 중점 전략(중영역)으로 구성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은 i)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ii)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iii)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8]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구성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 노동부는 공기업 및 대기업(상시 500명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 평등계획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여성고용차별개선 및 여성고용확대를 실현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A)도입을 위한 근거 법령(마련²⁹⁾)을 시작으로, 매년 500인이상 사업장(2008년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그리고 여성고용 비율 기준미달 사업주를 대상으로 AA시행계획서 및 AA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였음.
 - 이 외에도 AA제도매뉴얼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워크숍 등을 실시 하였음.
 - 2009년도에도 기 추진하였던 바와 같이, 남녀근로자 현황과 AA시행 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자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AA적용사업장(1,607개소) 모두에서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함으로써 당초목표(의무기업 참여율)를 100.0% 달성하였으며, 분석결과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34.01%,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14.13%로 나타남.
 - 2008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기업(776개소) 모두에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목표(의무기업이행율)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이행실적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4월), 지방노동관서 및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 지방노동관서 AA 담당자 워크숍 실시(5.20, 5.25), 공공기관의 AA추진 지도 강화(6개청 6회), 간담회 등

2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05.12.30)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6.2.28)

인식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예산은 총 8.5억원 중 97.6%를 집행함.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99개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³⁰⁾의 신규 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³¹⁾,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여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7년부터 매년 전년도 채용목표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하였음.
- 2009년에는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25개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실적을 가점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 추진실적 점검(1~2월)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 확정(4월), 25개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시 채용목표제 실적 반영(3월) 등을 통해, 25개 정부출연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비율이 16.5%로 나타나 당초목표(여성인력채용비율 17.0%)를 97.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및 양성 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고, 관리자 내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6년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2-2006)」이 종료됨에 따라,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대상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

30) 25개 정부출연(연), 66개 국공립(연), 8개 정부투자기관부설(연)

31) 2010년까지 25%, 최종 30%까지 단계별 여성채용 비율 제시

하였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³²⁾를 추진하였음.

- 2009년에도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여성의 공직진출 증가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내 급속한 성비 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 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2~7월), 종합적인사관리방안(9월)과 세부추진 계획(12월) 수립 등을 통해, 2009년 중앙 행정 기관의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이 6.8%(인원은 520명 목표에 544명)로, 그리고 양성 평등채용목표제의 추진으로 2009년까지 추가합격자가 150명(남 17명, 여 133명)으로 나타나 당초목표를 98.6%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교감·전문직 등 여성관리직 비율과 각종 인사위 여성임용 비율 점검,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추진 유도 등을 통해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및 여교수의 대학 내 의사 결정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대학별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시·도 교육청에서 여성교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국공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평가지침 통보, 2008년도 국공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우수대학 선정(5개)³³⁾ 및 사업비(2.8억원) 지원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 중 여성 비율이 18.1%(3,392명)³⁴⁾로 나타나, 당초목표(여성 교장·교감

32) 5~9급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 5명이상 시험에서 한쪽 성이 30%미달 시,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

33)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주대학교

34) 초등의 경우, 전체 11,696명 중 여성 비율은 18.9%(2,207명), 중등의 경우, 전체 7,012명

임용율 2010년 20.0%)를 90.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개 대학(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에 여교수 정원을 각각 1명 배정함으로써, 당초목표(여성교수 비율)의 98.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2.8억원 중 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9〉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참여기업/의무기업	90.0	100.0	111.1	8.5	8.3	97.6
	이행실적보고서 제출기업/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80.0	100.0	125.0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25개 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비율 (여성채용인원/총채용인원)×100	17.0	16.5	97.1	비예산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4급이상여성/4급이상전체)×100 *39개 중앙행정기관 현원 기준	6.9	6.8	98.6	비예산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여성 교장교감/전체 교장교감	20.0 (‘10년)	18.1	90.5	2.8	2.8	100.0
	여성교수 비율	13.0	12.8	98.4			

②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 노동부에서는 여성선호직종 등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유연한 훈련방식 도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훈련사업 시범 실시 등 여성의 직업역량 및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음.
 - ※ 2006년 8개, 2007년 3개(의료기기CAD 등, 115명 참여), 2008년 2개 (주얼리코디네이터 전문가 등, 52명 참여) 개발
- 2009년에는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내 기능사 과정, 여성부 추진 훈련

중 여성비율이 16.9%(1,185명)로 나타남.

프로그램(2개 직종), 경력단절여성 양성훈련 시범실시 및 지자체 등 위탁훈련(11개 직종) 추진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여성부 추진 여성훈련프로그램(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 등 3개 직종) 79명,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의 기능사양성과정(정보통신시스템 직종) 20명(2010.2월 수료생 기준), 경력단절여성양성훈련 시범실시 및 지자체 등 위탁훈련(여성특수용접 등 25개 과정) 545명 훈련 실시(12월말 기준) 등으로 당초목표(양성인원 340명)의 189.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0.6억원 중 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부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여성의 연령, 희망취업, 직종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대생 대상 커리어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획·추진하였음.
- 2009년에도 지역특화산업, 고학력여성 대상 전문 직종 발굴, 전업주부 직업훈련, 미래유망직종 교육훈련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산업,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전문 직종 발굴, 여성 진출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교육수료생의 취업률이 58%로 나타나, 당초목표(교육수료생 취업률 61.9%)를 93.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상황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주 취업처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취업실적이 미흡하였음.
- 여대생 대상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286개 프로그램, 50,925명 이용, 1,461명 취업) 등을 통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84.7점

으로 당초목표(만족도 85.5점)를 99.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62.6억원 중 98.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0〉 2009년 여성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추진실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수료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여성 주 대상의 지역산업체 수요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고학력여성 눈높이에 맞는 전문 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항만무역·물류전문가, 조선·기계 CAD전문가 등(87개 과정)	2,5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및 정보화 분야 등 전업주부 직업훈련 	방과후 지도사, 전산세무회계 사무원 등(150개 과정)	3,66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진출이 미흡한 비전통 분야 직종 교육훈련 	CO2 실무응집 기능인, 자동차정비 검사기능사 등(총 5개 과정)	14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미래 유망 도전직종 교육훈련 	디지털 영상편집가, 영어연극 뮤지컬 기획자 등(총 10개 분야)	247명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여성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하여(여성부·노동부 공동),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여성부·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50개소)’ 및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5개소)’의 운영과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운영(총 72개) 및 종사자(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 200명 직무역량 강화 교육, 새일센터 현장 점검, 센터별 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밑반찬 서비스, 놀이방 운영, 돌보미 파견 등을 통해 총 105,282명이 이용하여, 당초목표(이용 인원 100,000명)의 100.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여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및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매 3년)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이 제정 되었음.
- 2009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와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목표(기본계획 마련)를 100.0%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2억원 중 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자격취득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여성 진출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신설 추진, 일-훈련-자격이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 직업역량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여성 진출이 용이한 분야에 대해 표준을 개발하여 왔음.
- 2009년에는 여성 진출유망 산업분야의 직업능력표준개발 및 NOS 웹사이트(<http://nos.hrd.go.kr>)를 통한 개발된 표준의 민간 제공, 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자격 신설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여성참여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인 “패션”을 직업 능력표준 활용패키지 개발대상으로 선정하여 패션기획과 디자인 2개 분야를 개발함으로써,³⁵⁾ 당초목표(패키지개발 2분야, 7직종)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3.5억원 중 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35) 직종개발은 섬유산업협의체에서 그리고 개발결과물의 시범적용은 폴리텍여자대학 및 폴리텍섬유패션대학에서 진행하였음.

〈표 2-6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양성인원/계획인원)×100	340명	644명	189.4	0.6	0.6	100.0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수료생 취업실적 (취업자수/교육수료생수×100)	61.9%	58%	93.7	62.6	61.5	98.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자 만족도 (센터별 이용자 만족도 평균)	85.5점	84.7점	99.1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종합취업지원기관 이용현황	100,000	100,327	100.3	214	214	100.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 수립본계획 마련	수립	수립	100.0	2	2	100.0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직업능력표준개발 직종 (패키지 개발 직종)	2분야 7직종	2분야 10직종	100.0	3.5	3.5	100.0

③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 여성부에서는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리더십 교육 등), 여성 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여성인력 패널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8년 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 WFI)를 개발하였으며, 여성인력 패널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여성관리자 및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과 심포지움 개최,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유지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5회, 195명), 인사담당자 교육(1회, 25명), 중소기업 CEO(31명)초청 포럼(11.12),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연구용역(4.22~1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리더십교육 및 인사담당자교육 200명)를 초과달성(125.5%)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5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여성부에서는 풀타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자의 일-생활 조화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제도(퍼플잡)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일-생활 조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8년 여성친화기업 협약식(2개 기업)을 체결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2009년에도 여성친화기업 MOU체결 및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 실시(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국내외 여성친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등 홍보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506개의 기업(대기업, 지역 중소기업 포함)과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목표(협약체결 150개)를 초과달성(337.3%)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여성친화지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여성친화도를 측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7개 기업),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매뉴얼을 제작하였음.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광고(19개 노선, 42대) 및 리플렛 배포(4.1~4.30), 동영상제작 및 전광판 광고(11.1~11.30) 등을 추진 하였음.
- 유연근무제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12월)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1억원 중 100.0%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2〉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리더십 교육 및 인사담당자 교육 실적	200명	251명	125.5	1.5	1.5	100.0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여성친화기업 협약 실적	150개	506개	337.3	1.1	1.1	10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노동부에서는 연령차별금지를 모집채용분야에 우선 적용하고(2009년) 2010년까지 임금,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분야까지 확대하여,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06년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8년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관련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였음.
- 2009년에는 개정된 연령차별금지법령 및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지방관서 업무담당자 연령차별금지 법령 관련 순회교육(3.5~3.9)을 실시함으로써, 당초목표(권역별 교육실시)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그 외에도 사업안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3월 1~2주) 차별금지법 시행관련 보도자료 배포(3.20)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Age campaign 실시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고용강조주간(11월 셋째주)’ 설정 및 연령차별 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 범정부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working60+캠페인, TV광고, 온라인 카페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실시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네이버 온라인카페 운영,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인 고령사회를 위한 포럼 개최, 고령자고용 우수기업 포상, 신문 등 미디어 홍보, 고령자고용 강조 주간 행사 등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당초목표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4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정년제도 개선

- 노동부에서는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종전 정년을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디스인센티브³⁶⁾ 적용하던 방식에서 2007년 인센티브를(정년연장장려금제도)³⁷⁾ 지원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50+ 세대 일자리 대책」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VIP보고를 추진하는 등, 당초목표(정년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부 검토)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정년연장장려금으로는 총 2,679명에게 2,26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2008년 118명, 80백만원).
- 예산으로 총 29억원 중 79.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교육실시	권역별 교육실시	권역별 교육실시	100.0	비예산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Age campaign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고용강조주간기념행사 · 대국민연론홍보 · 이벤트(온라인카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3회 ◦ 회원 2,500명 방문자 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5회 ◦ 회원 방문자 2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 166.6 ◦ 133.3 	2.4	2.4	100.0
정년제도 개선	정년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부 검토	검토회의 개최	종합대책 VIP보고 반영	100.0	29	23	79.3

36) 디스인센티브로 정년을 54세 미만으로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정년연장계획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37) 정년연장장려금은 2008년 신설된 제도로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기간의 1/2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원하는 제도임.

②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³⁸⁾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한시제도인 임금피크제보전수당(2006~2008년)제도를 2008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기존 임금감액 제외 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9년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음.
- 그 외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시간 유연화, 고령자 적합 직무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무료 자문서비스 및 컨설팅비용 지원, 기타 홍보 방안 등에 대해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총 1,475명에게 6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당초목표(지원금 지원 1,085명)를 초과달성(135.9%)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임금피크제컨설팅 포함)으로 33개소에 총 15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지원대상사업체 30개소)를 초과 달성(110.0%)한 것으로 나타남³⁹⁾.

38) 임금피크제보전수당으로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6년간 지원(연소득 5,760만원 초과자 지급제외)하는 제도

39)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 확산 및 보전수당 지원 확대 결정(비상경제대책회의, 1.19),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50+세대 일자리 대책」 마련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 및 컨설팅 강화 등 추진계획 수립(7.31), 사업주 및 노사단체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도입실태 조사, 임금피크제 컨설팅 효과 강화를 위해 컨설팅 심층평가 실시(10~12월)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사업의 경우 총 68억원 중 94.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컨설팅사업의 경우에는 15억원 모두(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지원금 지급인원	1,085	1,475	135.9	68	64	94.1
	지원대상 사업체 수	30	33	110.0	15	15	100.0

③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노동부에서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다수고용하고 있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⁴⁰⁾을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6년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종전 50~64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정년연장장려금⁴¹⁾이 신설되는 등으로 인하여 매년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있음.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추진실적 : '06) 229,092명 360억원 지원 → '07) 268,415명 409억원 지원 → '08) 273,945명 481억원 지원
-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59,838개소, 262,992명에게 총 479억원을 지원(11월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목표(장려금 지원율 90.0%)를 초과달성(129.3%)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473억원 중 456억원(96.4%)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4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으로 구분되며,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다수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로 18~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41)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이 연장된 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장려금 지원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노동부에서는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한(또는 예정인) 근로자에게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당초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훈련비 등 소요 비용의 3/4을(대규모기업 2/3)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하던 것을 2008년 중소기업에 한하여 전액지원으로 확대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41개소, 1,366명에 대하여 25억원을 지원(11월말 현재)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원금 수급대상자의 6개월 후 재취업율이 22.3%로 나타나, 당초목표(지원금 수급대상자의 6개월 후 재취업을 22.0%)를 초과달성(101.4%)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으로 총 28억원 중 89.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산업체 퇴직연구인력 포함)

- 노동부에서는 고급연구인력(석·박사 또는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로서,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인력 4,800만원을 3년간 지원하였음.

〈표 2-65〉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지원기업(명)	598	352	473	389	699	2,511
고용지원(명)	711	423	534	430	793	2,891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수도권 649명(473개사), 비수도권 448명(322개사) 총 1,097명(795개 기업)에 대하여 총 160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

(지원인원 1,000명)를 초과달성(109.7%)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60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을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자 워크넷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일자리 DB 연계구축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고령자인재은행지정운영,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타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획·추진하고 있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50개소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운영(8개소는 고령자 고용종합지원센터로 개편)으로 당초목표(지원인재은행 50개소)를 100.0% 달성하였으며, 실버취업박람회 5회 개최로 당초목표(박람회 개최 6회)의 83.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 담당부처에서는 1회의 계획하였던 박람회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신종플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함.
- 이 외에도 노동부에서는 민간취업기관 구인구직 DB와 고령자워크넷 연계 강화를 꾀하였으며, 민간 고령자취업알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 예산은 총 18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6〉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장려금지원율 (지원인원/목표인원)×100	90.0%	116.4%	129.3	473	456	96.4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지원금 수급대상자의 6개월 경과시점 재취업율	22.0%	22.3%	101.4	28	25	89.3
중소기업 고금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인원수	1,000명	1,097명	109.7	160	160	100.0
고령자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인재은행 수 박람회 개최	50개소 6회	50개소 5회	100.0 83.3	18	18	100.0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기관 평가 시, 해당 기관에서 준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훈련기관 평가 시, 5% 범위 내에서 준고령자 훈련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훈련기관 평가 시 5% 범위 내에서 준고령자 훈련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이 9.1%로 나타나, 당초목표(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 6.5%)의 14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4억원 중 100.0%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 노동부에서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와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꾀하여 직업안정 및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고령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훈련 프로그램으로 10개씩 신규개발하여 왔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10개과정을 신규 개발함에 따라, 당초목표(10개과정 개발)의 10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 10개과정에는 고용상담원, 대형마트상품관리원, 물품 및 카드배송원, 보일러 냉동관리원, 산업기술용접관리원, 음식료품가공원, 잔디관리사, 장례지도사, 주차관리원, 지하철승강기안내원 등이 해당
- 예산은 당초 11.9억원 중 88.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과 훈련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2009년으로 사업 종료

〈표 2-67〉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 (E등급기관/평가실시기관)	6.5%	9.1%	140.0	14	14	100.0
고령자를 위한 훈련 과정 개발	중고령자 직업훈련과정개발	10개 과정	10개 과정	100	11.9	10.5	88.2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친화적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고령자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최고 10억원을 금리 3%,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를 지원하고 있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29개사에 총 50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융자 지원 30개소)의 96.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50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노동부에서는 중고령자의 신체적 능력 및 신경행동기능을 고려한 안전 보건 재해예방 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고령근로자 관련 재해사례, 안전작업수칙,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위주로 재해예방 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12종의 중·고령자 안전보건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당초목표(자료보급 1종)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개발 자료는 책자형 자료(1종, 1,000부), 강의형 교안(CD, 1종, 1,000개), 안전교육용 파워포인트 교안(On-line 정보자료, 10종) 등이 해당됨.

〈표 2-68〉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용자지원 사업채수	30개소	29개소	96.7	50	50	100.0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자료보급	1종	12종	120.0	0.3	0.3	100.0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①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법무부에서는 중국 등 우수동포인력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확대함으로써, 우수동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음.
- 2006년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신설, 취업업종 및 절차, 비자쿼터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통과 하였음.
- 2007년에는 방문취업(H-2)자격⁴²⁾ 부여를 위해 방문취업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였음.
- 2008년에는 전년도에 도입된 방문취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종전 재외동포(F-4)자격 부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국·구소련 국적 동포 중 전문인력(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42) 방문취업제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25세이상 동포에 대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H-2)자격의 사증(5년 유효, 1회 3년 체류)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

- 2009년에는 중국·구소련 출신 동포 중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자격 발급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재외동포(F-4)자격부여 지침 개정(4회)으로 중국 등의 동포로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 국내외 4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 그리고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었음.
- 자격부여 지침 개정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국내 체류자 수가 49,786명으로 나타나, 당초목표(재외동포 국내체류자 40,480명)를 123.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외국적동포의 체류 지원

- 법무부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주요 법률 정보가 안내된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외국적동포의 체류 및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외국적동포의 체류 지원을 위해 2007년에는 주로 제도적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F-4)사증을 단수에서 복수로 발급, 중국인 복수 단기종합(C-3) 사증발급 대상 확대⁴³⁾, 관련법령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령」, 「출입국관리법령」⁴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⁴⁵⁾개정 등을 추진하였음.
- 2008년에는 주로 센터설립과 상담지원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음.
 - 구체적으로 외국적동포의 사회적응지원과 체류활동유도를 위해 고충 상담 등 경력이 1년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 4개소를 동포체류지원 센터로 지정하였음.

43) 과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국한 자로 관광, 통과목적의 입국자나 회의 참석자 등이 대상

44) 개정내용으로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 사증 및 취업 등 관련 근거 및 절차 마련

45) 종전 재외동포 국내 거소이전 신고기관으로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서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

- 2009년 추진실적으로 법무부 산하기관 및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총 23,300건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당초목표(외국적동포 체류지원 상담 1,440건)를 초과달성(1,618.1%)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간담회 및 종사자 대상 방문취업제도, 동포정책, 체류관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등 교육(6월)을 실시하고,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 책자 5,000부를 배포하였음.
- 예산은 총 0.5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단순노무분야에서 동포 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포인력에 대해 탄력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8년에는 국민 1인당 친척초청 인원 제한(3명), 단기사증 입국자의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 원칙적 불허,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장기 취업한 동포에게 인센티브(친척초청기회 등) 부여 등을 통해 방문취업(H-2)자격동포 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들이 출국확인서 발급·확인 절차 없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정(4월)⁴⁶⁾, 방문취업 동포 취업신고 간소화 및 팩스 취업신고 허용(4월)⁴⁷⁾,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5월) 등을 추진한 결과, 당초목표(방문취업자격 동포 국내체류자 253,000명)를 초과달성(121.2%)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46) 구체적으로 친척초청 사증발급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사무소·재외공관별 사증예약 한도를 설정(연간 1만 명)하였음.

47) 구체적으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 적정 인원 범위 내에서 건설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임.

〈표 2-69〉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재외동포(F-4)자격 동포 국내 체류자 수	40,480 명	49,786 명	123.0	비예산		
외국적동포의 채류 지원	외국국적동포 채류지원 상담 건수	1,440 건	23,300 건	1,618.1	0.5	0.5	100.0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방문취업자격 동포국내 체류자 수 (방문취업사증발급건수+방문취 업자격변경건수+기존방문취업자 격자수)	253,000 명	306,658 명	121.2	비예산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여부	계획수 립여부	수립 완료	100.0	비예산		

□ 외국인력 적정규모도입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 노동부에서는 국내 경제전망 및 노동시장,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내국인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초 적정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을 예방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적정 도입규모 설정을 위해 2008년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동포 취업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취업 신고율 제고에 집중하였음.
- 2009년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적정 동포 입국인원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건설업 동포의 취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09년 적정외국인력도입규모 설정관리(2009.3.10, 외국인력정책위원회)」⁴⁸⁾를 마련함으로써, 당초목표(외국인력수급 계획수립여부)를 100.0%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내국인 일자리 대체 우려가 제기되는 건설업종에 대한 동포

48)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동향 조사결과’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 실태조사’(2009.2.6~13) 결과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였음.

규모 제한(2009.5월, 동포에 대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동포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②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제도 개선,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초청장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고, 대학체제 개선 및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매년(2006~2008)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한국유학 안내시스템 운영, 국외에서 한국유학박람회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의 국내대학 입학기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제도측면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 방안(2009.6)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2009.9) 수립,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2009.11) 등을 추진하였으며,
- 기반마련 측면에서는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개설 지원 (18개 대학, 1,000백만원),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7개국, 219개 대학 참여), 정부초청장학생선발(1,550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전체 유학생 수는 75천명으로 추정되어 당초목표(외국인 유학생 70천명)를 초과달성(107.1%)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245.2억원 중 93.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WCI구축사업과 Brain Pool사업을 통해, 출연 (연) 등 연구현장에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제고 및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초청과학자의 수준에 따라 해외석학 단기초청, 해외 고급 과학두뇌 초빙, 해외 선진 우수과학자 초청, 해외 우수학생 연구원 초청지원으로 지원비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

※ WCI(World Class Institute)는 출연(연)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를 의미하며, 센터 연구 팀으로 외국인을 최대 50%, 유치기관 30%, 타 출연(연)대학 20%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Brain Pool사업은 연구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우수한 해외연구자를 직접 초빙하여 최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94년~계속)

- 2006년부터 매년 외국과학자를 초청하여 해외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6년 432명, 2007년 245명, 2008년 341명 선정 및 지원

- 2009년 추진실적으로 WCI를 구축하여 3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Brain Pool사업으로 25명을 초빙활용하는 등을 실시하여, 2009년 1억원당 논문 (공동연구)건수가 0.5671건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 (103.3%)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34억원 중 100.0% 모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0〉 2009년 WCI 신규 지원과제 현황

유치기관	센터명	센터장
KIST	기능 커넥토믹스 센터	조지 어거스틴
생명(연)	Kinomics 기반 발암 표적단백질 및 신약 후보물질 발굴센터	레이몬드 에릭슨
핵융합(연)	핵융합 플라즈마 난류 및 수송 현상 통합 모델링 연구센터	패트릭 다이아몬드

□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제공

- 법무부에서는 유학생(D-2), 외국인투자자(D-8) 및 전문직업(E-1~E-7) 자격 소지자 등의 국내 체류 및 취업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5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⁴⁹⁾ 시작으로, 2006년 전문인력 제도개선팀 구성 및 전문외국인력 유치방안마련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매년(2007~2008)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였음.
 -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① 전문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소득 요건을 1인당 GNI 4배이상에서 GNI 3배이상으로 완화, ② 거주(F-2)자격 부여 시, 국내거주기간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 하였음.
 - 2008년에는 ①투자외국인에 대한영주(F-5)자격 부여 요건 완화(미화 200만불 → 50만불), ②전문직(E-1~7, E-6 제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구직(D-10) 비자 발급 및 자격변경 허용(2008.9.10 시행), ③전문직(E-1~7, E-6 제외)에 대해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확대 등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상국가 확대, 외국인투자 기업 종사 전문인력 등에 대한 가사보조인 고용범위 확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절차 간소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주재비자 발급, 간접투자이민 제도 도입 및 외국인의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창업비자 신설, 등록외국인 중 대학교 이상에서 수학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전문외국인력 체류자 수가 35,732명(2008 대비 1.6%)으로 당초목표(전년대비 3% 증가)의 54.0%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 담당 부처에서는 목표 달성을 저조 이유로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문외국인력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49)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기준 마련

〈표 2-71〉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해외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수 전수조사(KEDI통계)	70천명	75천명	107.1	245.2	230.1	93.8
해외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	1억원당 논문 (공동연구)건수 [성과측정연도에 발생한 연도별 논문수/발생노문을 지원한 연도별 사업비]	0.5488	0.5671	103.3	134	134	100.0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제공	전문외국인력 채용자수 증가 비율 *예술홍행(E-6)는 제외	3.0% (1,054)	1.6% (571명)	54.0	비예산		

③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법무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등에 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외국 인력 도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일원화 된 고용허가제(2007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관계 법령 개정,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전자사증 제도 확대, 송출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음.
 - 2009년에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국어시험 외 기능테스트 실시, 근로자 체류단계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단순노무 외국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2009.12.9) 및 비전문취업(E-9)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통합관련 회의(2009.10.30),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관련 검토 의견 노동부 송부(2009.6.9) 등 당초목표(지침개정 1회, 회의 2회)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이 외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처리기간 목표 설정(8.5일) 및 관리 점검 강화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처리기간을 단축(2009 평균 8.1일

소요)하였으며,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일괄연장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3만원)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불법고용 이력으로 외국인 고용이 3년 이내로 제한된 업체의 고용규제 전면 완화, 중소기업 등에 1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제한 유예 등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였음.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행정신고 사항 간소화)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단계별(입국초기 → 체류 → 귀국)로 필요한 고용체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종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2004)에 따른 불법체류 등의 제도적 한계점 극복을 위해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여 외국 인력도입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음.
- 이후(2007~2008) 고용허가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외국 인력과 내국인 고용기회의 조화 모색, 고용허가제 운영체제 개선,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왔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베트남 노동자 중 건설업 취업희망자 569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능테스트 실시(9.14~18일, 하노이), 조선업 용접공 분야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용접 관련 자격 제도가 있는 베트남근로자 DB 구축 및 기능평가(6.5일, 215명 중 78명 선발, 48명 근로계약 체결)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목표(기능테스트 1회 이상 실시, 기능인력도입)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이 외에도 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고용허가 및 업무대행 온라인 신청시스템 시행(3.25),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활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체류단계별 고용체류지원 방안 마련 및 고용허가제활용사업장(74천여개) 대상 230천건의 고용체류 서비스(상담 행정신고, 지원통역지원 등) 제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설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및 기능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체류지원 및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6~2008년 매년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계획·추진하였음.

※ '06)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7)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8)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2009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3개소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인천, 대구, 천안) 추가 설립으로 총 8개소의 센터에서 139,832명에 대해 상담 제공, 51,922명에 대해 한국어 및 기능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당초목표(상담 150,000명, 교육 30,000명)를 초과달성(각각 102.6%, 189.7%)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센터이용자의 만족도는 81.0%로 나타나, 당초목표(만족도 85.0%)의 95.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총 123억원 중 76.4%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의 고충해결,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정적 사회 적응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고충상담관제, 인권담당 관제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재한외국인 고충처리 22,742건⁵⁰⁾ 및 인권상담 1,544건을 지원함으로써, 당초목표(고충처리 19,888건)를 초과달성(122.2%)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그 외에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총 27건 개최하여, 상정안건 2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것으로 나타남(인용 25, 기각 2, 기타 2).

50) 구체적으로 체불임금해결 8,378건 10,256,012천원, 의료구호 4,449건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2,541건, 기타 7,374건 등으로 구분됨.

〈표 2-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지침 등 개정 · 회의 개최	1회 2회	1회 2회	100.0	비예산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기능테스트 실시 · 특정분야 기능인력 도입	· 1회이상 · 기능인력 도입	· 1회이상 · 기능인력 도입	100.0	비예산		
	지원 인프라 확충 여부	지역별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100.0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센터 상담건수	150,000명	153,825명	102.6	123	94	76.4
	센터 교육이수자	30,000명	56,917명	189.7			
	센터이용자 만족도	85.0%	81.0%	95.2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재한 외국인 고충처리 건수	19,888	24,313	122.2	비예산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종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외국인종합안내센터)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언어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전화상담실(상담원 6명) 설치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이민행정콜센터’로 그리고 2008년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확대·개편함으로써,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어로 체류안내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09년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체계 통일화 유도 및 민원인 사무소 재방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 관련 종합 안내서비스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2,041,190건의 전화상담을 제공(2008.3월 대비 2009.3월 191%, 11월 171% 증가)함으로써, 당초목표(전화상담

1,214,400건)의 168.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활용하여 특수외국어 상담원 운영을 확대하는(4명에서 6명으로) 등의 노력으로 고객만족도가 향상(2008년 88.17점 → 2009년 94.24점)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으로 총 18.9억원을 모두 집행(100.0%)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프로그램(생활체육 어울림교실, 생활체육 어울림캠프)을 통해 이주민에게는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내국인에게는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한국어교육, 이주노동자 축제, 이주노동자 문화 가이드북 제작 등을 계획·추진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20개소 58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이해 교육(~2009년 종료)⁵¹⁾을 실시함으로써 당초목표(교육인원 10개소 600명)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연극제, 다문화합창단 등 14개 지역에서 총 25개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초목표(프로그램 운영 15개)를 초과달성(166.7%)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6~9월) 16개소 운영 및 생활체육캠프(방학 기간) 16회 실시 등 당초목표(생활체육교실 10개소, 생활체육캠프 10회)를 초과달성(160.0%)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문화이해교육사업,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캠프사업의 경우 당초의 예산(각각 5.8억원, 1억원)을 10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프로그램사업의 경우, 총 9억원 중 77.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98~)’⁵²⁾,

51) 2010년부터는 한국어문화이해 교육(복지부), 한국어교재 개발 및 교원 양성과정(문화부)으로 부처간 역할분담협력 추진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ASPnet, '61~)’⁵³⁾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한국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유네스코 이념 전파를 위한 ASPnet간 협력활동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 2006~2008년 간 매년 2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과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을 운영하였음.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및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 257개('06) → 200개('07) → 220개('08)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전국 240개 학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정규수업(총 966회) 실시, 112개 학교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ASPnet) 운영 등 총 352개 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당초목표(사업실시 250개교)를 초과달성(140.8%)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의 경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7회), 워크숍(2회), 포럼(1회), 오지학교 방문홈스테이(7회), 포럼 및 감사만찬, 웹 사이트 세계문화 자료실 운영, 홍보 DVD 제작 및 배포(국영문 통합본, 200부) 등을 추진
-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의 경우, 12개 프로젝트 선정 후 40여개의 초중등고등학교의 참여로 현장연구 프로젝트 수행, 아태지역 유네스코 협동학교(아시아 10개국)의 우수사례 포럼 개최, ASPnet 후속 교류 사업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 지원

- 예산집행 실적으로 총 1.6억원의 10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 참여 TV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국내 및 해외채널을 통해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인

52)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은 국내거주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자국의 다양한 역사·문화 소개 및 강의·토론하는 사업

53)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학교현장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생의 지역사회활동 참가 및 아태지역 협력사업 추진

Hand in Hand를 방영하였음.

※ 방영횟수: 17회('06) → 52회('07) → 52회('08)

- 2009년 추진실적으로 외국인참여 TV프로그램 “All Together”를 정규 편성하여 총 26편을 제작(연간 43회 방영)함으로써, 당초목표(제작목표 달성률 100.0%)의 60.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담당부처에서는 목표달성률의 저조가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거부 및 방송 노출 회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제작을 중도에 종료하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음.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자녀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강화, 결혼 전 사전정보제공, 배우자교육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8년에는 전국 80개 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 신규설치(총 100개소) 등을 통해 707천명이 센터를 이용하여 당초목표(이용자 686천명)를 달성(103.1%)하였으며, 21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초목표(방문교육 16천가구)를 초과달성(131.3%)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160명의 통번역인력(결혼이민자) 양성 및 88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배치(12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학교상담, 알림장 번역 등을 지원하고,
 - 100명의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를 양성하여 87개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였음.
- 예산은 총 393.3억원 중 99.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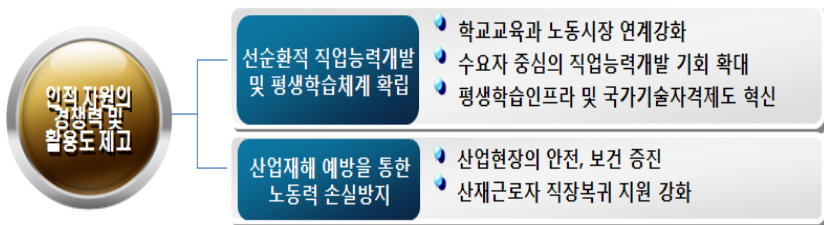
〈표 2-73〉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50명×92건×22일×12개월	1,214, 400건	2,041, 190건	168.1	18.9	18.9	100.0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교육개소 및 교육인원	10개소 600명	20개소 587명	100.0	5.8	5.8	100.0
	프로그램 개수	15개	25개	166.7	9	7	77.8
	· 생활체육운영 개소수 · 캠프 개최수	10개소 10회	16개소 16회	160.0	1	1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사업실시 대상학교 수	250개	352개	140.8	1.6	1.6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제작 목표 달성률 (제작편수/주간본방송횟수)×100	100.0	60.5	60.5	비예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센터 이용자 수 (프로그램 이용 연인원)	686천명	707천명	103.1	393.3	389.8	99.1
	방문교육 대상가구 수	16천가구	21천가구	131.3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은 i)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과 ii)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의 2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구성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 국민 및 시·도 교육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을 개발·보급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전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1종이 작성 완료되었으며, 당초 목표였던 진로개발 표준 모델은 완료되지 못하였음(비예산사업).
- 이에 대해 담당 과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마련(2010.1월 발표 예정)중이며, 이 계획 내에서 본 사업인 ‘진로교육 운영 지침 개발’내용을 포함하여 차년도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 14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의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지정’ 제도를 추진하며, 다양한 직업교육 혁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보급함으로써 전문대학 별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체제개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교수·학습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 하여 시상하였고 학사제도 개선 우수대학을 지정하였으며 발표회를 통해 전파하였음. 그에 따라 개발교재 활용대학 교원들의 만족도가 82점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65점)를 초과달성(126.2%)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2.5억원 전액 집행).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 노동부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직업현장을 연계한 고용지원

센터의 현장학습 프로그램(Job School)을 확대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감 제고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12.29일 현재 37,069명이 Job School 및 취업캠프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및 만족자’의 비율이 94.3%로 나타나 당초 목표(60% 이상)를 초과달성(157.2%)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0억원 중 93.3% 집행).

〈표 2-74〉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1종 ·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1종	· 1종 · 1종	· 1종 · 0종	· 100.0 · 0.0	비예산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개발교재 활용대학 교원들의 만족도 조사	65점	82점	126.2	2.5	2.5	100.0
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5단계 척도) 결과 ‘매우만족 및 만족자’ 비율	60% 이상	94.3%	157.2	30	28	93.3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 간행물 발간횟수	3개 이상	13개	433.3	49	49	100.0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노동부에서는 직업가치관 검사, 청소년진로발달검사, 직업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검사 등의 검사를 개발하고 초·중·고·대학생용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며, 진로직업정보 자료 확대 보급 및 커리어넷, 위크넷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취업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의 진입 및 장기적인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검사 개발 및 직업심리검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청년층 및 이주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직업 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였고, 대학 사이버 진로 교육원 구축 및 동영상 개발하여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횟수가 13개로 당초 목표(3개)를 초과달성(433.3%)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49억원 전액 집행).

②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재직자 및 실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10월 기준)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경우 신규·전직실업자 118,826명, 지역실업자훈련에 7,985명, 새터민 744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경우 총 직업능력개발은 3,774,039명, 유급휴가는 11,879명, 수강지원금은 243,891명, 능력개발카드는 64,265명이 훈련을 받았음.
- 구체적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은 훈련중/수료후 취업률(2009.11월 기준)이 57.0%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23.1%), 기능사 양성훈련은 양성 계획 인원 대비 양성인원이 105.9%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17.7%), 새터민 직업훈련은 훈련중/수료후 취업률(2009.11월 기준)이 32.4%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22.3%), 우선선정직종훈련은 훈련생 만족도가 78.6%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00.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재직자 훈련참여율(2009.11월 기준)이 45.5%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05.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지원 인원이 361,356명으로 당초목표 초과달성(101.9%), 훈련과정 수료율이 86%로 당초목표 초과달성 (107.5%),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는 계획 인원 대비 실제 대부 인원이 97.9%로 당초 목표 초과달성(103.1%)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실업자 직업훈련은 3,909억원 중 88.0%, 기능사 양성훈련은

168억원 중 99.4%, 새터민 직업훈련은 46억원 중 87.0%, 우선선정
직종훈련은 1,104억원 중 9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은 4,490억원
중 93.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708억원 중 99.9%,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는 992억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재직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 전문대학에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직근로자, 실업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전문대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직업교육 경로 구축 및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며, 성인계층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로 교육 만족도 증대 및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2009학년도 65개 대학
209개 학과 6,735명에게 운영하고 41개 대학 103개 학과 정원 2,345
명에게 201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를 하였으며, 산업체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그 결과 전문대학 재적생 중
26세 이상 학생의 비율이 13.3%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102.3%)
하였으며,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75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104.3%)한 것으로 나타남(비에산사업).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은 95개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217,782명을 지원해 당초목표(운영기관 88개)를 초과
달성(108.0%)했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를 위해서는 308개 기업을 지원
했으며 업무능력 향상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8.54점이 나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4.7%)했으며,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은 71,167

명을 지원했고 업무능력 향상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8.4점이 나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117.9%)했음.

- 예산은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에는 790억원 중 99.1%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에는 87억원 중 98.9%를,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 지원에는 379억원 중 91.6%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5〉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재직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조기취업+수료자수)×100	46.3	57.0	123.1	3,909	3,438	88.0
	기능사 양성훈련	양성률: 양성인원/계획인원×100	90	105.9	117.7	168	167	99.4
	새터민직업 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조기취업+수료자수)×100	26.5	32.4	122.3	46	40	87.0
	우선선정직 종훈련	훈련생 만족도 비계량 지표	78.2	78.6	100.5	1,104	1,078	9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재직자 훈련참여율: 재직자 훈련간수/전체피보험자수×100	43.3	45.5	105.1	4,490	4,183	93.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 자원인원 · 훈련과정 수료율	· 354,516명 · 80%	· 361,356명 · 86%	· 101.9 · 107.5	708	707	99.9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계획대비 대부인원 비율: 대부인원/계획인원	95	97.9	103.1	992	992	100.0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전문대학 재학생 중 26세 이상 학생의 비율 ·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 13.0% · 87점	· 13.3% · 90.75점	· 102.3 · 104.3	비예산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수	88	95	108.0	790	783	99.1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업무능력 향상 정도	75점	78.54	104.7	87	86	98.9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지원	업무능력 향상 정도	75점	88.4	117.9	379	347	91.6

③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노동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 실천 우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 인식 전환 및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총 137개 기관이 인증에 참여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 (124.5%)하였음(예산 8.5억원 중 99.4% 집행).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기초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고 양질의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 및 시상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 확산 및 모델을 개발·전파하여 일반국민의 평생학습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생학습 성공사례를 전파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평생학습도시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19개 도시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 실시 및 48개 도시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40개 도시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19개 도시의 컨설팅 지원 사업 등 공모 심사평가 및 선정·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전국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대상 사업에서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였고 제6회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하였음. 그 결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만족도가 66.2%로 당초목표를 87.9%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20.8억원 전액 집행).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학습계좌제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과정의 최소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

과정 평가인정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학습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고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인정·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학벌보다는 다양한 평생학습결과를 포함한 능력 중심의 인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을 구축하고 가개통하였음. 그 결과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된 학습자 수가 10,149명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203%)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12억원 전액 집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노동부에서는 구직자 등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자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훈련의 성과와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훈련비 일부 자부담,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3월에 전국단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2월 현재까지 134,908명이 계좌를 발급했고 84,823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음.
 - 이 외에 홍보포스터, 리플렛 배부, 전국 설명회 개최, 지하철 홍보 동영상 방송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홍보하였으며, 계좌제 전국확대 실시에 따른 모니터링 및 분석, 계좌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계좌제 훈련 미참여자 실태조사, 계좌제 문제점 보완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였음.
 - 예산은 738.8억원 중 77.2%가 집행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데 이는 실제 훈련비 지급이 훈련을 받은 후 1달 반에서 2달 반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 받은 훈련에 대한 지급액이라 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11~12월에 받은 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 수요조사, 산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운영, 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일-자격-훈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산업현장에서 자격 취득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47종목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및 출제기준 개정을 확정하였고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를 55회 개최하였으며, 29개 기관을 실기시험장 추가 인증하며, 국가기술자격정보망(Q-net)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및 노동시장 정보망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각 당초 목표를 120.5%, 275%, 116%,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20억 전액 집행).
- 이 외에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2007~2009)」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10~12)」을 수립하였음.

〈표 2-76〉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참여 기관수(총 인증신청 기관수)	110개 기관	137개 기관	124.5	8.51	8.46	99.4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전국평생학습축제 만족도 (축제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78%	66.2%	87.9	320.8	320.8	100.0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학습계좌제 등록 학습자 수	5,000명	10,149명	203.0	9.12	9.12	100.0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실시 확대	전국 확대	전국 확대 실시	100.0	738.8	570.2	77.2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출제기준 정비	39종목	47종목	120.5	20	20	100.0
	·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개최	20회	55회	275.0			
	· 실기시험장 인증제 확대	25기관	29기관	116.0			
	· Q-net과 HRD-net 연계 및 보완	자격훈련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1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노동부에서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해공정 보유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재해자 수 1만명 감소를 위해 재해다발·취약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기술·교육·재정지원 등 집중관리 사업 전개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위해 3,503개소의 사업장에 585억원 지원, 186개소의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자금 용자를 위해 223억원을 지원 하였음.
- 그 결과 산업재해가 2009.11월말 기준 1.56%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104%)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40억원 전액 집행).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사망재해 다발업종, 조선업, 건설현장 등 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화학업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PSM(공정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프로그램 운영, 중점·특별관리 사업장 대상 지방관서 점검 및 안전공단 기술지원 실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SOC나 2,200억 이상의 건설현장 대상 「자율재해 예방 프로그램」 심사·평가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취약시기 대비 1,68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4,351개소 대상 건설안전패트 점검, PSM 이행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 구체화, 174개소 대상 이행수준

평가 및 사업장 차등관리, 860개소 대상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2009.11월말 기준 0.91로 나타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9.9%)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노동부에서는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 및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선, 화학물질의 분류·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 자료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GHS(화학물질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GHS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5,000종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정보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25%)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6억원 중 93.3% 집행).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확대 및 집단보건 관리 위탁,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질환 예방 및 검사 지원,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행태를 변화시켜 생활습관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반월시화 지역산업보건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321개소의 사업장 대상 통합 건강증진사업 1,225회 실시, 1,500개소 대상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6,001회 실시, 220개소 대상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 지원, 1,837개소 대상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전년 대비 뇌심혈관질환자 감소율 49.1%, 금연사업 참여자 중 흡연자 감소율 22.9%, 전년 대비 근골격계질환자 감소율 9.5%로 나타나 각각 당초 목표를 491%, 229%, 9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억원 중 96.7% 집행).

〈표 2-77〉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작업환경개선	산업재해 감소율 재해율 감소율=[전년도 재해율-금년도 재해율]/전년도 재해율×100	1.5% 감소	1.56 감소 (11월말기준)	104.0	840	840	100.0
취약부문 감독강화	사고성 사망만인율: (사고성 사망자 / 총근로자수)×10,000	1.00	0.91(11월 말 기준)	109.9	비예산		
작업환경개선 추진주력 및 화학물질관리의 체계화	개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	4,000종	5,000종	125.0	6	5.6	93.3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뇌심혈관질환자 감소율 : [(전년질환자-금년질환자)/전년 질환자]×100]	· 10%	· 49.1%	· 491.0	9	8.7	96.7
	· 흡연자 감소율: [(흡연자 감소수)/금연사업참여자수]×100]	· 10%	· 22.9%	· 229.0			
	· 근골격계질환자 감소율: [(전년질환자-금년질환자)/전년질환자]×100]	· 10%	· 9.5%	· 95.0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의식 제고율: [(금년도 안전의식-전년도 안전의식) / 전년도 안전의식×100]	5% 증가	· 사업주: 4.3% 증가 · 근로자: 4.2% 증가	· 사업주: 86.0 · 근로자: 84.0	48.2	48.5	100.0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산재예방활동 촉진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전개,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안전운동 민간단체 지원, 무재해운동 추진 등을 통해 산재예방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관심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9년(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TV캠페인(3편), TV기획특집(11편), 라디오캠페인(80편), 신문광고(109회), 옥외전광판 홍보(48개소), 온라인 캠페인(4편), 기획특집보도(42회), 언론보도(1,656회), 지역언론매체 홍보(188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보건의를 고취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2,303회), 노사 자율 유해위험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0종), 안전문화 웹사이트 개발 운영, 안전교육시범학교 운영(10개교), 안전 교육담당교사 지원(16회, 1035명), 안전운동 민간단체 지원(7개소),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지원(2,550개소)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을 지원하였음.

- 그 결과 전년 대비 안전의식 제고율이 사업주는 4.3% 증가하였고 근로자는 4.2% 증가하여 당초 목표를 각각 86%, 8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8.2억원 전액 집행).

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노동부에서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1년간 지급하며 직장복귀자에게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 내에서 실비를 3개월 까지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원직장복귀 촉진 및 직장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중도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원직장 복귀자 647명에 대해 3,13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 직장복귀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의 비율이 83.2%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1.1%)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42억원 중 73.8%를 집행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지원 대상인 원직장 복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노동부에서는 산재 요양종결 후에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자에게 일정 금액 내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및 자영업 창업 등 직업복귀를 촉진하고 창업시 점포 임대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훈련 실효성 극대화 및 확고한 자립 기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산재장해인 5,386명에게 7,401백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 하여(최종예산의 98.7%) 직업훈련 수료자 중 직장복귀자의 비율이 65.3%로 당초 목표의 93.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지원의 경우 2009년에 산재장해인 129명에게 9,155백만원(최종예산 전액)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 점포운영자의 목표소득 달성률이 111.4%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11.4%)한 것으로 나타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산재환자 및 산재장애자를 대상으로 심리불안 해소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욕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직장) 복귀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재활상담 36,878명, 사례관리 대상자 선발 8,454명, 직업 배치자 5,248명을 대상으로 재활집중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8.9%)하였고,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범 운영 실시, 심리재활 프로그램 시범 실시(5개 의료기관 241명),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소속기관에서 직접 운영 :2008년 20개소→2009년 26개소), 사회적응 프로그램 위탁 운영(31개소 545명) 및 재활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활상담사 176명 대상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 중 당해년도에 직업 배치된 사람의 비율이 58%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8.4%)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0억원 중 90% 집행).

〈표 2-7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원직장 복귀지원	고용유자율: {(지원대상 직장복귀자 중 1년이상 고용유자자) / (전체 지원대상 직장복귀자)}×100}	82.3%	83.2%	101.1	42	31	73.8
직업 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 확대	직장복귀율: [(훈련수료자 중 직장복귀자) / (훈련수료자)]×100] 목표소득 달성률: [(점포운영자 월 평균 소득액)/(도시근로자가구주 월 평균소득액)×90%] *점포운영자 소득액 =점포 운영 순수익+장해연금액	70.0%	65.3%	93.3	75	74	98.7
		100%	111.4%	111.4	92	92	100.0
재활상담 강화	· 사례관리달성도: 사례관리 목표달성률- [(사례관리대상자 선정건)/(사례관리목표)×100] · 재활상담·사례 관리에 의한 직업배치 향상: 직업배치율- [당해년도 직업 배치자 / 사례관리 대상자수×100]	· 7,760 명 · 53.5%	· 8,454 명 · 58.0%	· 108.9 · 108.4	10	9	9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은 i)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ii)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iii)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iv)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1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 법의 시행령을 제정·시행하고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고자 함.
- 2009년에는 고령친화제품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에서 KS 등 공인규격의 인증제품으로 확대하여 개선 사항 1건을 추진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웹 DB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촉진 및 산업체 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고령친화산업체 및 용품 등 산업정보 DB를 2,198건 구축하여 당초 목표를 73%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당초 목표치가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달성도는 2010년 후에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예산 0.4억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웹 DB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고령자의 안전보장 및 시장의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노인소비자·공급자에게 제품의 정보 및 시장 현황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용구 정보시스템을 확대하여 구축·운영(2009.12월, 방문자 22만여명)하였으며, 복지용구 정보마당 홈페이지 리뉴얼 등 시스템을 확장함으로써 522개의 제품을 DB에 등재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16%)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고령친화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하지 않음.

〈표 2-79〉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개선사항조사 1회	제도개선 사항발굴	개선사항 1건 추진	100.0	비예산		
고령친화산업 통합 DB개발 및 구축(지경부)	DB 구축수	'10년까지 3,000건	2,198건	73.3	0.4	0.4	100.0
고령친화 통합 DB 구축(복지부)	2008년 등재 제품의 40%	450개 제품	522개 제품등재	116.0	-		

②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국산업규격 등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297개의 제품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 공고하여 당초 목표를 77.3% 달성하였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으로 2개 품목을 지정 고시하여 당초 목표를 66.7% 달성하였음(예산은 고령친화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하지 않음).
 - 당초 우수 제품만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급여 품목으로 가능하였으나, KS 등 모든 규격 인정 제품으로 완화(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됨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다소 저조하였음.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지정기준안을 마련(9월) 하고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12월)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예산은 고령친화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하지 않음).

〈표 2-80〉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 운영	· 2008년 고시 품목의 30% · 2008년 자정된 제품의 30%	· 우수품목 3개 · 우수제품 384개	· 2개품목 · 297개제품	· 66.7 · 77.3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시범운영 여부	시범운영 사업자 수(20개소)	20개소 지정	100.0	-		

③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자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체험관을 구축함으로써 수요 기반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3개 지역(1차년도-광주, 2차년도-성남, 대구)의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참관객은 47천명, 교육훈련참가자 수는 1.2천명, 제품상담건수 2.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예산 133.5억원 전액 집행).

〈표 2-8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립	체험관 운영 여부	구축 및 운영	구축 및 운영	100.0	133.5	133.5	100.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장단기 핵심 전략품목을 발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및 고령친화제품 단기실용화 기술개발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과제 수행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당초 목표를 2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62.7억원 전액 집행).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산업분야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감안하여 장단기 핵심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단계별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전동형 실내 이동, 승강의자겸용 장치 개발연구 등 재활보조기기를 포함하여 13개 과제의 고령친화제품 등에 대해 24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18.2%)하였음(예산은 24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전략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3개 권역에 확충하고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고령친화산업의 전략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개소를 재정하여 13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그 결과 2개 품목의 우수품목 확대, 297개의 우수제품 지정, 550개 제품의 DB 구축 등재로 당초 목표를 각각 66.7%, 77.3%, 122.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3억원 전액 집행).
 - 우수품목 확대의 경우 제약으로 인해 당초 우수품목을 3개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2개만 확대하였기 때문에 목표달성률이 저조하였으며, 우수제품 지정의 경우 기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급여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었으나 이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장기요양 급여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게 변경되어 우수제품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목표달성률이 저조함.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상용화지원기반 구축, 시험인증·테스트

베드 구축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지원 등 산업육성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 추진실적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및 활용성과 확대를 통해 KOLAS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등 홍보체험관 제품전시 590종 실시, 산업체지원 97건 실시, 유통지원 이벤트 20회 개최, 93개사에 대한 박람회 참관지원, 10종의 시험인증 장비 구축, 고령친화용품 실습교육 6회 실시, 10회의 산업 및 단체표준 제정, 1건의 자립화 및 역할재정립을 통해 당초 목표를 각각 178.8%, 121.3%, 333.3%, 93%, 100%, 150%, 100%, 100% 달성하였음(예산 21.6억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거점별로 고령친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IT 융합 전동복지기기, 기능성식품, 한방실버웰니스산업을 구축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동남권 IT 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 한방실버웰니스 산업 육성체계 구축사업, 자립형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3개 RIS 사업을 추진하여 시제품을 13건 제작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30%)하였음(예산 39.5억원 전액 집행).

□ 세계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용품 생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유통망을 갖춘 국내 유망산업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령친화용품 산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단기간에 Star Company로 육성함으로써 내수시장 확대 및 신규기업 창업·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사업자 선발 대상이나 기준, 지원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예산이 불충분하여 사업 추진은 하지 못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2010년 예산 확보 후 추진 계획임(예산 미확보).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전시회 및 박람회를 지원하고 고령친화제품 유통업체 MD 1:1 구매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수요 창출을 촉진하며 고령친화제품 생산 업체 간 기술정보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는 국내·외 박람회지원(총 9회)을 통해 총 102개 산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2.0%)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체 국내의 바이어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82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273.3%)하였음(예산은 1.4억원 전액 집행).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고령친화 우수제품(서비스)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 우수 제품·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245개의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홍보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116.7%)하였고, 우수제품·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31천명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81.9%)하였음. 이 외에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용홍보관 설치·운영 2회, 4개 기업에 대해 2회에 걸쳐 고령친화 우수 기업 발굴 포상/후원 실시
 - 예산은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예산에 포함되어 따로 산출하지 않음.

□ 고령친화산업 홍보 마케팅 및 유통활성화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용품 생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의 방한 유치, 국내 업계와의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 증대와 전시회 정보 및 참가(관) 지원을 통한 산업체 대외 마케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인지도·신뢰도를 증대하고 판매시스템 구축·유통활성화를

통해 산업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 증대 및 산업체 정보·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국내외 총 8회의 박람회에 108개 산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08%)하였으며, 431건의 계약 성사(24억원) 및 1,68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음(예산 1억원 전액 집행).

〈표 2-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전년대비 5%증가	10% 이상 증가	200	62.7	62.7	100.0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지원	2008년 기술개발과제수의 10%		기술개발과제 11개	13개 과제 지원	118.2	20	24	120.0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강화	· 2008년 우수품목의 3%		· 3개 우수품목확대	· 2개품목	· 66.7	1.3	1.3	100.0
	· 2008년 우수제품의 30%		· 384개 우수제품 지정	· 297개 제품	· 77.3			
	· 2008년 등재제품의 400%		· 450개 제품 DB구축 등재	· 550개 제품	· 122.2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 홍보체험관 제품전시		· 330종	· 590	· 178.8	21.6	21.6	100.0
	· 산업체지원		· 80건	· 97	· 121.3			
	· 유통지원 이벤트개최		· 6회	· 20	· 333.3			
	· 박람회 참관지원		· 100개사	· 93	· 93.0			
	· 시험인증 장비구축		· 10종	· 10	· 100.0			
	· 고령친화용품실습교육		· 4회	· 6	· 150.0			
	· 산업 및 단체표준제정		· 10회	· 10	· 100.0			
	· 자립화 및 역할제정립		· 1건	· 1	· 100.0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시제품 제작지원건수		시제품 제작 지원 10건	13건	130.0	39.5	39.5	100.0
세계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기업의 매출 확대		전년대비 매출 10% 증가	사업 검토중	-	-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고령친화산업 관련업체 참여율	100개 기업	102개 기업	102.0	1.4	1.4	100.0
	유통업체 1:1 구매상담회	유통업체 1:1 MD구매상담회 연계 여부	30개 기업	82개 기업	273.3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 수 · 우수제품 · 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자 수		· 총 210개 제품 홍보(누계) · 72천명	· 245개 제품 · 131천명	· 116.7 · 181.9	-	-	-
고령친화제품 마케팅활성화	지원기업체수		전년대비 10% 증가(100개사)	108개사	108.0	1	1	100.0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지식경제부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생활안정성 향상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켜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적 기준을 제·개정함으로써 고령자 욕구충족, 산업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KS P ISO(의지 - 다리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1종, KS P ISO 10535(장애인 운반용 호이스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9종 개정, 목욕의자 등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협회 단체표준 6종 제정으로 총 16건의 제·개정을 통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320%) 하였음(예산 0.2억원 전액 집행).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지식경제부에서는 한국·중국·일본 표준협력체를 통해 고령자 배려 국제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고령자 관련 복지규정에 대한 ISO 위원회에 참여하여 고령자 관련 복지규정 제·개정시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관련 산업 제품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각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기술 협조 및 향후 우리나라 기준의 국제 기준 반영 시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전문가 파견을 통해 동향 파악 및 의견 개진, 전문위원회 개편 및 활성화(회의 개최 5회, 12건의 문건 검토), 한국·일본 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제품인증 현황 정보교류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방안 논의, 동북아 표준화포럼을 통한 한국·중국·일본 복지 관련 제품의 표준협력 합의 등으로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8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제개정 건수	5	16	320.0	0.2	0.2	100.0
국제표준화 동향파악 및 대응	Σ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간협력)	22	22	100.0	비예산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금융위원회에서는 본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사망시까지 노후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중저가 주택 소유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며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11월말 현재 1,058명에 대해 487억원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160.7%)하였음(예산 30억원 전액 집행).

〈표 2-84〉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주택연금 공급실적	303억원	487억원	160.7	30	30	100.0

② 장기국채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기획재정부에서는 초장기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마련을 통한 노후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운용으로 정부의 재정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는 2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가 8.04조원(전체 국고채 대비 9.4%)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88%)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85〉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초장기채 발행	실제발행량/목표발행량×100	5~10%	9.4%	188.0	비예산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국민 인식 전환을 목표로 다각적인 정책(사업) 추진
 - 실천전략은 1) 전략적 홍보·교육,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3개 중영역으로 구성

[그림 2-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기본계획구조



1.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인식을 전환 시키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홍보(TV,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 라디오 캠페인 광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동영상 등)를 실시
 - 2009년에 홍보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이 81.4%로 나타나, 당초목표(59.0%)를 초과달성(138.0%)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2억원 전액 집행).
 - 구체적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롯데백화점 간 출산장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공동 캠페인을 전개(3년간 150억 투자)
 - 일반국민 및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공모전, 제1회 다둥이가족

가을나들이, 아가사랑 음악회 등 실시

- UCC, 포털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경진대회, 배너홍보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관련 언론보도가 2,672건으로 증가(2008년 대비 405.4% 증가)하였으며, 국민인식도(저출산·고령화 심각성 인식)가 94.7% (2008년 72.8%)로 증가하였음.
- 인구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이버교사 연수프로그램 마련,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표 2-86〉 전략적 홍보·교육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전략적 홍보 교육	(저출산·고령화심각성×0.2)+(저출산·고령화본인연관성 인식도×0.2)+(출산친화적 문화장려 동의도×0.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0.3)	59.0	81.4	138.0	22	22	100.0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출산 친화사회환경 조성과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정부, 기업, 노동,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 사회부문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 및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이후 매년 사회협약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점검 TF(관련 14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를 운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음.
- 2009년에는 중앙 및 16시·도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출범⁵⁴⁾ 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목표를 달성

54) 중앙본부 출범(2009.6.9), 시·도본부 출범(2009.6.10~8.31)

하였음(비예산사업).

- 경제 5단체, 종교계 7대종단, 여성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중앙지역본부를 합해 전국 567개 단체가 참여
-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정부에서 각각 출산양육 지원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행동계획55)을 선언(2006.9월 중앙정부 출범식)
- 운동본부 대표사업 논의를 위한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

〈표 2-87〉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전국적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축	구축	100.0	비예산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예산 0.8억원 중 92.5% 집행).
- 2009년에는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성과평가결과 보고서 국회제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제출	제출	100.0	0.8	0.74	92.5

- 55) 행동계획 선언 내용 : i) 종교계: 생명존중 운동, 결혼예비학교 운영 등 행복한 가정 조성, ii) 경제계 :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 패밀리데이(정시퇴근 장려운동) 운영, 사회공헌 활동 확대, iii) 시민사회계 : 양성평등 문화조성, 미혼모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iv) 정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주택분양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제5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1. 목표달성도 비교

- 분야별로 당초 사업목표(성과지표상)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저출산분야(85.6%), 고령사회분야(89.3%), 성장동력분야(89.6%), 국민인식개선분야(100.0%) 등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인 사업들은 저출산분야의 경우 4개(4.4%), 고령사회분야 6개(10.7%), 성장동력분야 3개(3.9%), 국민인식개선분야 0개로 고령사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표 2-89〉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전체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전체	6(2.7)	7(3.1)	14(6.2)	199(88.1)	226(100.0)
저출산분야	2(2.2)	2(2.2)	9(10.0)	77(85.6)	90(100.0)
고령사회분야	4(7.1)	2(3.6)	-	50(89.3)	56(100.0)
성장동력분야	-	3(3.9)	5(6.5)	69(89.6)	77(100.0)
국민인식개선분야	-	-	-	3(100.0)	3(100.0)

가.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 저출산분야는 정책 특성에 따라 3개 중영역, 10개 소영역(90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1) 중·소영역간 비교

- 저출산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사업들의 비율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88.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84.8%,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84.2%로 세 영역 모두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신혼부부 출발지원” 소영역 100.0%,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 85.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 85.7%,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 76.9% 순으로 높음.

- “신혼부부 출발지원” 소영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에서는 21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70~90% 수준, 1개 사업은 50~70% 수준임.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에서는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임.
-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에서는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70~90% 수준, 1개 사업은 50~70% 수준임.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 88.9%,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소영역 85.7%,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 66.7% 순으로 높음.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의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50% 미만 수준임.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소영역에서는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목표를 90.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50% 미만 수준임.
-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에서는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목표를 90.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임.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소영역 100.0%,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소영역 87.5%,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소영역 85.7% 순으로 높음.

-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소영역에서는 2개 사업 모두 당초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소영역에서는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70~90% 수준임.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소영역에서는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임.

〈표 2-90〉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분야	2 (2.2)	2 (2.2)	9 (10.0)	77 (85.6)	90 (100.0)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2 (4.3)	5 (10.9)	39 (84.8)	46 (100.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	-	-	5 (100.0)	5 (100.0)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1 (4.8)	2 (9.5)	18 (85.7)	21 (100.0)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1 (14.3)	6 (85.7)	7 (100.0)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 (7.7)	2 (15.4)	10 (76.9)	13 (100.0)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 (10.5)	-	1 (5.3)	16 (84.2)	19 (100.0)
2-1. 모성보호 강화	-	-	1 (33.3)	2 (66.7)	3 (100.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 (11.1)	-	-	8 (88.9)	9 (100.0)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1 (14.3)	-	-	6 (85.7)	7 (10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	3 (12.0)	22 (88.0)	25 (100.0)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	1 (14.3)	6 (85.7)	7 (100.0)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	2 (12.5)	14 (87.5)	16 (100.0)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	-	-	2 (100.0)	2 (100.0)

(2) 세부영역간 비교(부진사업 중심)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 목표달성도가 50~70% 수준인 사업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 대상자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추정을 다소 높게 잡은 것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세 가지인데 이 중 차상위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이 2009년에 처음으로 전국 확대 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달성도가 52.7%에 머물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사업의 목표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사업

- 없음.

〈표 2-9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 결혼 관련 정보 제공				○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입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차등보육비 지원				○
	• 차등교육비 지원				○
	• 만5세아 무상보육비				○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 장애아 무상보육비				○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 두자녀이상 보육비				○

〈표 2-91〉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
	• 보육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 보험혜택 확대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혁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 동네 품앗이 육아방 구축 사업				○
	• 종일반 운영 확대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 산전검사료 지원				○
	• 찾아가는 산부인과				○
	•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 보충영양관리				○
	•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 급여 확대				○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 불임시술 지원확대				○
	• 산모도우미 지원				○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 목표달성도가 50~70% 수준인 사업
 - 없음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사업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의 경기침체로 여성고용여건이 취약·신규채용 부진, 여성취업자 감소 등)해짐에 따라 목표달성도가 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에 의해 당초 계획하였던 가족친화마을 2개소를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 근로형태 유연화			○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기능강화 •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화 관련 학교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표 2-92〉 계속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내실화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여가문화 지원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환경 조성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목표달성도가 50~70% 수준인 사업
 - 없음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사업
 - 없음

〈표 2-9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아동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제험발달 서비스			○	○

〈표 2-93〉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 흡연 등 건강 유해 행태 감소 추진				○
	• 학교흡연예방교육				○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 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나.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 ☐ 고령사회분야는 정책 특성에 따라 4개 중영역, 10개 소영역(세부사업 56개)으로 구분되어 있음.

(1) 중·소영역간 비교

- ☐ 고령사회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사업들의 비율은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100.0%,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100.0%이며,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88.9%,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77.3% 순으로 높음.
-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 86.7%,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 57.1% 순으로 높음.
-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의 1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50% 미만 수준임.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의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50~7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사업이 1개, 5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사업은 2개임.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에 속한 모든 소영역(노후건강 관리 기반 조성,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 권익 증진)은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의 8개 사업 모두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의 7개 사업 모두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노인 권익 증진” 소영역의 4개 사업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에 속한 모든 소영역(노인일자리 창출,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은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창출” 소영역 사업(1개)은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의 5개 사업 모두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소영역 100.0%,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소영역 83.3% 순으로 높음.
 -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소영역의 5개 사업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은 50~70% 수준임.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소영역의 3개 사업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표 2-9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고령사회분야	4 (7.1)	2 (3.6)	-	50 (89.3)	56 (100.0)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4 (18.2)	1 (4.5)	-	17 (77.3)	22 (100.0)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2 (13.3)	-	-	13 (86.7)	15 (100.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2 (28.9)	1 (14.3)	-	4 (57.1)	7 (10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	-	-	19 (100.0)	19 (100.0)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	-	8 (100.0)	8 (100.0)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	-	7 (100.0)	7 (100.0)
2-3. 노인 권익 증진	-	-	-	4 (100.0)	4 (100.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	-	-	6 (100.0)	6 (100.0)
3-1. 노인일자리 창출	-	-	-	1 (100.0)	1 (100.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	-	5 (100.0)	5 (100.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	1 (11.1)	-	8 (88.9)	9 (100.0)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1 (16.7)	-	5 (83.3)	6 (100.0)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	-	3 (100.0)	3 (100.0)

(2) 세부영역간 비교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은 다른 중영역에 비해 목표달성도가 다소 낮으나, 실제로는 22개 사업 중 총 17개 사업들이 목표를 90%이상 달성 하였고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에서 2개의 사업이 목표의 50% 미만을,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에서 1개의 사업이 목표의 50~70%를, 2개의 사업이 목표를 50%미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소영역별로는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에서는 13개 사업이 당초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가 50%를 달성하지 못했고, 특수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준비금 계산

제도가 불비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의 경우,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과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에서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남.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사업은 세법령 개정이 2010년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2009년에 시행되지 않았음.

〈표 2-95〉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고	○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공무원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사학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군인연금)				○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개인연금 활성화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의 경우 총 19개 사업은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 질환 예방				○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의 경우, 총 6개의 사업 모두 90.0%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7〉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8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1개 사업만이 목표의 50~7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소영역에서는 모두 목표를 달성함.
-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소영역의 경우 사업들 대부분 목표를 달성함.
- 다만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통합(2009.10)되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사업 연기되어 달성률이 50~70%사이로 나온 것으로 나타남.

〈표 2-98〉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가구 주거자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유도				○

다.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분야는 정책 특성에 따라 3개 중영역, 9개 소영역(77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1) 중·소영역간 비교

- 성장동력분야의 중영역별로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인 사업들의 비율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94.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85.0%, ‘고령친화산업 육성’ 83.3% 순으로 높음.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 100.0%,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 87.5% 순으로 높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에서는 각각 11개, 12개 사업이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에서는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50~70% 수준임.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 비율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 87.5%,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 83.3% 순으로 높음.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에서는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각각 1개씩의 사업들이 70~90%, 50~70%의 수준임.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에서는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이 70~90% 수준임.

〈표 2-99〉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성장동력분야	-	3 (3.9)	5 (6.5)	69 (89.6)	77 (100.0)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2 (5.1)	-	37 (94.9)	39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	-	11 (100.0)	11 (10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	-	12 (100.0)	12 (100.0)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조성	-	2 (12.5)	-	14 (87.5)	16 (100.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1 (5.0)	2 (10.0)	17 (85.0)	20 (100.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1 (8.3)	1 (8.3)	10 (83.3)	12 (10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	-	1 (12.5)	7 (87.5)	8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3 (16.7)	15 (83.3)	18 (100.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	-	2 (33.3)	4 (66.7)	6 (100.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1 (12.5)	7 (87.5)	8 (100.0)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	2 (100.0)	2 (100.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2 (100.0)	2 (100.0)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별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소영역, “고령사회의 금융 기반 조성” 소영역이 각각 100.0%,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소영역 87.5%,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소영역 66.7% 순임.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소영역에서는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2개 사업이 70~90% 수준임.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소영역에서는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개 사업이 70~90% 수준임.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와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소영역에서는 각각 2개 사업이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2) 세부영역간 비교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경우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37개로 전체 사업의 94.9%를 차지함.
- 소영역별로 90%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 비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의 경우 100.0%,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의 경우 87.5%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의 경우 모든 세부사업이 당초 목표를 90.0%이상 달성하였음.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에서는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목표를 9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사업이 목표를 50~7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사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문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워 당초목표(전문외국인력 체류자 증가율)의 절반정도(54.0%)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방송노출 회피 등으로 방송제작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목표의 60.5%만을 달성하였음.

〈표 2-100〉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여성고용 정책 강화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사업(교과부)				○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표 2-100〉 계속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 친화적 공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사업				○
	• 여성 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여성인력개발추진체계 개선				○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 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장년 제도 개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 장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1-3. 외국적동포 ·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활용	• 외국적동포 취업절차 개선				○
	• 외국적동포의 체류지원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유치	• 해외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 해외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		
외국인고용허가 제의 조기 정착	• 고용허가제도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적응지원체계 구축				○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17개로 전체 사업의 85.0%를 차지함.
- 소영역별로 90%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 비율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 87.5%,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 83.3% 순으로 나타남.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의 경우,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1종’과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1종’ 두 가지인데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는 완료하여 달성률이 100%이지만 진로개발 표준모델 1종이 완료되지 못하여 달성률이 0%가 되는 바람에 50%의 달성률을 보임. ‘진로개발 표준모델 1종’의 경우 차년도 과제로 진행할 예정임.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2009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 만족도가 66.2%로 당초 목표인 78%보다 낮게 나와 목표달성률이 87.9%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의 경우,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목표를 9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사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달성도가 86%, 84%에 그쳐 전반적으로 목표를 8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1〉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표 2-101〉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노동부)				○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교과부)				○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노동부)				○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교과부)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 직업훈련 강화 및 장업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15개로 전체 사업의 83.3%를 차지함.

○ 소영역별로 90%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 비율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소영역과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소영역 100.0%, “고령친화 제품 기술개발 촉진” 소영역 87.5%,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소영역 66.7% 순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소영역에서는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식경제부)’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치가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기준시 목표달성도가 73%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사업의 경우, 당초 우수 제품만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급여 품목으로 가능했으나 모든 규격 인정 제품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72.0%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소영역에서는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사업의 경우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사업과 같이 당초 우수 제품만이 장기노인 요양보험 급여 품목으로 기능했으나 모든 규격 인정 제품으로 기준이 완화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소영역과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소영역의 경우 모든 세부과제 사업이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표 2-102〉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정부)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복지부)				○
우수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지정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지정부)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 홍보 마케팅 및 유통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재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장기주택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는 3개 중영역에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2-103〉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	3 (100.0)	3 (100.0)
1. 전략적 홍보·교육	-	-	-	1 (100.0)	1 (100.0)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¹⁾	-	-	-	1 (100.0)	1 (100.0)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	-	1 (100.0)	1 (100.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중영역의 경우 3개 사업 모두 목표를 90% 이상 달성함.

- 소영역별로도 모든 소영역 사업이 당초목표를 90.0%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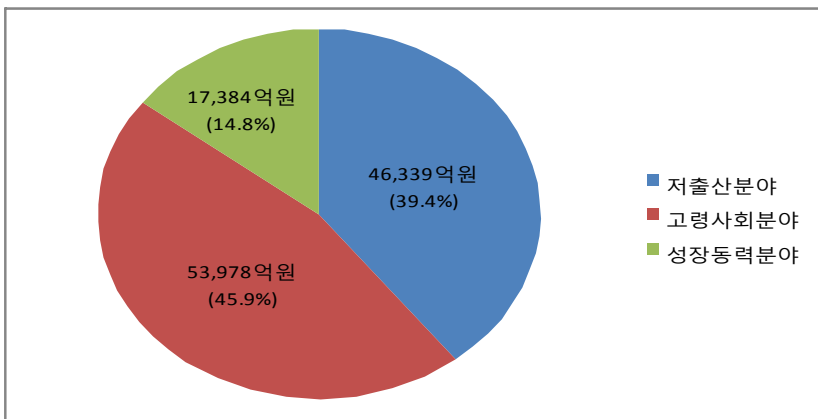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전략적 홍보·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2. 예산집행실적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예산사업 145개, 비예산사업 78개로 구성⁵⁶⁾

○ 예산은 총 11조8천억원으로 저출산분야 4조6천억원(39.4%), 고령사회 분야 5조4천억원(45.9%), 성장동력분야 1조7천억원(14.8%)으로 구성됨.

[그림 2-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 비율은 91.0%로 대부분이며, 70~90%인 사업의 비율은 6.9%, 70%미만인 사업의 비율은 2.1%로 나타남.

○ 분야별로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비율은 저출산분야 89.1%, 고령사회분야 100%, 성장동력분야 89.3%, 국민인식개선분야 100.0%
 - 예산집행률이 70%미만인 사업은 저출산분야의 경우 3개(전체 사업 중 4.6%)로 타 분야에 비해 많은 편

56) 3개 사업은 예산이 다른 300여 개 사업과 함께 관리되어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표 2-10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전체	1(0.7)	2(1.4)	10(6.9)	132(91.0)	145(100.0)	78
저출산분야	1(1.6)	2(3.1)	4(6.3)	57(89.1)	64(100.0)	23
고령사회분야	-	-	-	23(100.0)	23(100.0)	33
성장동력분야	-	-	6(10.7)	50(89.3)	56(100.0)	21
국민인식개선분야	-	-	-	2(100.0)	2(1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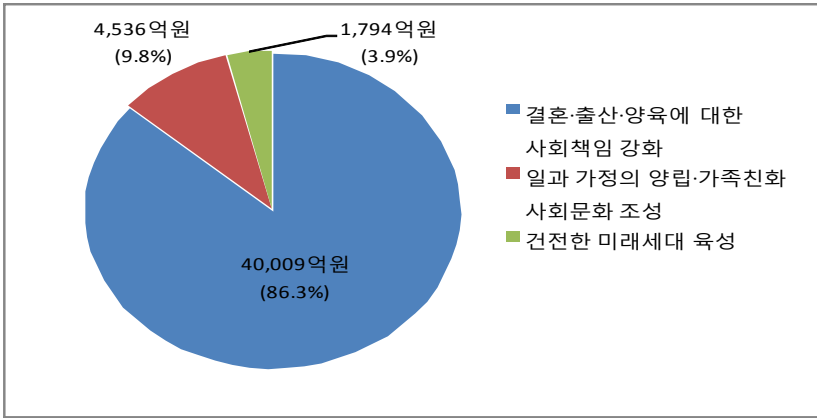
가. 저출산분야

- 저출산분야 정책은 예산사업 64개와 비예산사업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조 6339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 중 89.1%는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70~90%를 집행한 사업은 6.3%, 예산을 70%미만 집행한 사업은 4.6%로 나타남.

(1) 중·소영역

- 중영역별 예산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0조원 (86.3%),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536억원(9.8%),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794억원(3.9%) 순임.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93.7%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91.2%로 양호하나,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의 경우 78.6%로 다소 부진

[그림 2-13] 저출산분야 예산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4조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86.3%가 집중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의 예산은 3조 6,20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남(전체 저출산 예산의 78.1%).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예산은 2,049억원으로 4.4%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의 예산은 1,754억원으로 3.8%를 각각 차지
 - ‘신혼부부 출발지원’ 소영역의 예산은 5억원으로 0.01%에 불과
- 예산을 90% 이상인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신혼부부 출발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00.0%,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88.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83.3%로 대체로 예산이 적은 영역에서 예산집행률이 높음.
 - “신혼부부 출발지원” 소영역에 포함된 1개 예산사업은 예산을 100% 집행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에 포함된 17개 예산사업 중 15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2개 사업은 50~70% 집행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에 포함된 6개 예산

사업 중 5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집행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에 포함된 10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4,536억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9.8%를 차지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의 1/9 수준에 불과
- 소영역별로는 ‘모성보호 강화’ 3,601억원(7.8%),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30억원(1.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406억원(0.9%) 순
- 예산을 90% 이상인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100.0%로 “모성보호 강화” 66.7%와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66.7%에 비해 높은 수준
-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에 포함된 3개 예산사업 중 2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6개 예산사업 중 4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1개 사업은 50%미만 수준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5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음.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 동 중영역의 예산은 1,794억원으로 저출산분야 전체예산 중 3.9%를 차지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의 1/22 수준으로 아주 적음.
- 소영역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280억원(2.8%),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373억원(0.8%),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41억원(0.3%) 순임.

- 소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들의 비중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00.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87.5% 순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소영역과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소영역에 포함된 6개와 2개 예산사업 모두 100% 이상 집행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소영역에 포함된 8개 예산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집행

〈표 2-106〉 저출산분야 중 · 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저출산분야	46,339.4	100.0	1 (1.6)	2 (3.1)	4 (6.3)	57 (89.1)	64 (100.0)	23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0,009.4	86.34	-	2 (5.9)	1 (2.9)	31 (91.2)	34 (100.0)	12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5.0	0.01	-	-	-	1 (100.0)	1 (100.0)	4 ¹⁾
1-2. 자녀양육 기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36,201.8	78.12	-	2 (11.8)	-	15 (88.2)	17 (100.0)	4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049.0	4.42	-	-	1 (16.9)	5 (83.3)	6 (100.0)	1 ¹⁾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753.6	3.78	-	-	-	10 (100.0)	10 (100.0)	3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536.3	9.79	1 (7.1)	-	2 (14.3)	11 (78.6)	14 (100.0)	5
2-1. 모성보호 강화	3,600.7	7.77	-	-	1 (33.3)	2 (66.7)	3 (100.0)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405.6	0.88	1 (16.7)	-	1 (16.7)	4 (66.7)	6 (100.0)	3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530.0	1.14	-	-	-	5 (100.0)	5 (100.0)	2 ¹⁾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793.8	3.87	-	-	1 (6.3)	15 (93.7)	16 (100.0)	6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373.1	0.81	-	-	-	6 (100.0)	6 (100.0)	1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²⁾	1,279.7	2.76	-	-	1 (12.5)	7 (87.5)	8 (100.0)	5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41.0	0.3	-	-	-	2 (100.0)	2 (100.0)	-

주: 1) 사업들 중 예산이 다른 과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포함시켰음.

2) 과제는 16개이나 3개 과제는 예산 분리가 안돼 집행률을 구하기 어려움.

(2) 세부영역간 비교

□ 저출산분야의 예산은 특정한 몇몇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은 극히 미흡한 실정

-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사업만 해도 전체 저출산예산 중 71.6%를 차지하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5.1%)’,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4.3%)’,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3.8%)’,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3.5%)’,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3.5%)’ 등 6대 사업의 비중은 전체 예산 중 90%를 상회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액은 10% 이내에 불과

〈표 2-107〉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액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33,154.5	71.55	71.6
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356.0	5.08	76.6
3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1,978.0	4.27	80.9
4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749.0	3.77	84.7
5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630.0	3.52	88.2
6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622.7	3.50	91.7
7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88.0	1.48	93.2
8	아동의 발달 지원	583.0	1.26	94.4
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506.0	1.09	95.5
10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404.0	0.87	96.4
11	육아지원 시설 확충	385.0	0.83	97.2
12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371.4	0.8	98.0
13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24.5	0.48	98.5
14	국내입양 활성화	125.7	0.27	98.8
15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14.0	0.25	99.0
16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113.9	0.25	99.3
17	드림스타트 활성화	75.0	0.16	99.4
18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66.0	0.14	99.6
19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58.0	0.13	99.7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43.9	0.09	99.8
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기반 조성	34.7	0.07	99.9
2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34.0	0.07	99.9
23	유해환경 차단 강화	7.0	0.02	100.0
24	결혼·출산 주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5.0	0.01	100.0
25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4.6	0.01	100.0
26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3.2	0.01	100.0

〈표 2-107〉 계속

순위	세부사업(정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27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0.9	0	100.0
28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0.7	0	100.0
29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0.7	0	100.0
30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0.1	0	100.0
31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0.0	0	100.0
3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0.0	0	100.0
3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0.0	0	100.0
34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0.0	0	100.0

□ 세부사업(정책)별로 예산집행률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며,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조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 사업들 중 ‘I·사랑카드 도입’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예산집행률이 52.5%로 저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사업 대상자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추정을 다소 높게 잡았는데다가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예산집행률이 64.1%로 저조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 사업들 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사업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야간 근무를 꺼려 예산집행률이 71.8%로 다소 저조

〈표 2-108〉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 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 결혼 관련 정보 제공				○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 산·육아 교육 강화					○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 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 리 마련 지원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보육·교육비 지원 의 선진화	• 차등보육비 지원				○	
	• 차등교육비 지원				○	
	• 만5세아 무상보육비				○	

〈표 2-108〉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 의 선진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비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비				○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			
	·보육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아 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 감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혁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자다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지원가정기관 운영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보육시 설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비 서비스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종일반 운영 확대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산전검사로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 강관리 체계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보충영양관리				○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 험급여 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불임기술 지원확대				○	
	·산모도우미 지원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 원까지 확대				○	

주 : △는 비예산 사업은 아니나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산출하기 힘든 경우임.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에 포함된 사업들 중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사업의 경우 예산에 비해 산전후휴가 사용 인원 감소로 예산집행률이 82.1%로 상대적으로 저조

〈표 2-109〉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활성화				○	
및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형태 유연화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 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기능강화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화 관련 학교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주 : △는 비예산 사업은 아니나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산출하기 힘든 경우임.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예산사업들 중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른 여성고용 여건

악화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당초예산의 20.0%만 집행,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역시 지원대상 감소로 예산의 74.0%만 집행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 동 중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영역에 포함된 예산사업들 중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수가 당초 목표에 이르지 못해 예산집행률이 85.9%로 다소 저조

〈표 2-11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 아동안전지킴이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사업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예산 분리 불가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예산 분리 불가			
	• 아동체험발달 서비스		예산 분리 불가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 입양부보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표 2-110〉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 흡연 등 건강 유해 행태 감소 추진					○
	• 학교흡연예방교육				○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나. 고령사회분야

□ 고령사회분야는 예산사업 23개와 비예산사업 3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5조3,978억원으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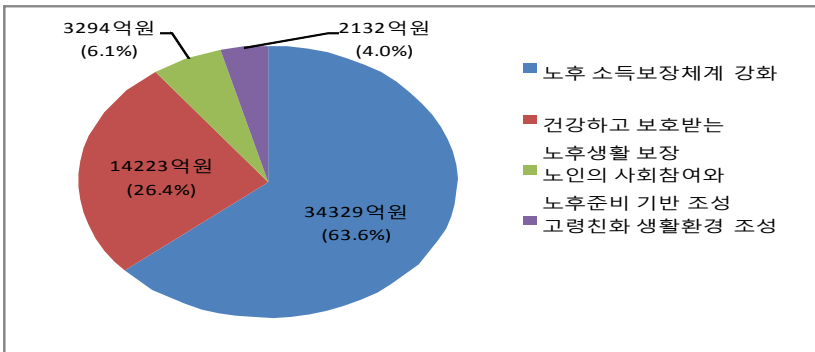
○ 23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1) 중·소영역간 비교

□ 중영역별 예산은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조4,329억원,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1조4,223억원,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294억원,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2,132억원 순

○ 이들 4개의 중영역에 속한 예산사업들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그림 2-14] 고령사회분야 예산



□ 각 중영역에 포함된 소영역 간 예산규모는 큰 편차를 보이나, 예산집행률은 모두 90% 이상 집행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에 포함된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의 예산은 고령사회정책 전체예산의 무려 63.6%를 차지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중영역에 포함된 “노인 권익 증진” 소영역의 예산은 15.6%,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의 예산은 9.8%를 차지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에 포함된 소영역들을 포함한 나머지 소영역들의 예산은 5% 미만으로 적은 수준

〈표 2-111〉 고령사회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70%	70~90%	90%이 상		
고령사회분야	53,977.8	100.00	-	-	-	23 (100.0)	23 (100.0)	33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4,328.7	63.60	-	-	-	2 (100.0)	2 (100.0)	20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34,324.0	63.59	-	-	-	1 (100.0)	1 (100.0)	14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4.7	0.01	-	-	-	1 (100.0)	1 (100.0)	6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14,223.1	26.35	-	-	-	12 (100.0)	12 (100.0)	7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515.6	0.96	-	-	-	4 (100.0)	4 (100.0)	4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5,304.6	9.83	-	-	-	4 (100.0)	4 (100.0)	3
2-3. 노인 권익 증진	8,402.9	15.57	-	-	-	4 (100.0)	4 (100.0)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293.5	6.10	-	-	-	6 (100.0)	6 (100.0)	-
3-1. 노인일자리 창출	1,602.0	2.97	-	-	-	1 (100.0)	1 (100.0)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691.5	3.13	-	-	-	5 (100.0)	5 (100.0)	-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2,132.4	3.95	-	-	-	3 (100.0)	3 (100.0)	6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2,049.0	3.80	-	-	-	1 (100.0)	1 (100.0)	5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83.4	0.15	-	-	-	2 (100.0)	2 (100.0)	1

(2) 세부영역간 비교

- 세부영역별로 소요된 예산의 비중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3.6%, 독거노인 보호 강화 15.5%로 2개 사업에 전체예산의 80% 정도가 집중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6.1%,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8%,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3.7% 등을 합할 경우 총 5개 세부영역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93% 정도를 차지

〈표 2-112〉 고령사회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4324.0	63.6	63.6
2	독거노인 보호 강화	8348.0	15.5	79.1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3284.0	6.1	85.1
4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49.0	3.8	88.9
5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2020.6	3.7	92.7
6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684.5	3.1	95.8
7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602.0	3.0	98.8
8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388.4	0.7	99.5
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107.2	0.2	99.7
10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83.4	0.2	99.8
1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54.9	0.1	99.9
12	차별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20.0	0.0	100.0
1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7.0	0.0	100.0
14	퇴직연금제도 확대	4.7	0.0	100.0
15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	0.0	100.0
1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	0.0	100.0
17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0	0.0	100.0
18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0	0.0	100.0
1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0	0.0	100.0
20	개인연금 활성화	0	0.0	100.0
21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0	0.0	100.0
2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0	0.0	100.0

- 각 영역에 포함된 예산사업들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경우 예산사업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퇴직연금제도확대(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로 이들 모두 예산을 90.0% 이상 집행

〈표 2-113〉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공무원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사학 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군인연금)					○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간 가입·간 연계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개인연금 활성화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의 경우 12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0% 이상 집행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암검진 수검률 제고,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 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눈, 귀건강 등 질환관리,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충,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효행자 표창·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해당

〈표 2-11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등급외 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의 6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0% 이상 집행

-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표 2-115〉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¹⁾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²⁾				○	

주: 1) 국비 기준임(현재 지방비 미집계된 상태임)

2) 사업에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각각 있으나, 예산 사업으로 카운트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의 경우 3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0% 이상 집행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저상버스·도시철도·수도권 전철), 가사활동 지원, 지역자원·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가 해당

〈표 2-116〉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가구 주거환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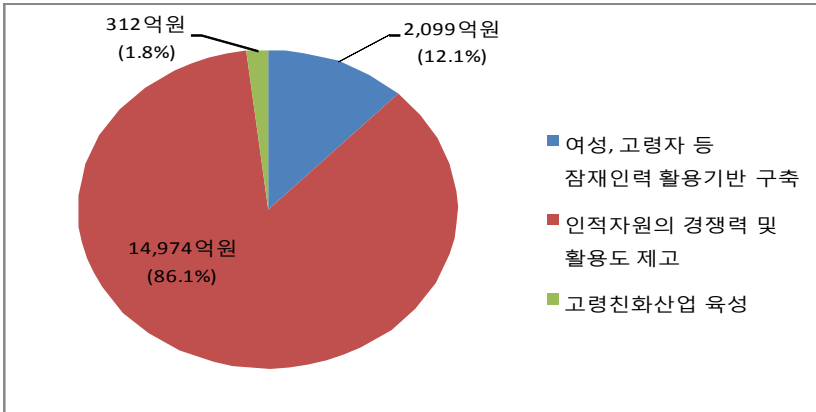
다.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률

- 성장동력분야는 예산사업 56개와 비예산사업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조7,384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들 중 89.3%가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0.7%가 예산을 70~90% 집행

(1) 중·소영역간 비교

- 중영역별 예산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조4,974억원,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099억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312억원 순
- 중영역별로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의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 100.0%,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88.2%,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경우 85.7% 순

[그림 2-15] 성장동력분야 예산



- 소영역별로는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에 성장동력 분야 전체예산 중 80%(79.7%) 수준이 집중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6.5%,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5.4% 및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5.0%를 합하면 예산 대부분을 차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1.8%) 전체(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의 예산 비중은 2% 미만으로 미약한 수준
- 예산규모가 큰 소영역일수록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경우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들의 비중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00.0%,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87.5%,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2.7% 순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8개 예산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에 포함된 11개 예산사업 중 8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은 70~90% 수준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비중은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90.0%,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85.7% 순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에 포함된 10개 예산사업 중 9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에 포함된 7개 예산사업 중 6개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은 70~90% 수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 11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표 2-117〉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성장동력분야	17,384.0	100.0	-	-	6 (10.7)	50 (89.3)	56 (100.0)	21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098.5	12.07	-	-	4 (14.3)	24 (85.7)	28 (100.0)	1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96.6	1.71	-	-	-	9 (100.0)	9 (100.0)	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869.6	5.00	-	-	3 (27.3)	8 (72.7)	11 (100.0)	1
1-3. 외국인력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 회통합 기반조성	932.3	5.36	-	-	1 (12.5)	7 (87.5)	8 (100.0)	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4,973.9	86.14	-	-	2 (11.8)	15 (88.2)	17 (100.0)	3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 계 확립	13,851.7	79.68	-	-	1 (10.0)	9 (90.0)	10 (100.0)	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122.2	6.46	-	-	1 (14.3)	6 (85.7)	7 (100.0)	1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1.6	1.79	-	-	-	11 (100.0)	11 (100.0)	7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133.9	0.77	-	-	-	2 (100.0)	2 (100.0)	4 ¹⁾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47.5	0.85	-	-	-	7 (100.0)	7 (100.0)	1 ¹⁾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0.2	0.00	-	-	-	1 (100.0)	1 (100.0)	1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0.0	0.17	-	-	-	1 (100.0)	1 (100.0)	1

주: 1) 사업들 중 예산이 다른 과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포함시켰음.

(2) 세부영역간 비교

□ 세부영역별로 5개 세부영역에 전체예산의 90%가 집중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에 72.9%의 예산이 집중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6.3%),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5.2%),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3.9%),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2.5%),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2.2%)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93% 수준
-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은 2%미만으로 미약한 수준

〈표 2-118〉 성장동력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12,673.0	72.9	72.9
2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097.2	6.3	79.2
3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903.2	5.2	84.4
4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679.0	3.9	88.3
5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429.6	2.5	90.8
6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379.2	2.2	93.0
7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282.7	1.6	94.6
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19.0	1.3	95.9
9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47.5	0.8	96.7
10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133.5	0.8	97.5
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123.0	0.7	98.2
1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83.0	0.5	98.7
13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81.5	0.5	99.1
14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50.3	0.3	99.4
15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31.4	0.2	99.6
16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0.0	0.2	99.8
17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5.9	0.1	99.9
18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11.3	0.1	100.0
19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2.6	0.0	100.0
20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0.5	0.0	100.0
21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0.4	0.0	100.0
22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0.2	0.0	100.0
23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 표시제도 도입	0.0	0.0	100.0
24	장기국채시장 육성	0.0	0.0	100.0

□ 세부영역(사업)별 예산집행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집행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소영역에 포함된 9개 예산사업 모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에 포함된 11개 예산사업 중 8개, 그리고 “외국적동포 및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에 포함된 8개 예산사업 중 7개가 예산을 90% 이상 집행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소영역의 경우,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89.3%,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88.2%, ‘정년제도 개선’ 사업은 정년연장장려금 지급 대상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79.3% 등 예산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소영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노동부)’의 예산집행률이 76.4%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된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리비용의 감소나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

〈표 2-119〉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여성고용 정책 강화	• 공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사업(교과부)					○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 친화적 공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사업				○	
	• 여성 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여성인력개발추진체계 개선				○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 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 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중·고령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 중·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표 2-119〉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3. 외국적동포 ·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활용	• 외국적동포 취업절차 개선					○
	• 외국적동포의 체류지원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유치	• 해외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 해외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 고용허가제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적응지원체계 구축				○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에 포함된 10개 예산사업 중 9개(90.0%),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의 7개 예산사업 중 6개(85.7%)가 예산을 90% 이상 집행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에서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77.2%로 다소 낮은데 이는 훈련 후 바로 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1달 반에서 2달 반 정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9년 11~12월에 받은 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소영역에서는 ‘직장복귀지원금 확대’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73.8%로 다소 낮으며, 주된 이유로는 경기 불황으로 지원 대상인 원직장 복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

〈표 2-120〉 성장동력분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 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노동부)				○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교과부)					○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노동부)				○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교과부)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 포함된 11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표 2-121〉 성장동력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정부)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복지부)					△

〈표 2-121〉 계속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우수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복지부)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중 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 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복지8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지경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지경부)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 홍보 마케팅 및 유통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 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장기국채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주 : △는 비예산 사업은 아니나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산출하기 힘든 경우임.

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동 분야에 포함된 2개 예산사업 모두 예산을 90% 이상 집행

〈표 2-1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평가항목	(단위: 사업수, %)				계	비예산 사업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	2 (100.0)	2 (100.0)	1
1. 전략적 홍보·교육	-	-	-	1 (100.0)	1 (100.0)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	-	-	-	1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	-	1 (100.0)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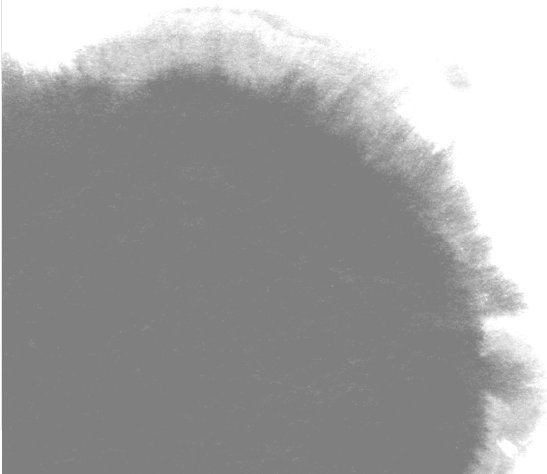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 소영역별로는 비예산사업인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소영역의 사업 모두 예산을 90.0%이상 집행

〈표 2-12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전략적 홍보·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03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3장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 각 성과지표가 갖는 고유한 의미 내지 개념을 이용하여 2009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실적을 세부영역별로 평가함(성과지표별 평가).
- 성과지표별 평가는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함.
 - 각 성과지표는 대부분 세부사업(정책)들의 실적을 조합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그 바탕이 되는 추진실적을 연계·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성과분석에 적용된 성과평가 척도는 [부록]에 제시함.

1. 저출산 분야

1-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중영역)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중영역은 i) 신혼부부 출발지원, ii)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iii)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iv)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4개 소영역으로 구성
- ‘신혼부부 출발지원’ 소영역에는 결혼 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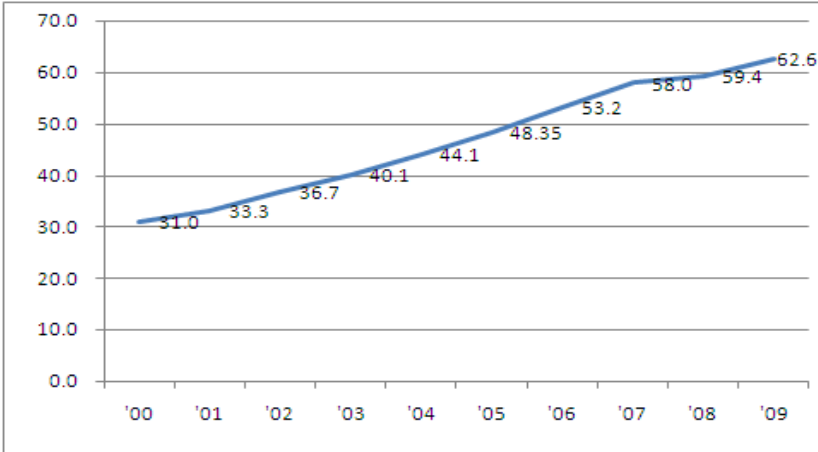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의 소영역에는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소영역에는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에는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이 포함됨.
- 동 중영역에 포함된 세부영역들 중 상당부분은 보육·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되어 있어, 그 성과는 ‘육아서비스이용률’ 성과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의 세부 영역들 중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이 가계에 도움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육·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게 됨.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경우에는 세부 영역들 모두 직접적으로 보육·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text{육아서비스이용률} = \frac{\text{보육시설이용아동수} + \text{유치원이용아동수}}{\text{전체영유아수(6세미만)}} \times 100$$

- 2009년도 육아서비스이용률은 62.6%로, 동 사업들의 성과점수는 5점으로 측정됨.
- 2009년도 성과는 2008년도 59.4%에 비해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육아서비스이용률 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1-1-1. 신혼부부 출발지원(소영역)

- 동 소영역은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의 세부영역이 포함됨.
 -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의 경우 결혼 관련 정보제공,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등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이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마땅한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음.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로 당초계획 대비 신혼부부 주택 공급비율을 책정할 수 있음.
 - 2009년 25,000호 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23,334호(2009.11월 기준)를 제공하여 93.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1-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소영역)

□ 동 소영역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등의 세부 영역이 포함됨. 이들 정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지표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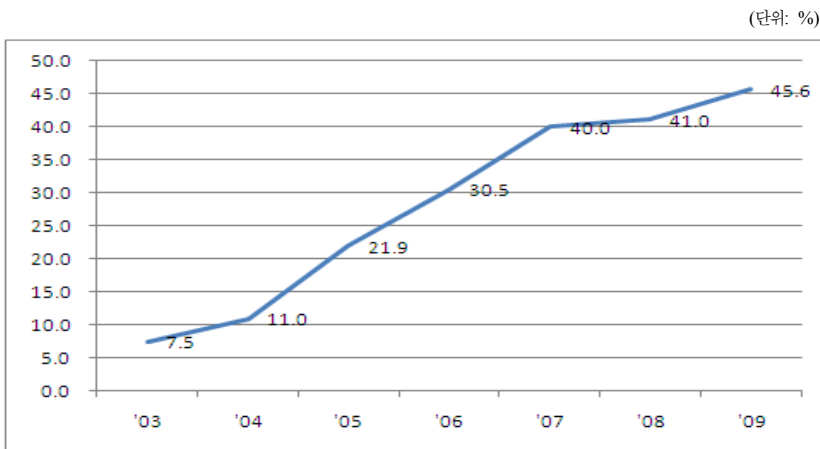
○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에는 차등보육료 지원, 차등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보육정보포털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됨.

- 이들 사업의 성과로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¹⁾은 2009년 45.6%(성과 점수 3점)로 2008년도 41.0%(2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text{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 = \frac{\text{보육비지원아동수} + \text{교육비지원아동수}}{\text{전체영유아수(6세미만)}} \times 100$$

-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됨. 향후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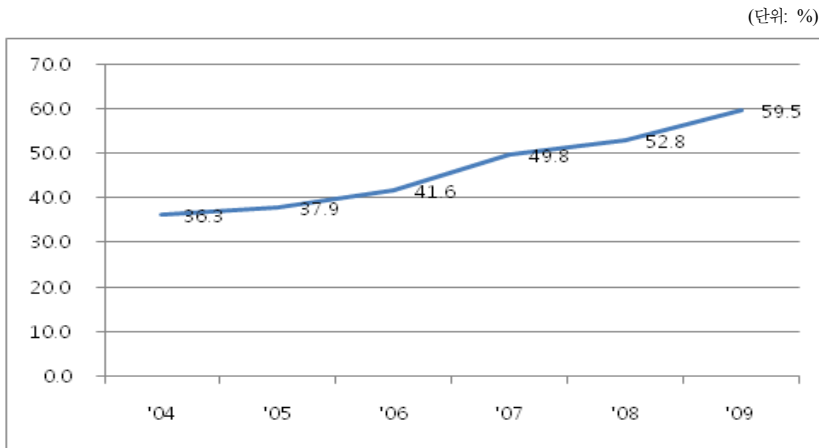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세부영역)에서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로 ‘방과후학교참여율’은 2009년 59.5%(4점)로 2008년 52.8%(2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text{방과후학교참여율} = \frac{\text{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text{전체초중고학교 학생수}} \times 100$$

- 향후에도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세부영역)에서는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사업 등이 추진됨.
- 그 성과로 ‘목표지원액과 실제지원액 간의 차이’는 0원(목표치 870만원 부여)으로, 성과점수는 5점 만점으로 측정됨.

$$\text{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차이} = \text{목표액} - \text{실제지원액}$$

- 향후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 동 소영역에서는 세부영역으로 육아지원 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보육 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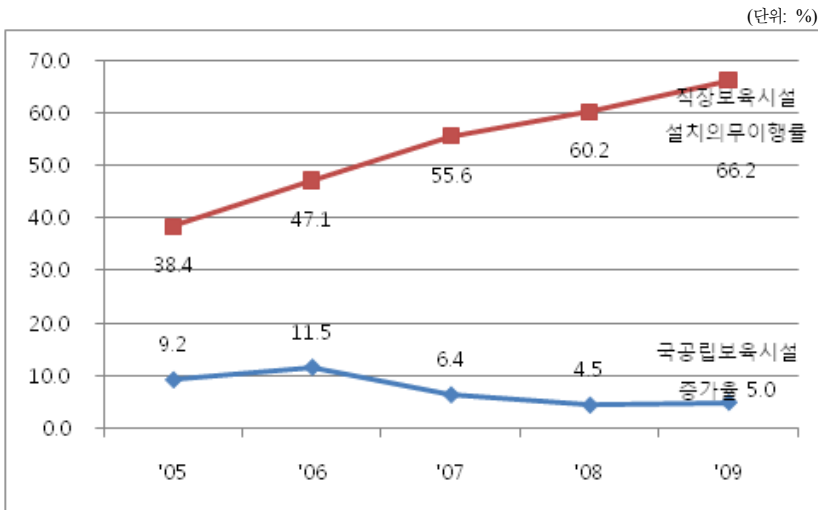
- 육아지원 시설 확충(세부영역)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로 국공립시설 증가율은 2009년 5.0%(4점)로 2008년도 4.5%(3점)에 비해 높아졌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은 2009년 66.2%(5점)로 2008년도 60.2%(3점)에 비해 높아졌음.

$$\text{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국공립보육시설}}{\text{전년도 국공립보육시설}} \times 100$$

$$\text{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 = \frac{\text{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장 수}}{\text{설치의무사업장 수}} \times 100$$

- 향후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직장보육시설도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 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및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이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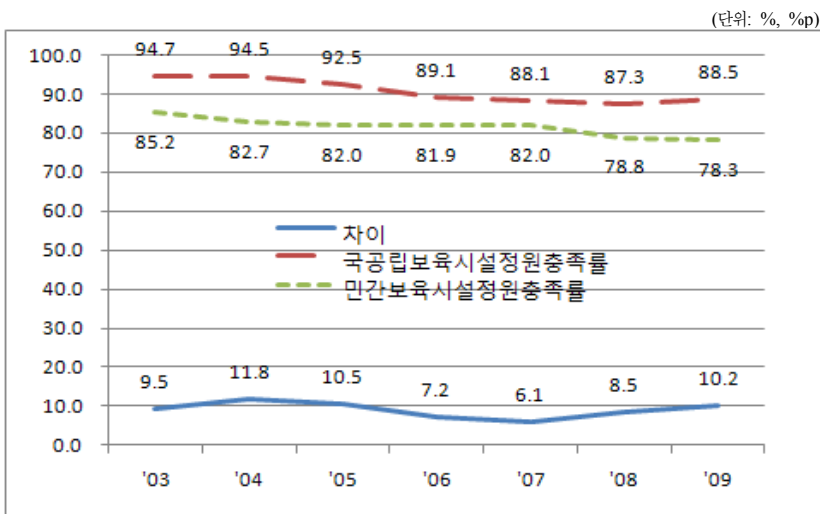
자료 :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은 보육통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세부영역)의 성과로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충족률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간의 차이는 2009년 10.2%p(1점)로 2008년도 8.5%p(1점)에 비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text{시설유형간 정원충족률 차이} = \frac{\text{국공립보육시설 정원충족률} - \text{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text{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육사업의 양적인 추구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5] 국공립보육시설정원충족률과 민간보육시설정원충족률간의 차이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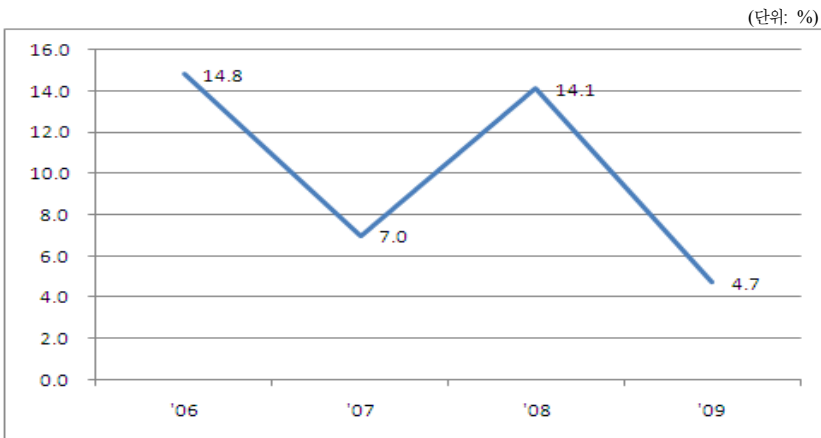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세부영역)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종일반 운영 확대 등이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로 ‘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증가율’은 2009년 4.7%(4점)로 2008년 14.1%(5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frac{\text{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
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P)}}{\text{종일제유치원시설비율}\times 0.6+\text{시간연장형보육
시설이용아동비율}\times 0.3+\text{휴일제보육시설이용
아동비율}\times 0.1} =$$

$$\frac{\text{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
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증가율}}{\frac{\text{현년도 P} - \text{전년도 P}}{\text{전년도 P}}} \times 100$$

- 동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동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3-6] 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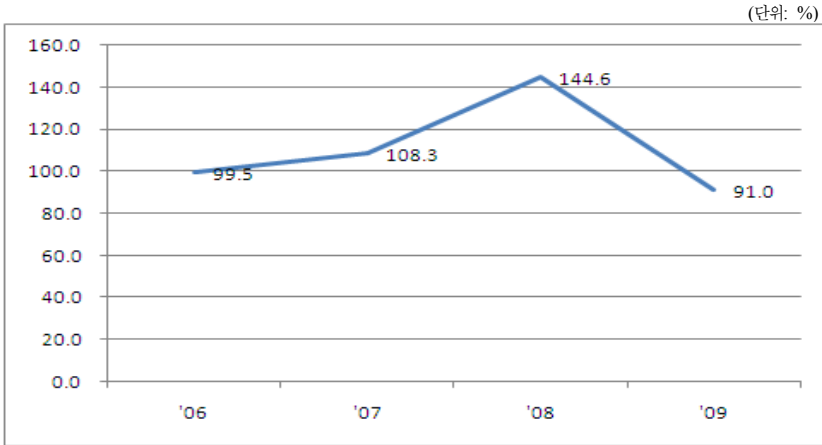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1-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과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화’의 세부영역이 포함됨.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세부영역)의 속한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로서 산모도우미수혜율(목표치 대비)은 2009년 91.0%(4점)로 2008년 144.6%(5점)에 비해 낮고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확보를 통한 계획량의 공급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text{산모도우미수혜율 (목표치 대비)} = \frac{\text{산모도우미 파견건수}}{\text{산모도우미사업 목표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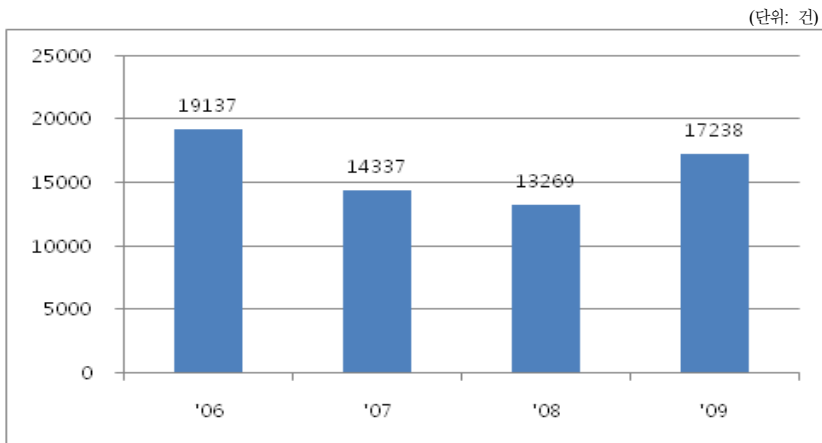
[그림 3-7]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불임부부 지원건수는 2009년 17,238건(5점)으로 2008년 13,269건(4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불임부부 지원건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1-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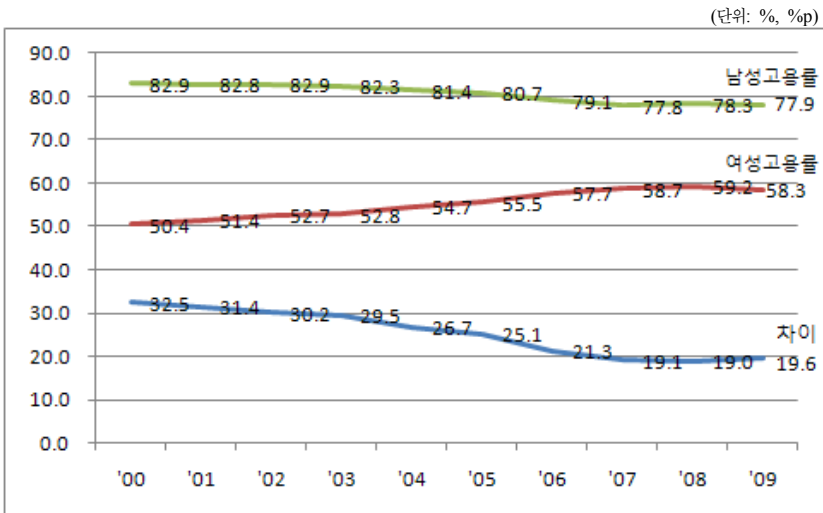
□ 동 중영역은 i) 모성보호 강화, ii)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iii)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 이들 소영역 및 세부영역들은 궁극적으로 직장가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와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성과는 ‘주출산연령층 여성고용률과 남성고용률 간의 차이’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begin{array}{l} \text{주출산연령층 여성고용률과} \\ \text{남성고용률 간의 차이} \end{array} = 25\sim 34\text{세 여성고용률} - 25\sim 34\text{세 남성고용률}$$

- 주출산연령층 여성고용률과 남성고용률간의 차이는 2009년 19.6%p(1점)로 2008년 19.0%p(2점)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하에 주출산연령층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친화적인 고용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 줌.

[그림 3-9] 주출산 연령층(25~34세) 여성고용률과 남성고용률 간의 차이



자료: 통계청, KOSIS.

1-2-1. 모성보호 강화(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 형태 유연화 등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이들 사업의 성과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은 2009년 2.97% (2점)에 그쳐 2008년 17.4%(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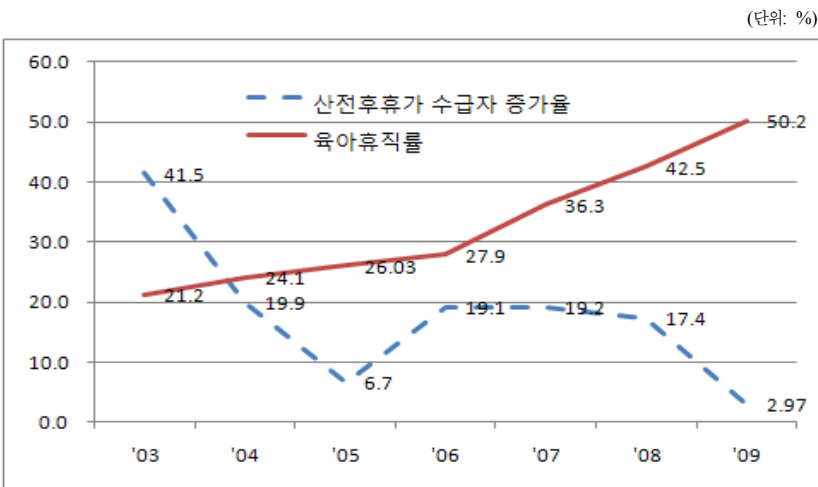
$$\text{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 \frac{\text{현년도-전년도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수}}{\text{전년도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수}} \times 100$$

○ 반면 육아휴직률은 2009년 50.2%(5점)로 2008년 42.5%(5점)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text{육아휴직률} = \frac{\text{육아휴직자 수}}{\text{산전후 휴가자 수}} \times 100$$

- 산전후휴가 수급자가 정규직 등에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단 산전후휴가를 이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까지 이용한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정책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이 큰 관건임.

[그림 3-10]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가율 및 육아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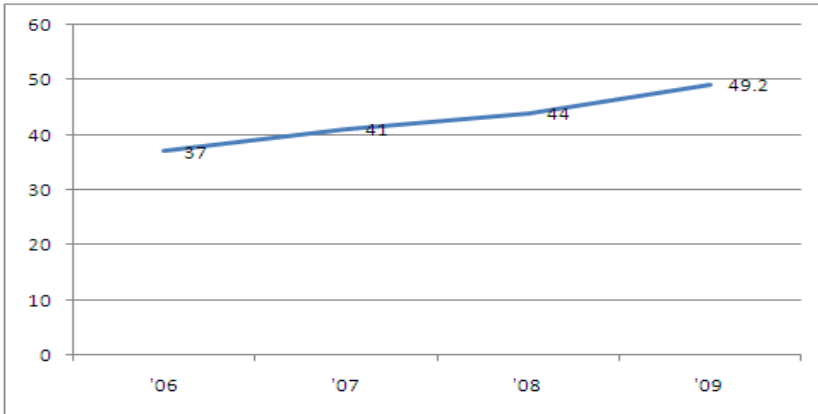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1-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사업 추진 결과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은 2009년 -25.5%(1점)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 291.6%(5점)로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도 있음. 2009년 엄마채용장려금 수급자는 20명,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자는 222명인 반면 2008년에는 225명과 100명이었음.
 - 동 정책들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text{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 \frac{\text{현년도 수급자수} - \text{전년도 수급자수}}{\text{전년도 수급자수}} \times 100$$

[그림 3-11] 가족친화지수 추이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는 2009년 49.2(5점)로 2008년 44(5점)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지수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 크게 5개 범주의 정량화된 지표로 설문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제도(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한 결과임.

- 전체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 즉,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함.

1-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소영역)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소영역에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학교교육 추진 성과로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은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양성평등 가치관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거하여 70.9%(결혼필요성(매우 필요+필요) 66.5%, 자녀필요성(반드시 필요+갖는 편이 좋음) 75.2%)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의 성과점수는 3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청소년의 가족가치관} = \frac{\text{결혼필요성} + \text{자녀필요성}}{2} \times 100$$

- 사회교육 사업들의 성과로 ‘미혼층의 자녀가치관’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미혼층의 자녀필요성은 81.9%로 동 사업들의 성과점수는 4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미혼층의 자녀가치관} = \text{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

- 정책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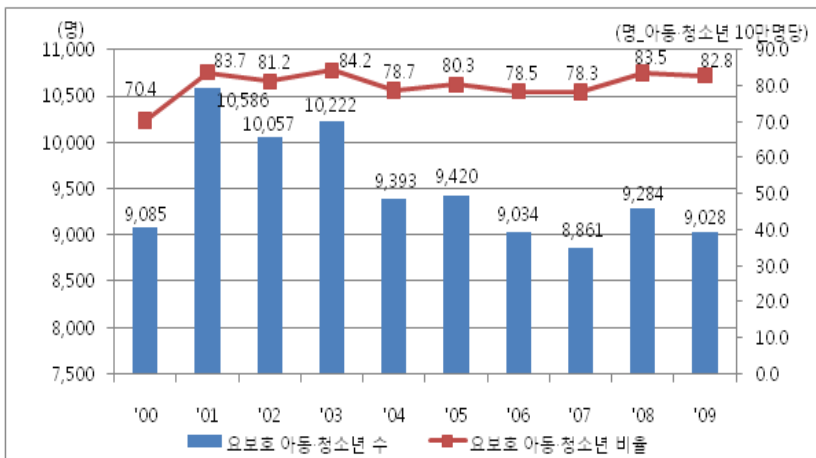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에는 i)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ii)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iii)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의 3개 소영역이 포함됨.
- 이들 소영역 모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과는 ‘요보호아동·청소년비율(10만명 당)’과 ‘아동·청소년 위험환경경험수(10만명 당)’ 성과지표들로 측정할 수 있음.

$$\text{요보호 아동·청소년비율} = \frac{\text{요보호 아동·청소년 수}}{\text{전체 18세이하 아동·청소년 수}} \times 100,000$$

$$\text{아동·청소년 위험환경 경험수} = \frac{\text{아동안전사고사망자 수+학교폭력발생건수}}{\text{전체 아동·청소년 수}} \times 100,000$$

- ‘요보호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8년 84명(10만명 당)에서 2009년 83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3-12] 요보호아동·청소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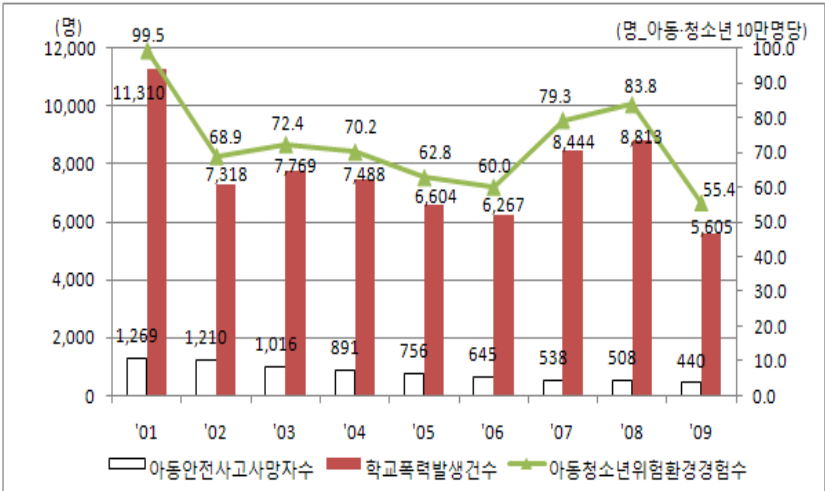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 위험환경 경험수(아동·청소년 10만명 당)는 2008년 84명

에서 2009년 55명으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성과는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학교폭력 발생건수 모두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13] 아동·청소년위험환경경험수



자료: e-나라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학교폭력대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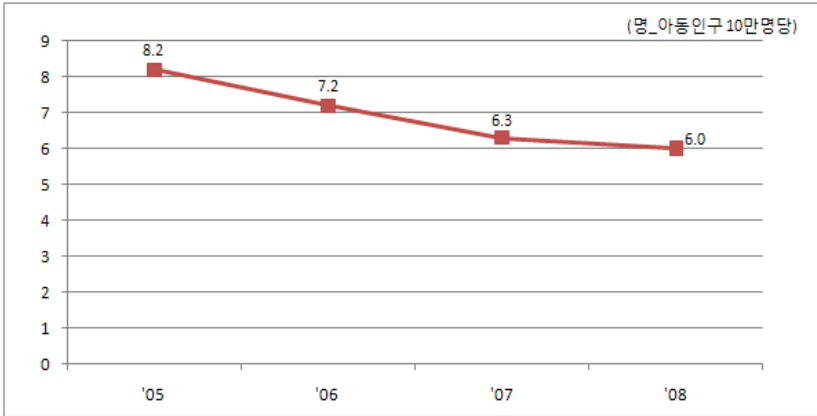
1-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소영역)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등이 포함됨.
- 이들 사업의 성과로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8년 6.0명(5점)으로 나타남(2009년 결과 미발표).

$$\frac{\text{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text{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 \frac{\text{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text{전체 14세이하 아동 수}} \times 100,000$$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4]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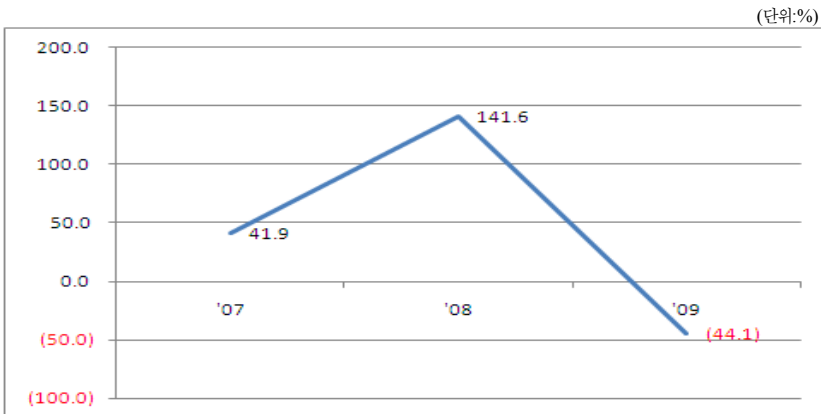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 또 다른 성과로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은 2009년 -44.1% (1점)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8년 141.6%(5점)으로 대폭 증가한 영향도 있음.
- 향후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생대상 전문상담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상담건수}}{\text{전년도 상담건수}} \times 100$$

[그림 3-15]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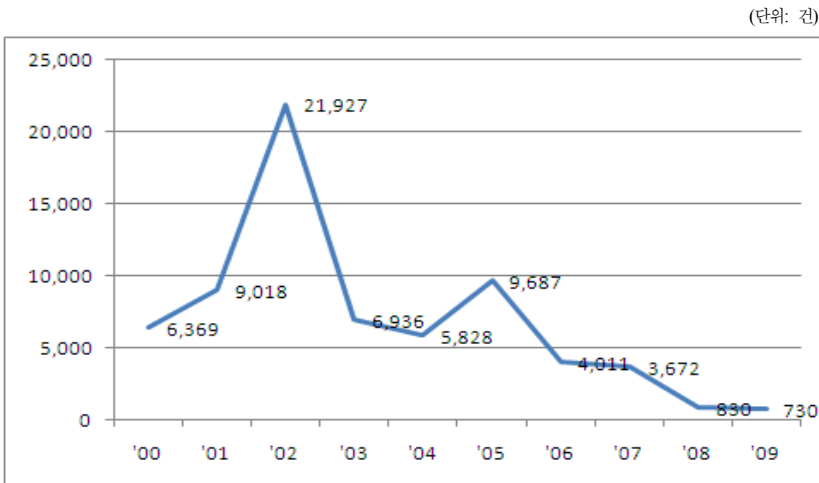
1-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소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소영역에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아동의 발달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유해환경 차단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됨.
- 동 사업들의 추진성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 건수’는 2009년 730건(1점)으로 2008년 830건(1점)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현년도 감시단활동 중 신고·고발 건수

- 이는 민간감시단의 신고·고발 축소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들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들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소영역)

□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소영역에는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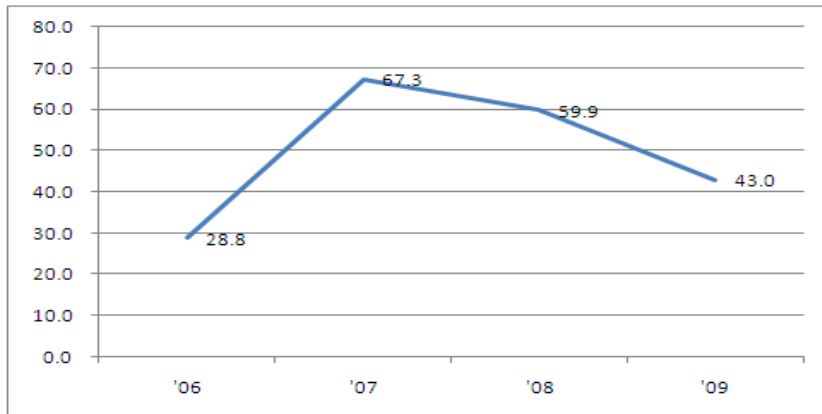
○ 동 사업들의 성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은 2009년 43.0%(5점)로 2008년 59.9%(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여기에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학교, 방과후보육,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포함되나, 2009년 자료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 수가 나오지 않아 2008년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임.

$$\frac{\text{지역사회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text{프로그램 이용자 수}} = \frac{\text{프로그램 이용자 수}}{\text{아동·청소년 수}} \times 100$$

[그림 3-17]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

(단위: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 고령사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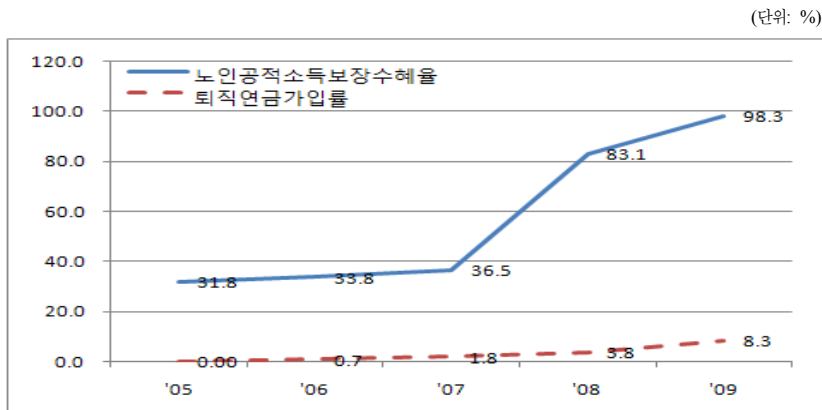
- 고령사회분야는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2-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ii)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의 2개 소영역으로 구성
- 동 중영역의 세부영역들은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과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2007년 36.5%(성과점수 1점)에서 2008년 83.1%(5점), 2009년 98.3%(5점)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text{65세이상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수혜율} = \frac{\text{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기초노령연금수급자}}{\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그림 3-18] 65세이상 노인 공적소득보장수혜율 및 20-59세 퇴직연금가입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또 다른 성과로 20~59세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율은 2009년 121.0% (5점, 가입률이 3.8%에서 8.3%로 증가)으로 2008년 107.4%(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5.12.1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이래, 지속 적인 홍보로 제도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text{퇴직연금가입률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text{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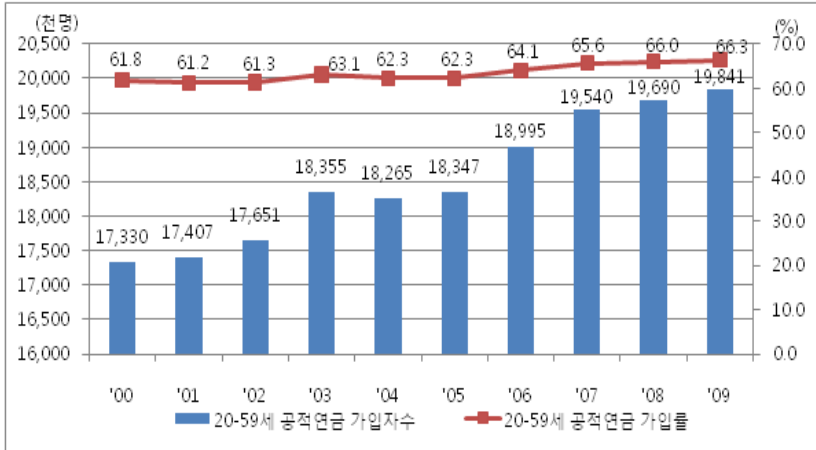
2-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소영역)

-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에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국민 연금 재정안정 확보 노력’ 결과는 5점 만점 중 4점으로 측정됨(국민 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6회 법안심사, 재정계산 제도개선 사항 2건 검토).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로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은 2009년 66.3%(3점)으로 측정됨.

$$\text{20~59세 공적연금가입률} = \frac{\text{20~59세 공적연금가입자 수}}{\text{20~59세 근로연령인구}} \times 100$$

-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가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직역연금 재정안정 확보 노력’ 결과도 4점으로 측정됨(2009.12 현재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으로 책임준비금을 마련하였으며, 군인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직역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각 개혁 법안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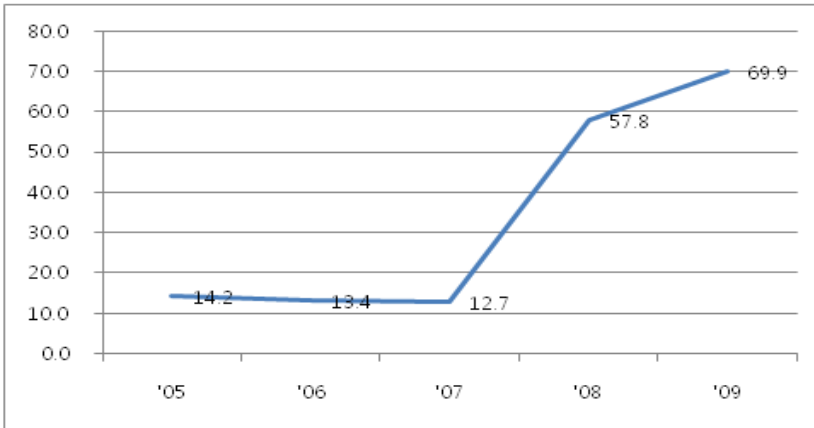
[그림 3-19] 20~59세 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그림 3-2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단위: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기초노령연금 확대 사업의 성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은 2009년 69.9%(5점)으로 2008년 57.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text{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frac{\text{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 수급대상을 1단계(2008. 1월 70세이상 노인 60%)와 2단계(2008. 7월 65세이상 노인 60%), 3단계(2009. 1월 65세이상 노인 70%)에 걸쳐 확대하였기 때문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노력의 성과는 2009년 8월 7일 법률 시행으로 5점 만점으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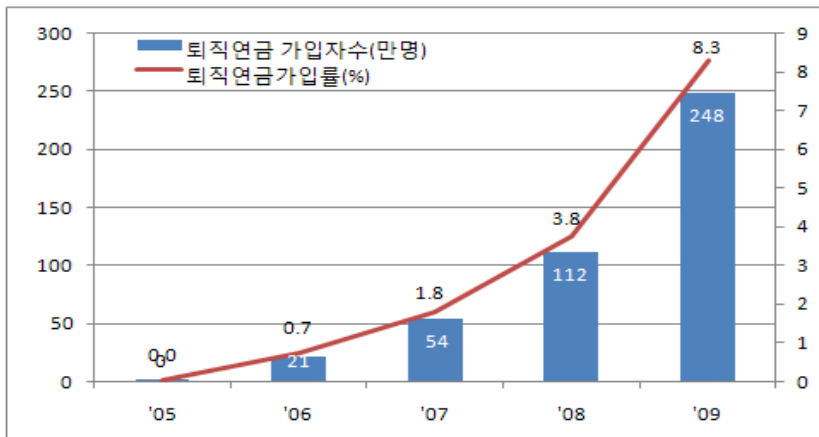
2-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소영역)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에는 퇴직연금제도 확대,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사업들의 성과로 ‘20~59세 근로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율’은 2009년 121.0%(5점)로 2008년 107.4%(2점)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text{퇴직연금가입률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text{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 \times 100$$

- 향후에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1]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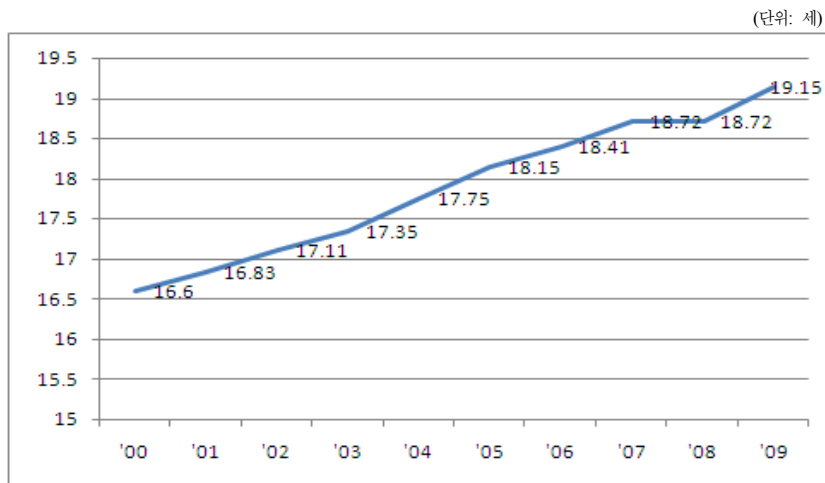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2-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동 중영역에는 i)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ii)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iii) 노인 권익 증진 등의 3개 소영역들이 포함됨.
- 동 중영역의 대표적인 성과로 ‘65세에서의 기대수명’은 2008년 18.2세에서 2009년 19.2세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65세 기대수명



자료: 통계청, KOSIS.

2-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영역이 포함됨.
- 사업 성과로 노인건강검진율은 2007년 50.1%(2008/09년 자료는 미 발표)로 성과점수는 4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노인건강검진율} = \frac{\text{65세 이상 노인 중 1년 간 건강검진자수}}{\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할 전방으로 노인의 건강검진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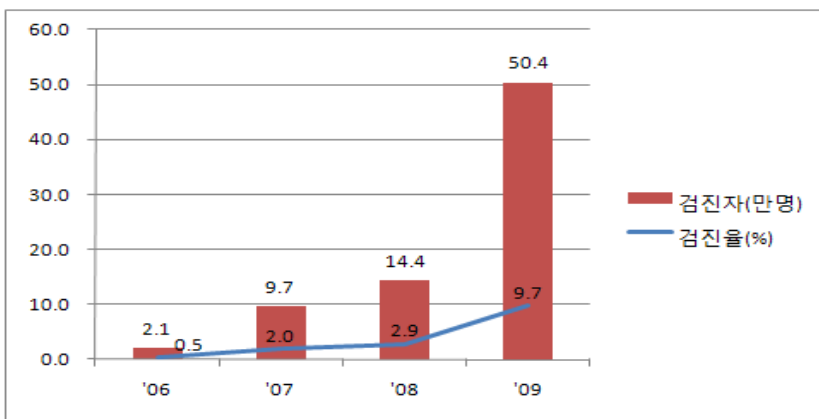
- 또 다른 성과로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23.5%로 목표치(35%) 대비 67.1%에 불과하여, 노인을 위한 체육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 확대가 요구됨.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 목표치 대비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 또한, ‘노인치매검진율’은 2009년 9.7%(5점)로 2008년 2.9%(1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text{노인치매검진율} = \frac{\text{65세 이상 노인 중 1년간 치매검진자수}}{\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그림 3-23] 노인치매검진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등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사업 성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시설·재가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수)’은 2009년 5.0%(5점)로 2008년 3.9%(5점)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text{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 \frac{\text{노인중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 ‘노인요양시설 구축률(목표치 대비)’은 2009년 목표치 대비 116.6%(5점)로 2008년 110.6%(5점)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text{노인요양시설구축률 (목표치 대비)} = \frac{\text{현 병상수}}{\text{목표 병상수}} \times 100$$

$$\text{노인요양시설구축률} = \text{목표치 대비 병상수 확보 비율} \times 100$$

- 그러나 현 노인인구 대비 1.7%(2008년 1.4%)에 불과하여,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자 급증에 대비하여 병상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2-2-3. 노인 권익 증진(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독거노인 보호 강화,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사업의 성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2008년 3.1점(생활전반만족도 3.1점, 건강상태만족도 2.6점, 주관적 본인 경제상태 2.7점, 자녀관계 3.8점)으로 성과점수는 4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노인의 삶의 만족도} = \text{생활전반만족도} \times 0.4 + \text{건강상태만족도} \times 0.2 + \text{주관적본인경제상태} \times 0.2 + \text{자녀관계} \times 0.2$$

- 향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권익 보호 등 강화 필요

2-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노인일자리 창출, ii)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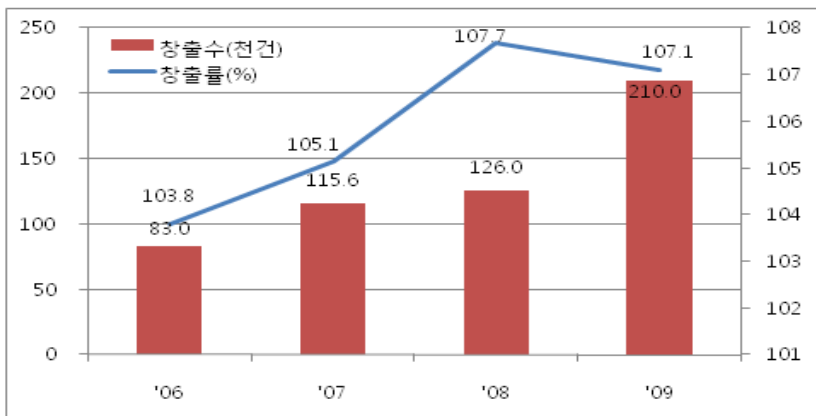
2-3-1. 노인일자리 창출(소영역)

□ 노인일자리 창출 소영역에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의 세부영역이 포함됨.

- 동 사업들의 성과로 노인일자리 창출은 2009년 21만개로 목표치 대비 107.1%(5점)로, 2008년 12.6만개(목표치 대비 107.7%(5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일자리 창출률(목표치 대비) = 목표치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수 비율

[그림 3-24]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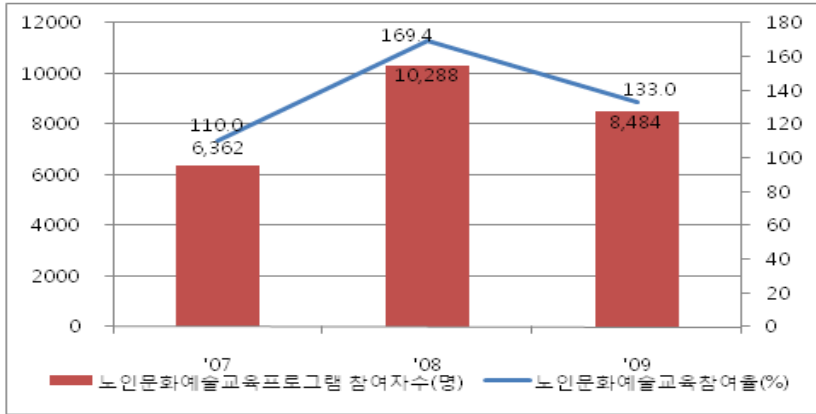
2-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의 성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목표치 대비)’은 2009년 133.0%(5점)로, 2008년 169.4%(5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text{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참여율(목표치 대비)} = \frac{\text{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자 수}}{\text{목표치}} \times 100$$

[그림 3-25]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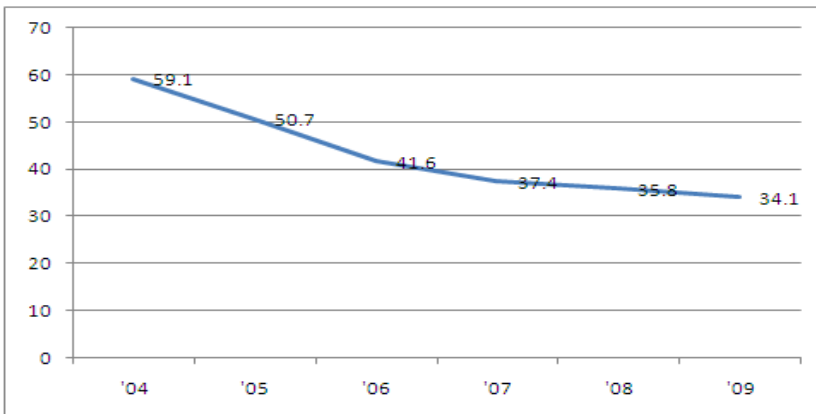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고령층 정보격차지수’는 2009년 34.1(5점)로 2008년 35.8(5점)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향후에도 고령층이 정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text{고령층 정보격차지수} = \text{현년도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그림 3-2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2-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ii)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2개 소영역으로 구성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소영역에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이 포함됨.

2-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동 사업들의 성과로 노인의 주택만족도는 2008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매우편리 11.4%, 편리한 편 58.2%, 그저 그렇다 18.2%, 불편한 편 10.4%, 매우불편 1.9%로 나타나, 성과점수는 3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노인주택만족도} = \text{현년도 노인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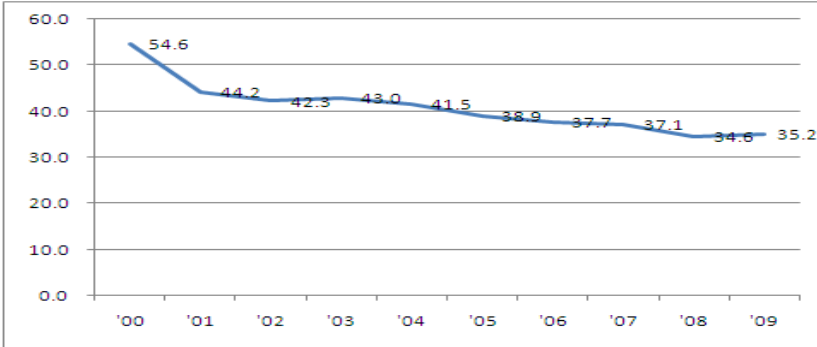
- 또 다른 성과로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률’은 2009년 35.2(2점)로 2008년 34.6(2점)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text{노인교통사고사망률} = \frac{\text{노인교통사고사망자수}}{\text{노인인구}} \times 100,000$$

-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주거 등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그림 3-27]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10만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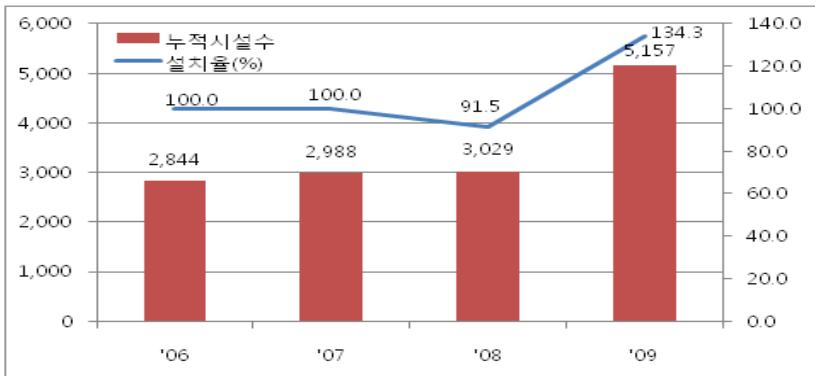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 내부자료.

-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목표치 대비)’은 2009년 134.3%로 2008년도 91.5%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도입률(목표치 대비)’은 2009년 105.8%로 2008년 111.4%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과점수(가중치 0.6과 0.4 각각 적용)는 2008년 4.4점에서 2009년 5.0점으로 증가함.

$$\text{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목표치 대비)} = \frac{\text{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수}}{\text{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수 목표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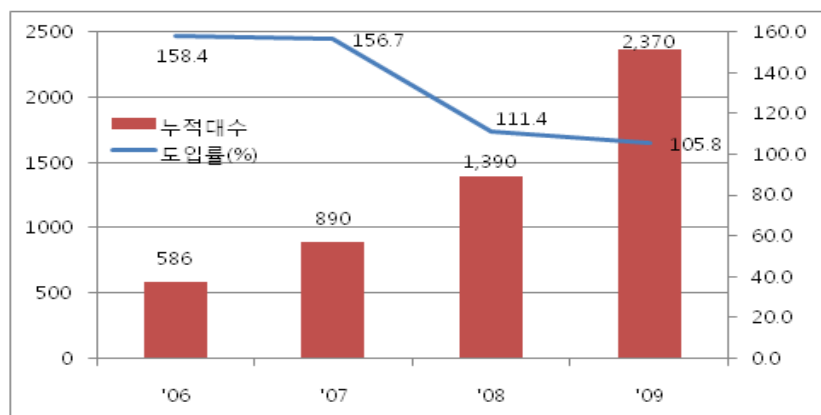
$$\text{저상버스도입률 (목표치 대비)} = \frac{\text{저상버스도입대수}}{\text{저상버스도입대수 목표치}} \times 100$$

[그림 3-28]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그림 3-29] 저상버스 도입률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는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3가지 중점전략(중영역)으로 구성

3-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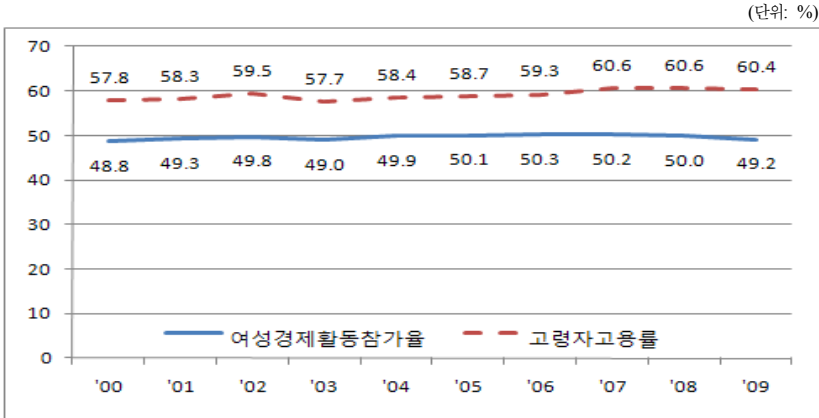
- 동 중영역은 i)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ii)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iii) 외국인력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 동 중영역 사업들의 대표적인 성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0.0%에서 2009년 49.2%로 오히려 감소(참가율 1%의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점수는 1점이나 2007년 50.2%에서 감소한 폭보다 큼.

$$\text{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1\%p} \times 100$$

-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가정 양립 곤란, 여성고용 차별 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가족친화적 및 양성평등적 고용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율과 함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고용률도 2009년 60.4%로 2008년 60.6%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점수는 5점). 베이비붐 등 고령자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text{고령자 고용률} = \frac{55\sim 64\text{세 취업자 수}}{55\sim 64\text{세 생산가능인구수}} \times 100$$

[그림 3-3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령자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3-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소영역)

□ 동 소영역에서는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세부영역)이 추진됨.

- 사업들의 성과로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9년 0.340%p(3점) 증가하여 2008년 0.336%p(3점) 증가에 비해 근소하나마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text{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1\%} \times 100$$

-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도 2009년 0.141%p(2점) 증가하여 2008년도 0.125%p(2점) 증가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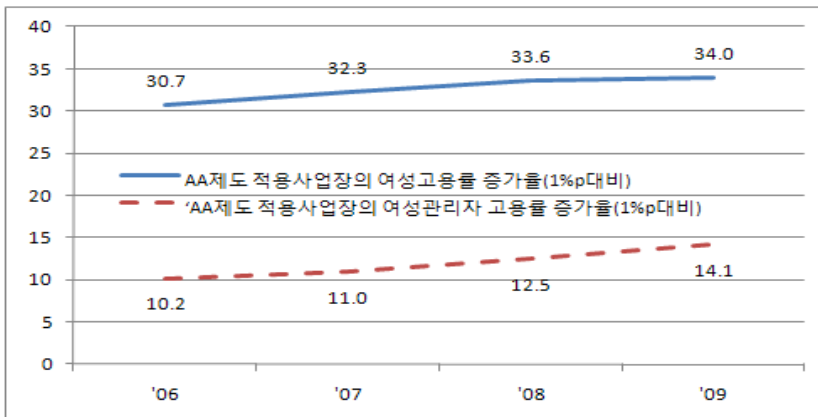
$$\text{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1\%} \times 100$$

- 결과적으로 여성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된 이유로 일-가정 양립 곤란, 여성고용 차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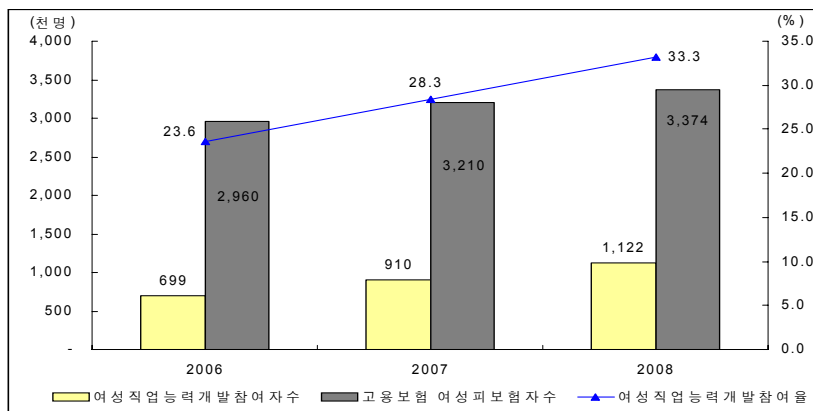
- 가족친화적 및 양성평등적 고용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율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1]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자료: 노동부 남녀근로현황.

[그림 3-32]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추이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여성의 ‘여성직업능력개발참여율’은 2008년 33.3%로 2007년 28.4%에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업들의 성과점수는 5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text{여성직업능력개발참여율} = \frac{\text{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여성수}}{\text{고용보험여성피보험자수}} \times 100$$

-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여성의 능력 개발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며, 이는 여성고용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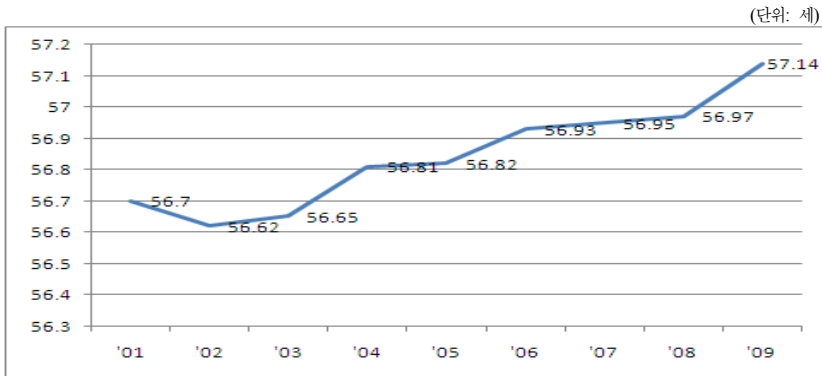
3-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이들 사업의 성과로서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300인 이상)의 45세 이상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2008년 56.97세에서 2009년 57.14세로 증가하여 1세 대비 정년증가율이 17.0%(1점)으로 나타남. 2008년 증가율 2.0%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정년 연장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text{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연령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정년제도 채택사업장 45세이상 퇴직자 평균연령}}{\text{1세}} \times 100$$

[그림 3-33]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 연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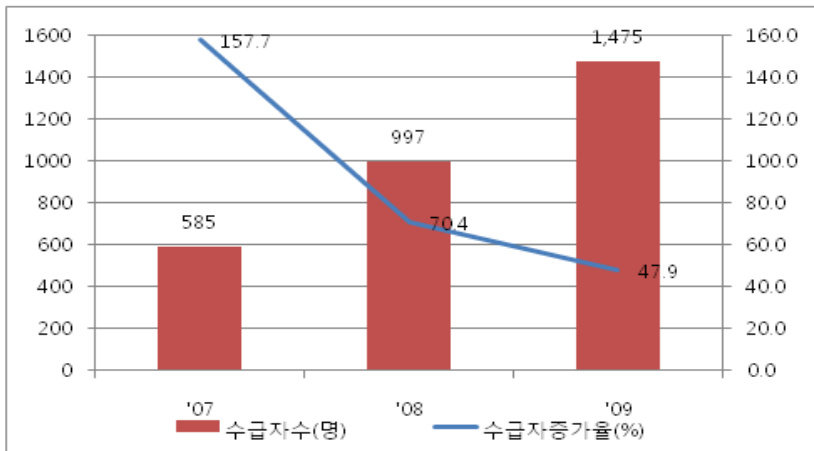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 증가율’은 2009년 47.9%(5점)로 2008년 70.4%(5점)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text{임금피크제보전수당 수급자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수급자수}}{\text{전년도 수급자수}} \times 100$$

-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3-3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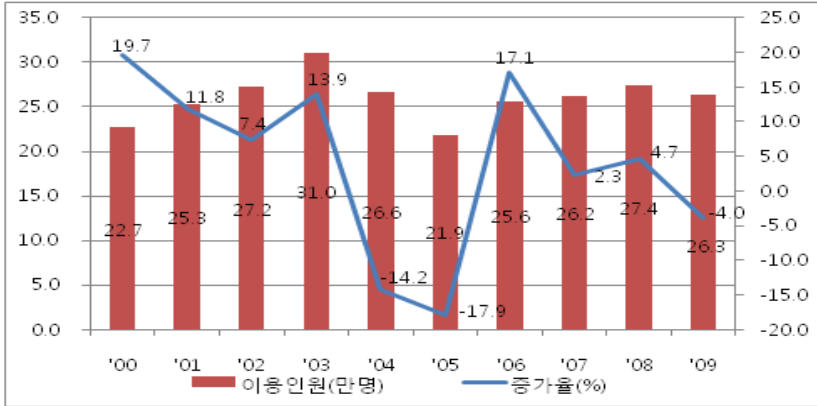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은 2009년 -4.0%(1점)로 오히려 감소(2008년 4.7%로 1점)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장려금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함.

$$\text{고용장려금실제이용인원증가율} = \frac{\text{현년도-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이용인원수}}{\text{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이용인원수}} \times 100$$

[그림 3-35]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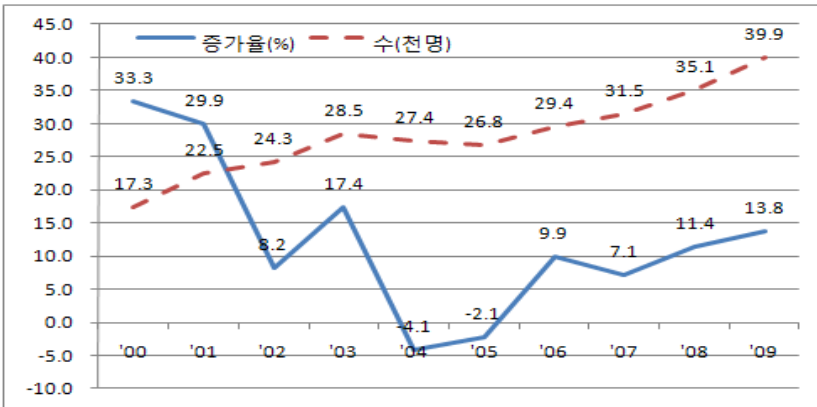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고령근무자 직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로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발생자 증가율’은 2009년 13.8%(2점)로 2008년 11.4%(2점)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text{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발생자 증가율} = \frac{\text{현년도-전년도 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text{전년도 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times 100$$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근로자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그림 3-36]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및 산업재해발생자증가율 추이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3-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소영역)

- 동 소영역에는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외국적 동포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로서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은 2009년 2.4%(2점)로 2008년 30.9%(5점)에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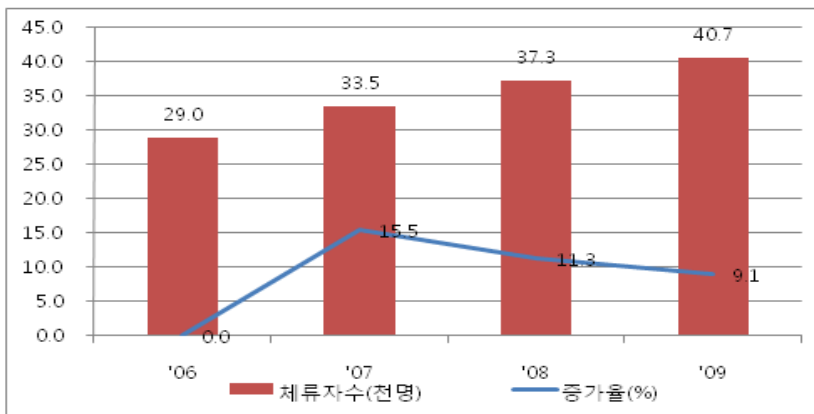
$$\text{방문취업사증소지자 누적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방문취업사증소지자누적건수}}{\text{전년도 방문취업사증소지자누적건수}} \times 100$$

-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로서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수 증가율’은 2009년 9.1%(3점)로 2006년 17.1%, 2007년 15.5%(5점), 2008년 11.3%(4점) 등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ext{전문외국인력체류자수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text{전년도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times 100$$

- 외국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7]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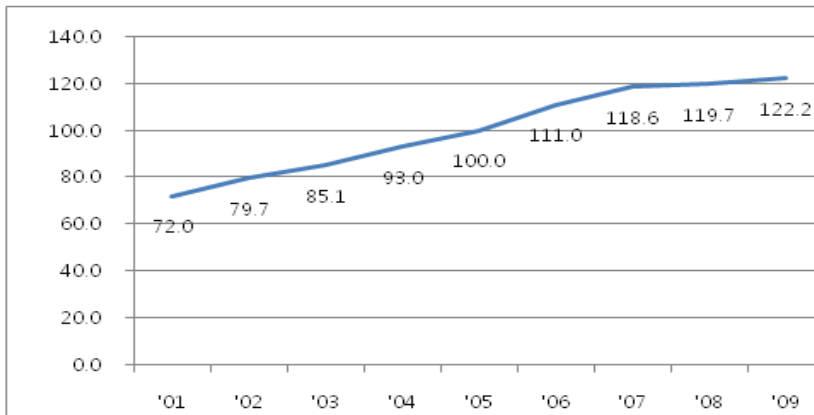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3-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 ‘동 중영역에는 i)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과 ii)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의 2개 소영역이 포함됨.
- 동 중영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사업들의 성과로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증가율은 2009년 2.1%(2점)로 2008년 0.9%(2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text{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노동생산성지수}}{\text{전년도 노동생산성지수}} \times 100$$

[그림 3-38]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 추이



자료: 한국노동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3-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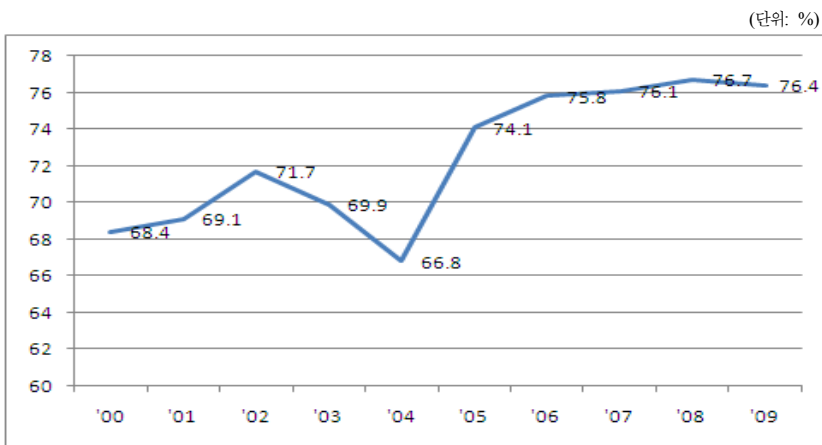
- 동 소영역에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등 3개 세부 영역들이 포함됨.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 등 사업들의 성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은 2009년 0.3%p(1점) 감소하여 2008년 0.6%p(3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text{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1\%p} \times 100$$

- 이러한 성과는 현실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아주 높아진 반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을 의미함.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3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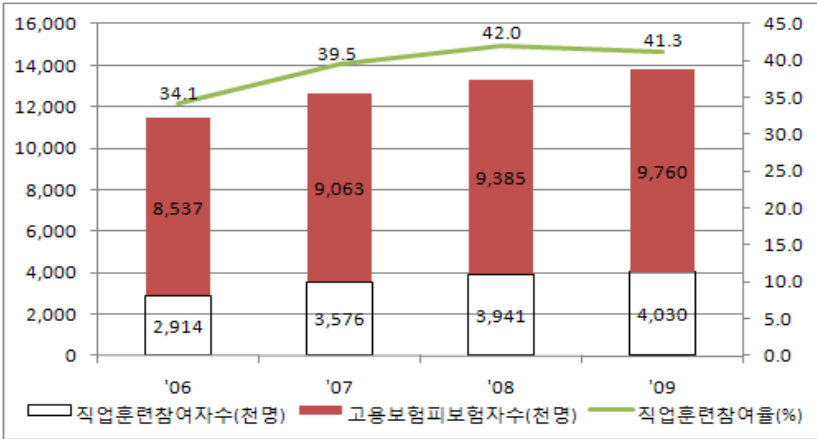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취업통계연보.

-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로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9년 41.3%(5점)로 2008년 42.0%(5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9년 자료가 10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09년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8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text{재직근로자직업훈련참여율} = \frac{\text{직업훈련 참여자수}}{\text{고용보험 피보험자수}} \times 100$$

[그림 3-40]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자수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노동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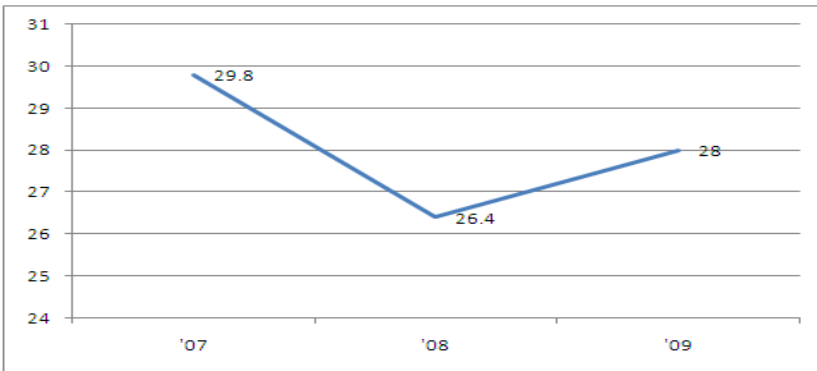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등 사업들의 성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2009년 28.0%(5점)으로 2008년 26.4%(4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text{평생학습참여율} = \frac{\text{형식교육참여자수} + \text{비형식교육참여자수}}{25-64\text{세 인구수}} \times 100$$

- 향후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1]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실태조사

3-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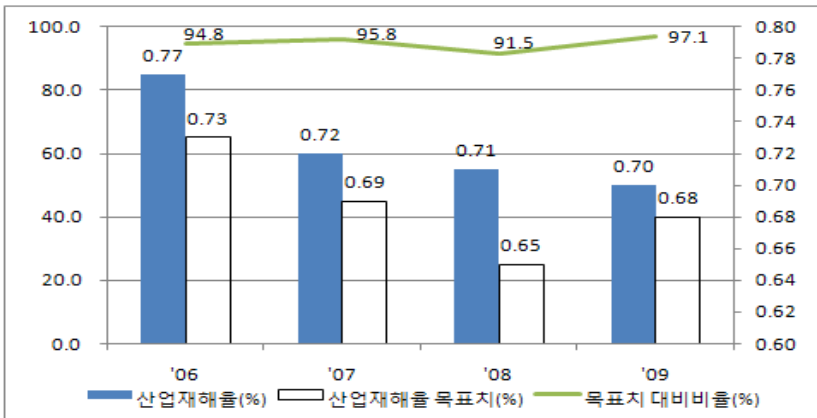
□ 동 소영역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강화의 2개 세부영역들이 포함됨.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추진된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등 사업들의 성과로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은 2009년 97.1%(4점)로 나타남.

$$\text{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 \frac{\text{산업재해율 목표치}}{\text{산업재해율}} \times 100$$

-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고령사회에서 인력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그림 3-42] 산업재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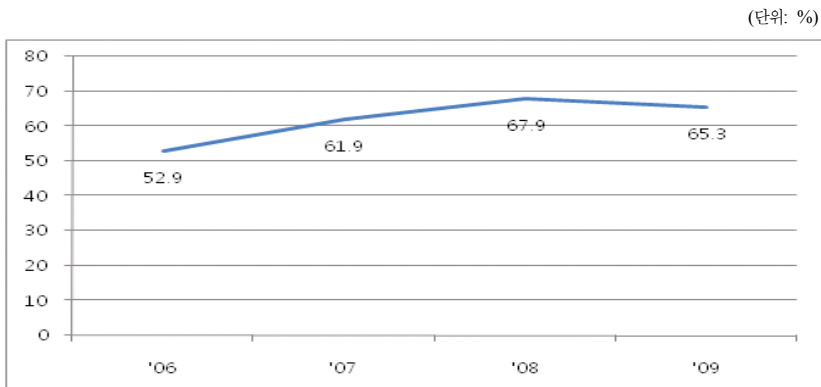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내부자료.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등 사업들의 성과로 전년대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은 2009년 -3.8%(1점)로 2008년도 9.7%(5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text{산업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text{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times 100$$

- 향후 산재장해인의 복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재활과 기업주 대상 홍보 등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그림 3-43]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추이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3-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동 중영역은 i)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ii)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iii)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iv)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개 소영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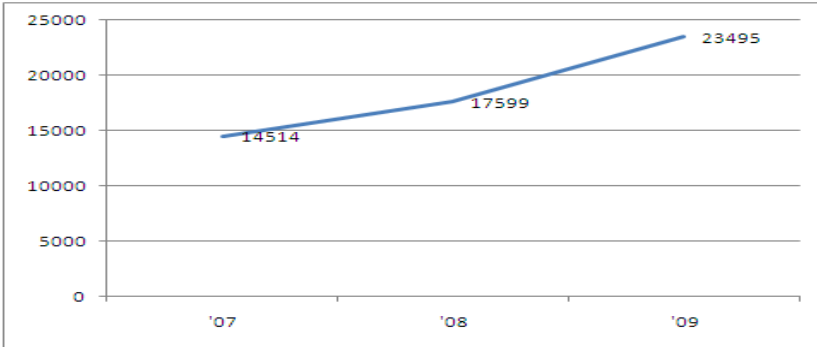
3-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소영역)

-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가율’은 2009년 33.5%(5점)로 2008년 21.3%(5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규모는 2007년 14,514억원, 2008년 17,599억원, 2009년 23,495억원으로 증가함.

$$\text{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text{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times 100$$

[그림 3-44]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

(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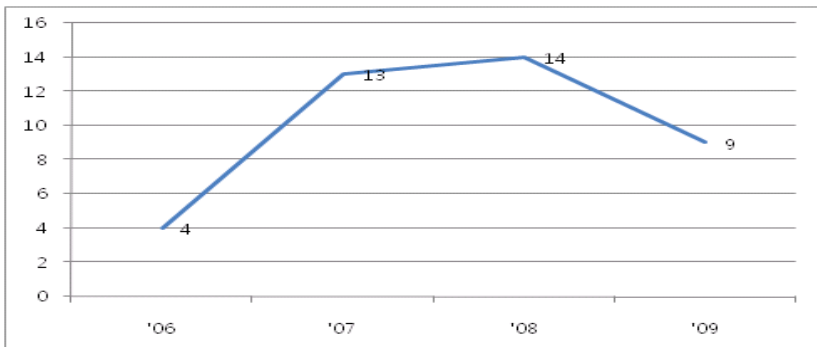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등의 성과로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는 2009년 297건(5점)으로 2008년 296건(5점)과 유사하게 나타남.

3-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소영역)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등 사업의 성과로 ‘고령친화제품 표준화건수’는 2009년 9건(5점)으로 2008년 14건(5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5]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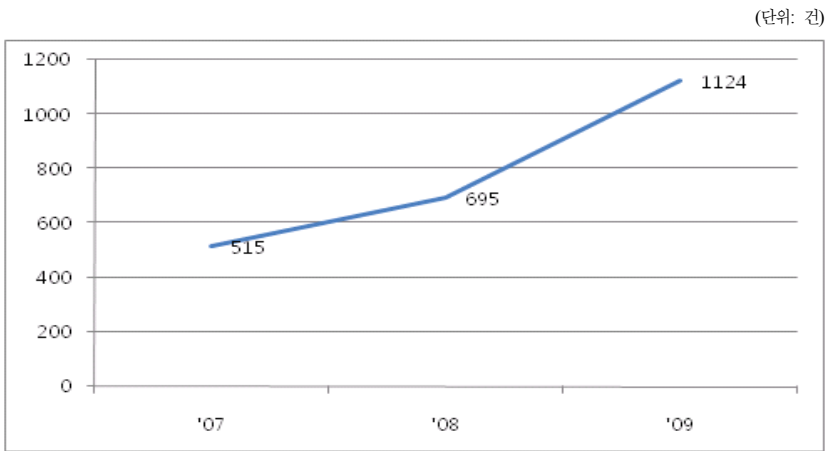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3-3-4.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소영역)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장기국채시장 육성 등 사업들의 성과로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 2009년 61.7%(5점)로 2008년 35.0%(5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6] 역모기지 대출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내부자료

제2절 지수에 의한 평가

1. 총괄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세부영역별 성과(지표값)에 단계별(세부영역-소영역-중영역)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영역별로 성과점수를 이용하여 영역별 성과 비교
- 저출산분야의 성과는 3.5점으로 양호, 고령사회분야의 성과는 4.5점으로 우수, 성장동력분야의 성과는 3.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분야에 대한 지수 산출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
 - * 이하에서 1~2점미만은 매우 미흡, 2~3점미만은 미흡, 3~4점미만은 양호, 4점 이상은 우수로 평가

〈표 3-1〉 대표영역별 성과(가중지수)

분야	가중치 적용 점수 (5점 만점)
A. 저출산분야	3.5
B. 고령사회분야	4.5
C. 성장동력분야	3.5

2. 저출산분야

- ☐ 중영역별 성과
 - 저출산분야에 속한 중영역들의 추진성과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3.6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3.6점)’,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3.0점)’ 순이며, 모두 양호
- ☐ 소영역별 성과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 중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4.5점)” 성과는 우수,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3.8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3.0점)”의 성과는 양호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 중 “모성보호 강화(4.0점)”의 성과는 우수,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3.5점)”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3.0점)”의 성과는 양호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점)”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점)”의 성과는 모두 양호

〈표 3-2〉 저출산분야의 성과지수(가중치 적용 결과)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성과점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3.6)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3.8)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0) - 방과후학교 확대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지원(4.0) - 자녀양육가정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5.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3.0)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4.5)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사업(1.0) -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4.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4.5)	- 산모도우미 지원(4.0) - 불임부부 지원(5.0)
	모성보호 강화(4.0)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2.0) -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5.0)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사회 문화 조성(3.6)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3.0)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1.0)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등 직장문화개선(5.0)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3.5)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3.0)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4.0)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5.0) -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1.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5.0)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1.0)

주: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의 ‘신혼부부 출발지원’소영역은 지수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
2)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중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소영역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확립’ 소영역에 포함되어 평가

3. 고령사회분야

□ 중영역별 성과

- 고령사회분야 중영역들의 추진성과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5.0점)’,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4.5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4점)’,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4.0점)’ 순이며, 모두 우수

〈표 3-3〉 고령사회 영역 성과(가중점수)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성과점수)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4)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4.2)	-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4.0)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3.0)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4.0)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5.0)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5.0)
	사적소득보장체계 확 충(5.0)	- 퇴직연금제도확대(5.0)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4.5)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4.4)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4.0)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5.0)
	공적 노인요양보장체 계 확립(5.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5.0)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5.0)
	노인 권익 증진(4.0)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4.0)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5.0)	노인일자리 창출 (5.0)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5.0)
	생산적인 여가문화프 로그램 활성화 및 사 회참여여건 조성 (5.0)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4.0)	고령친화적인 생활환 경 조성(4.0)	- 고령자가구 주거기준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3.0)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5.0)

□ 소영역별 성과

-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의 성과는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5.0점)”, “공적연금제도 체계화(4.2점)” 순으로 모두 우수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의 성과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5.0점)”, “노후건강관리기반 조성(4.4점)”
및 “노인권익증진(4.0점)” 순으로 모두 우수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인
“노인일자리 창출(5.0점)”과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점)”의 성과는 모두 우수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에 속한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4.0점)”의 성과는 우수

4. 성장동력분야

□ 중영역별 성과

- 성장동력분야에 포함된 중영역들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5.0점)’의 성과는
우수,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3.4점)’과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기반 구축(3.0점)’의 성과는 양호

□ 소영역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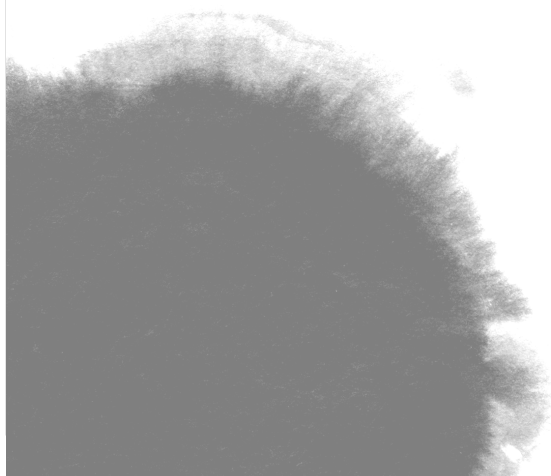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3.8점)”의 성과는 양호하나, “외국적동포·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2.5점)”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4점)”의 성과는 미흡
-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 중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점)”의 성과는 양호하나, “산업
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2.8점)”의 성과는 미흡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 속한 소영역들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5.0점)”,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점)” 및 “고령
사회 금융기반 조성(5.0점)”의 성과는 모두 우수

〈표 3-4〉 성장동력영역 성과지수 가중점수(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성과점수)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3.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3.8)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2.5)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5.0)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4)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1.0)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5.0)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1.0)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2.0)
	외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2.5)	- 외국적 동포의 활용(2.0) - 우수외국인력의 적극유치(3.0)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4)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1.0)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5.0)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5.0)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2.8)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4.0)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1.0)
고령친화산업 육성 (5.0)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5.0)	-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5.0) -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5.0)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	-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

04

종합평가



제4장 종합평가

제1 절 총괄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총 226개 사업들을 11조 7,7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결과, 정책들의 목표달성도는 평균 94.8%, 예산집행률은 평균 96.5%로 당초계획을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총 226개 사업들 중 199개 사업(88.1%)은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4개 사업(6.2%)은 당초목표를 70~90% 그리고 13개 사업(5.8%)은 당초목표를 70% 미만만 달성
- 전체 145개 예산사업들 중 132개 사업(91.0%)은 당초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10개 사업(6.9%)은 당초예산을 70~90%, 3개 사업(2.1%)은 당초예산을 70% 미만만 집행

〈표 4-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구분	목표달성도 · 예산집행률				전체	평균	비예산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목표달성	6개(2.7%)	7개(3.1%)	14개(6.2%)	199개(88.1%)	226개(100.0)	94.8%	-
예산집행	1개(0.7%)	2개(1.4%)	10개(6.9%)	132개(91.0%)	145개(100.0)	96.5%	78

주: 예산집행률의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제외

제2절 저출산분야

- 저출산분야(3대 중영역, 10개 소영역)에서는 예산사업 64개와 비예산사업 23개 등 총 90개 정책(3개 사업은 예산을 따로 산출하지 않아 제외)을 추진
 - 중영역별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를 위해 46개 사업(예산 34개, 비예산 12개),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을 위해 19개 사업(예산 14개, 비예산 5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을 위해 25개 사업(예산 16개, 비예산 6개, 3개 사업 제외)을 각각 추진
- 총예산은 4조6,339억원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0조원(총예산의 86.3%),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536억원(9.8%),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1,794억원(3.9%) 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예산은 전체예산의 86.3%를 차지
 - 전체적으로 비예산(26.4%) 혹은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
 - 비예산을 포함하여 100억원 이하 사업들의 비율은 63.2%
 - 500~1,000억원 규모의 사업 7개, 1,000억원이 넘는 사업 8개 등 대규모(500억원 초과) 사업은 전체 사업수의 17.2%를 차지

〈표 4-2〉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단위: 사업수, %, 억원)

	비예산	예산규모(억원)					전체	평균 (억원)
		0초과~ 10억이하	10초과~ 100억이하	100초과~ 500억이하	500초과~ 1000억이하	1000억 초과		
사업수	23	15	17	17	7	8	87	724.1
(%)	(26.4)	(17.2)	(19.5)	(19.5)	(8.0)	(9.2)	(100.0)	

주: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제외

- 세부사업별로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71.6%,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5.1%,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4.3%,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3.8%,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3.5%,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3.5% 등 일부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0%미만에 불과

〈표 4-3〉 2009년도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33,154.5	71.55	71.6
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356.0	5.08	76.6
3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1,978.0	4.27	80.9
4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749.0	3.77	84.7
5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630.0	3.52	88.2
6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622.7	3.50	91.7
7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88.0	1.48	93.2
8	아동의 발달 지원	583.0	1.26	94.4
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보호 기능 강화	506.0	1.09	95.5
10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404.0	0.87	96.4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 저출산분야 전체사업의 80% 이상이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하고 당초예산율 90% 이상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총 90개 사업 중 77개 사업(85.6%)은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 하였으며, 9개 사업(10.0%)은 당초목표의 70~90%, 4개 사업(4.4%)은 당초목표의 70%미만만을 달성.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13개 사업(90%미만)은 다음과 같음.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중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직장보육시설 확충,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등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중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중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 체계 강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 예산사업 중 89.1%가 당초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6.9%는 당초예산을 70~90% 집행, 4.7%는 당초예산을 70%미만 집행.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업은 총 7개로 다음과 같음.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중 I-사랑카드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중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확대,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경우 아동 인지능력 향상

〈표 4-4〉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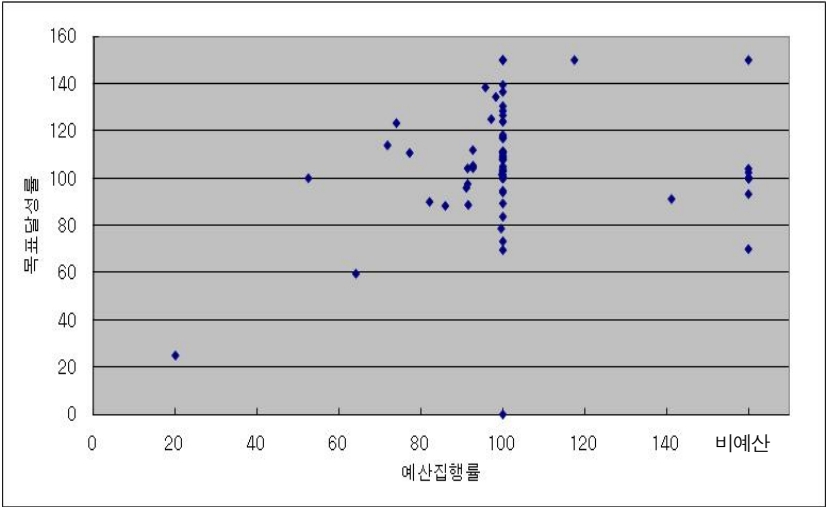
(단위: 사업수, %)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전체	사업 평균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목표기준	2(2.2)	2(2.2)	9(10.0)	77(85.6)	90(100.0)	95.0%
예산기준	1(1.6)	2(3.1)	4(6.3)	57(89.1)	64(100.0)	95.1%

주: 예산집행률의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23개 제외

-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모두 90% 이상인 사업들은 총 73개 (81.1%),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모두 90% 미만인 사업들은 3개 (3.3%)
- 후자에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해당

[그림 4-1]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주: 전반적인 분포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 목표달성률이 150%를 넘는 경우 150%로 표기하였음.

[그림 4-2]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목 표 달 성 률	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지원 확대 추진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73개 과제
	3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10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직장보육시설 확충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 육아휴직 활성화 · 가족친화문화 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예산집행률

주: 1) *는 비예산 사업이며, 비예산사업은 예산집행률을 100%로 가정
 2) 예산을 분리하기 힘든 세 개 과제의 경우 예산집행률을 100%로 가정

□ 저출산정책의 추진성과(3.5점)는 양호한 수준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의 성과(3.6점)는 양호한 수준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소영역의 성과(3.8점)는 양호한 수준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세부 사업들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i-사랑카드 도입,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은 당초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율은 2008년 41.0%에서 2009년 45.6%로 소폭 증가하여 양호(3.0점)한 것으로 평가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사업 성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08년 52.8%에서 2009년 59.5%로 높아져 우수(4.0점)한 것으로 평가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사업 성과로 세제지원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여 우수(5점)한 것으로 평가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수준
 - (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사업들의 성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8년 4.5%에서 2009년 5.0% 증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은 60.2%에서 66.2%로 증가하는 등 우수(4.5점)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기본보조금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정원충족률 차이는 2008년 8.5%p에서 2009년 10.2%p로 증가하여 그 성과는 미흡(1점)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의 성과로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 육아지원서비스가 4.7% 증가하여 우수(4.0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의 성과(4.5점)는 양호한 수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사업의 성과로 산모도우미 수혜율은 목표치 대비 91%로 우수(4점)하며, 불임부부 지원건수도 17,238건으로 우수(5점)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의 성과(3.6점)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모성보호 강화” 소영역의 성과(4.0점)는 우수한 수준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사업의 성과로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가율이 3.0%에 그쳐 미흡(2.0점)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사업의 성과로 육아휴직률이 2008년 42.5%에서 2009년 50.2%로 증가하여 우수(5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소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수준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등) 사업의 성과로 가족친화지수는 2008년 44.0에서 2009년 49.2로 상승하여 우수(5점)
 - (출산·육아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업이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력단절 및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존재로 엄마채용 장려금 등 수급자 증가율이 -25.5%로 매우 미흡(1점)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소영역의 성과(3.5점)는 양호한 수준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강화) 사업의 성과로 청소년 가족가치관(결혼, 자녀)과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필요성)이 3점과 4점으로 양호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소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수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사업의 성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이 2008년 6.0명으로 우수(5.0점)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사업의 성과로 학생대상전문상담 건수 증가율은 -44.1%로 매우 미흡(1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소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수준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사업의 성과로 아동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이용률이 43.0%로 우수(5.0점)
 - (유해환경 차단 강화) 사업의 성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신고·

고발건수는 730건으로 전년도 830건에 비해서도 감소하여 매우 미
흡(1점)

〈표 4-5〉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단위: 사업수, 억원, %, 원, 명)

	사업 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총계	90	85.6	46339	100	87.5	합계출산율	1.19	1.15	3.5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임 강화	46	84.8	40009	86.3	91.2	육아서비스 이용률	59.4	62.6	3.6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5	100.0	5	0.01	100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5	0.01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0	0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21	85.7	36202	78.1	88.2				3.8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3155	71.6		보육·교육비지원율	41.0	45.6	3.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688	1.48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356	5.08		방과후학교참여율	52.8	59.5	4.0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0.1	0		세계지원(목표치대비 차액)	0	0	5.0
자녀양육가정 주거안정 지원			0.0	0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3.2	0.01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7	85.7	2049	4.4	83.3				3.0
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385	0.8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률	4.5 60.2	5.0 66.2	4.5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34	0.07		국공립과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차이	8.5	10.2	1.0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630	3.52		시간연장형종일제 휴일형 증가율	14.1	4.7	4.0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3	76.9	1754	3.78	100				4.5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4.6	0.01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749	3.77		산모도우미수혜율 (목표치 대비) 불임부부지원건수	145 13269	91 17238	4.0 5.0

〈표 4-5〉 계속

	사업 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 문화 조성	19	84.2	4536	9.79	71.4				3.6
2.1. 모성보호 강화	3	66.7	3601	7.77	66.7				4.0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1978	4.27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감률	17.4	3.0	2.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623	3.5		육아휴직률	42.5	50.2	5.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9	88.9	406	0.88	66.7				3.0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0.7	0		가족친화지수	44.0	49.2	5.0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0.9	0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0.0	0					
출산·육아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404	0.87		임차채용장려금등 수급자증가률	291.6	-25.5	1.0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7	85.7	530	1.14	80.0				3.5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0	0		청소년가족가치관 (결혼, 자녀필요성)	70.9	70.9	3.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43.9	0.09		기혼여성 자녀필요성	81.9	81.9	4.0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14	0.25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371.4	0.8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0.7	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5	88.0	1794	3.87	93.7				3.0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7	85.7	373	0.81	100				3.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34.7	0.0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당)	6.0	6.0	5.0
아동학대예방 및 방인가동 보호체계 강화			113.9	0.25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24.5	0.48		학생대상전문상담 건수 증가율	142	-44.1	1.0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6	87.5	1280	2.76	87.5				3.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506	1.09		아동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이용률	59.9	43.0	5.0
아동의 발달 지원			583	1.26					
국내입양 활성화			125.7	0.27					
유해환경 차단 강화			7	0.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신고발견건수	830	730	1.0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58	0.13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2	100	141	0.3	100				
드림스타트 활성화			75	0.16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66	0.14					

제3절 고령사회분야

- 고령사회분야(4대 중영역, 9개 소영역)에서는 예산사업 23개와 비예산 사업 33개 등 총 56개 정책을 추진
 - 중영역별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을 위해 22개 사업(예산 2개, 비예산 20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중영역)’을 위해 19개 사업(예산 12개, 비예산 7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예산 6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을 위해 9개 사업(예산 3개, 비예산 6개)을 각각 추진
- 총예산은 5조3,978억원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3조 4,329억원(63.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중영역)’ 1조 4,223억원(26.4%),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3,294억원(6.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2,132억원(4.0%)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에 전체 예산의 63.6%가 집중
 - 전체적으로 비예산(62.5%) 혹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들에 집중
 - 비예산을 포함한 100억원 이하의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5.7%인 반면, 500~1,000억원 사업 0개, 1,000억원 이상 사업 7개 등 대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은 12.5%

〈표 4-6〉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단위: 사업수, %, 억원)

	예산규모(억원)						전체	평균 (억원)
	비예산	0초과~ 10억이하	10초과~ 100억이하	100초과~ 500억이하	500초과~ 1000억이하	1000억 초과		
사업수	33	6	9	1	-	7	56	2346.9
(%)	(62.5)	(10.7)	(16.1)	(1.8)	-	(12.5)	(100.0)	

주: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제외

- 세부사업별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3.6%, 독거노인 보호 강화 15.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6.1%,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8%,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3.7% 등 5개 정책에 전체예산의 90% 이상이 집중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10여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10% 미만에 불과

〈표 4-7〉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4324.0	63.6	63.6
2	독거노인 보호 강화	8348.0	15.5	79.1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3284.0	6.1	85.1
4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49.0	3.8	88.9
5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2020.6	3.7	92.7
6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684.5	3.1	95.8
7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602.0	3.0	98.8
8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388.4	0.7	99.5
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107.2	0.2	99.7
10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83.4	0.2	99.8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 고령사회분야 정책들의 대부분 당초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사업 모두 당초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등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총 56개 사업 중 50개 사업(89.3%)이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6개 사업(10.7%)만이 당초목표의 70%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6개 사업(90%미만)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강화(중영역)’를 위한 사업들 중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중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고령사회분야의 예산사업 모두 당초예산을 90% 이상 집행

〈표 4-8〉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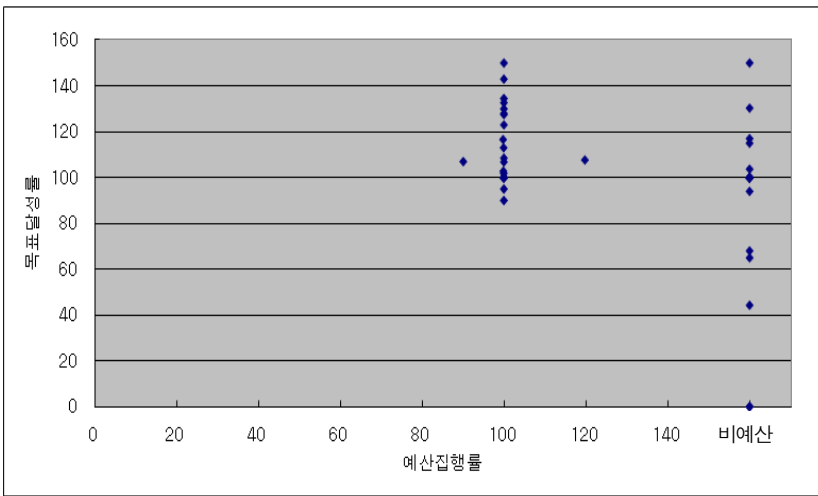
(단위: 사업수, %)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전체	사업 평균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목표기준	4(7.1)	2(3.6)	-	50(89.3)	56(100.0)	91.9%
예산기준	-	-	-	21(100.0)	21(100.0)	99.5%

주: 예산집행률의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35개 제외

-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모두 90% 이상인 사업들은 총 50개(89.3%)
 - 예산집행률은 90% 이상이지만 목표달성률이 90% 미만인 사업들은 6개(10.7%)
 -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이지만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과 목표 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이 모두 90% 미만인 사업은 없음.

[그림 4-3]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주: 전반적인 분포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 목표달성률이 150%를 넘는 경우 150%로 표기하였음.

[그림 4-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목 표 달 성 률	0개 과제	50개 과제
	0개 과제	6개 과제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 *는 비예산 사업이며, 비예산 사업은 예산집행률을 100%로 가정하였음.

예 산 집 행 률

□ 고령사회분야 정책들 모두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실적이 높아 성과가 우수(4.5점)한 것으로 평가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성과(4.4점)는 우수한 수준
 -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소영역의 성과(4.2점)는 우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사업의 성과로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이 66.3%, 기초노령연금수급률은 동 기간 57.8%에서 69.9%로 각각 증가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소영역의 성과(5.0점)는 우수한 수준
 - (퇴직연금제도 확대) 사업의 성과로 20~59세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율이 2008년 107.4%에서 2009년 121.0%로 증가하여 우수(5.0점)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중영역의 성과(4.5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의 성과(4.4점)는 우수한 수준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사업의 성과로 노인건강검진율은 2008년 50.1%로 우수(4.0점)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로 노인 치매검진율은 2008년 2.9%에서 2009년 9.7%으로 증가하여 우수(5.0점)
 -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의 성과(5점)는 우수한 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2008년 3.9%에서 2009년 5.0%로 증가하여 우수(5점)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의 성과로 노인요양시설구축률(목표치대비)은 2008년 110.6%에서 2009년 116.6%으로 증가하여 우수(5점)
 - “노인 권익 증진” 소영역의 성과(4.0점)는 우수한 수준
 - 노인 삶의 만족도는 3.1로 우수(4.0점)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의 성과(5.0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노인일자리 창출” 소영역의 성과(5점)는 우수한 수준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로 노인일자리 창출률(목표치

대비)이 107.1%로 우수(5점)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의 성과(5.0점)는 우수한 수준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의 성과(4.0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업의 성과로 노인 주택만족도는 69.7%(2008년)로 양호(3.0점)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의 성과로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목표대비) 134.3%, 저상버스 도입율(목표대비) 105.8% 등으로 우수(5.0점)

〈표 4-9〉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단위: 사업수, 억원, %, 원, 명)

	사업 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전체	56	89.3	53978	100	100				4.5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2	77.3	34329	63.6	100				4.4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15	86.7	34324	63.6	100				4.2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	0.0		국민연금재정안정		심사	4.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	0.0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66.0	66.3	3.0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위한 국민연금 체계 구축			0	0.0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0	0.0		재정 안정 노력	3.7	4.0	4.0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4324	63.6		수급율	57.8	69.9	5.0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0	0.0		연계 노력		법 시행	5.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7	57.1	5	0.0	100				5.0
퇴직연금제도 확대			5	0.0		20-59세 가입자 증가율	107.4	121.0	5.0
개인연금 활성화			0	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19	100	14223	26.4	100	65세 기대수명	18.72	19.15	4.5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8	100	516	1.0	100				4.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107	0.2		노인건강검진율	50.1	50.1	4.0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			388	0.7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20	0.0		노인치매검진율	2.9	9.7	5.0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7	100	5305	9.8	100				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3284	6.1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3.9	5.0	5.0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2021	3.7		노인요양시설구축률(목표치대비)	110.6	116.6	5.0
2.3 노인 권의 증진	4	100	8403	15.6	100				
독거노인 보호 강화			8348	15.5		노인 삶의 만족도	3.1	3.1	4.0
노인권의 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55	0.1					

〈표 4-9〉 계속

	사업 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6	100	3294	6.1	100				5.0
3.1. 노인일자리 창출	1	100	1602	3.0	100	노인일자리창출률	107.7	107.1	5.0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602	3.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5	100	1692	3.1	100				5.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조성			7	0.0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685	3.1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참여율 (목표치대비) 고령층정보격차자수	169.4	133.0	
							35.8	34.1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9	88.9	2132	4.0	100				4.0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6	83.3	2049	3.8	100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0	0.0		노인 주택만족도	69.7	69.7	3.0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0	0.0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49	3.8		지하철역승강시설 설치율(목표대비) 저상버스 도입률	91.5	134.3	5.0
							111.4	105.8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3단계)	3	100	83	0.2	100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83	0.2					

제4절 성장동력분야

- 성장동력분야(3 중영역, 9 소영역)에서는 예산사업 56개와 비예산사업 21개 등 총 77개 정책을 추진
 - 중영역별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을 위해 39개 사업(예산 28개, 비예산 11개),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를 위해 20개 사업(예산 17개, 비예산 3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18개 사업(예산 11개, 비예산 7개)을 각각 추진
- 총예산은 1조7,384억원으로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2,099억원,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1조 4,974억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312억원 등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에 전체 예산의 86.1%가 집중
 - 전체적으로 비예산(27.3%) 혹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들에 집중
 - 비예산을 포함한 100억원 이하의 사업들이 81.2%를 차지한 반면, 500~1,000억원 사업 2개, 1,000억원 초과 사업 2개 등 대규모(500억원 이상) 사업은 5.2%에 불과

〈표 4-10〉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단위: 사업수, %, 억원)

	예산규모(억원)						전체	평균 (억원)
	비예산	0초과~ 10억이하	10초과~ 100억이하	100초과~ 500억이하	500초과~ 1000억이하	1000억 초과		
사업수	21	22	20	10	2	2	77	295.4
(%)	(27.3)	(28.3)	(26.0)	(13.0)	(2.6)	(2.6)	(100.0)	

주: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제외

- 세부사업별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72.9%, 평생학습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6.3%,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5.2%,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3.9%,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5% 등 5개 정책에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집중

-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70여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10%미만에 불과

〈표 4-11〉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단위: 억원, %)				
순위	세부사업	예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중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12,673.0	72.9	72.9
2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097.2	6.3	79.2
3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903.2	5.2	84.4
4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679.0	3.9	88.3
5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429.6	2.5	90.8
6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379.2	2.2	93.0
7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282.7	1.6	94.6
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19.0	1.3	95.9
9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47.5	0.8	96.7
10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133.5	0.8	97.5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 성장동력분야 사업들 중 89.6%가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예산사업의 89.3%가 당초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총 77개 사업 중 69개 사업(89.6%)이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5개 사업(6.5%)은 당초목표의 70~90%, 3개 사업(3.9%)은 당초목표의 70%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8개 사업(90%미만)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의 경우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를 위한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생애단계별 진로 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교과부),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경부),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복지부) 등이 해당

- 성장동력분야의 예산사업 중 50개(89.3%)가 당초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6개(10.7%)는 당초예산의 70~90%미만을 집행
 -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6개 사업(90%미만)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의 경우 정년제도 개선,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등이 해당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에서는 전무

〈표 4-12〉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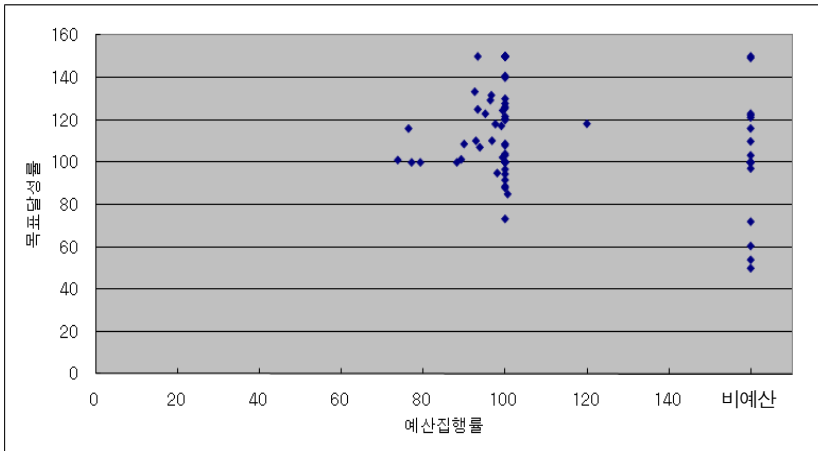
(단위: 사업수, %)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전체	사업 평균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목표기준	-	3(3.9)	5(6.5)	69(89.7)	77(100.0)	96.5%
예산기준	-	-	6(10.7)	50(89.3)	56(100.0)	96.8%

주: 예산집행률의 평균에는 비예산사업 33개(35??) 제외

-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모두 90% 이상인 사업들이 63개로 대다수이며,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모두 90% 미만인 사업은 전무

〔그림 4-5〕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포



주: 전반적인 분포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 목표달성률이 150%를 넘는 경우 150%로 표기하였음.

[그림 4-6]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류

목표달성률	6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제도 개선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 외국근로자 채용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63개 과제
	0개 과제	90% 8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중 발급 개선 및 채용 편의제공*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화체육관광부)*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교과부)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지경부)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복지부)*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복지부)

예산집행률

주: *는 비예산 사업이며, 비예산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100%라고 가정하였음.

□ 성장동력분야 정책들의 추진성과(3.5점)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의 성과(3.0점)는 양호한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소영역)”의 성과(3.8)는 양호한 수준
 -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사업의 성과로 AA사업장여성고용률 증가율은 34%(1%p 대비), AA사업장 여성관리자고용률 증가율은 14.1% 등으로 미흡(2.5점)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33.3%로 우수(5점)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소영역)”의 성과(2.4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사업의 성과로 정년제도 도입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의 평균 연령증가율(1세 대비)은 17.0%로 매우 미흡(1점)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사업의 성과로 임금 피크제보전수당수급자수 증가율은 47.9%로 우수(5점)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사업의 성과로 고용장려금 수혜자증가율은 -4.0%로 매우 미흡(1점)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은 13.8%로 미흡(2점)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소영역)”의 성과 (2.5점)는 미흡한 수준
 -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사업의 성과로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증가율은 2.4%로 미흡(2.0점)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사업의 성과로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증가율은 9.1%로 양호(3.0점)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성과는 3.4점으로 보통 수준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소영역)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41.3%(5점), 평생학습참여율 28.0%(5점) 등의 성과는 높으나,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구조와 관련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p 대비)은 -30.0%로 성과점수는 1점에 불과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소영역)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은 97.1%로 4점으로 비교적 성과가 높으나, 산재장해인직업 복귀율 증가율은 -3.8%로 성과점수는 1점에 불과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성과는 우수(5점)한 것으로 평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소영역)”의 성과로 주요고령친화 산업 시장규모 증가율은 33.5%(5점),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지정·표시건수는 297건(5점)으로 우수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소영역)”의 성과로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는 9건으로 우수(5점)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소영역)”의 성과로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이 61.7%로 우수(5점)

〈표 4-13〉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단위: 사업수, 억원, %, 원, 명)

	사업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전체	77	89.6	17382	100	89.3				3.5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39	94.9	2099	12.1	85.7				3.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1	100	297	1.7	100				3.8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11	0.1		AA사업장여성고용률 여성관리자고용률	33.6 12.5	34.01 14.13	2.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283	1.6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3.3	33.3	5.0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2.6	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2	100	870	5.0	72.7				2.4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청년제도 개선			31.4	0.2		45세이상퇴직자의평균 연령(1세대비 증가율)	2.0	17.0	1.0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83	0.5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수급자수 증가율	70.4	47.9	5.0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679	3.9		고용장려금 수혜자증가율	4.7	-4.0	1.0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6	0.2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50	0.3		50세+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율 증가율	11.36	13.79	2.0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6	87.5	932	5.4	87.5				2.5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0.5	0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30.9	2.4	2.0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379	2.2		전문외국인력 채용자수 증가율	11.3	9.1	3.0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23	0.7					
			430	2.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0	85.0	14,974	86.2	88.2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0.9	2.1	3.4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체계 확립	12	83.3	13,852	79.7	90.0				3.8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82	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p 대비)	60.0	-30.0	1.0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12,673	72.9		제작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42.0	41.3	5.0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097	6.3		평생학습참여율	26.4	28.0	5.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8	87.5	1,122	6.5	85.7				2.8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903	5.2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91.5	97.1	4.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19	1.3		산재장해인직장복귀율 증가율	9.7	-3.8	1.0

〈표 4-1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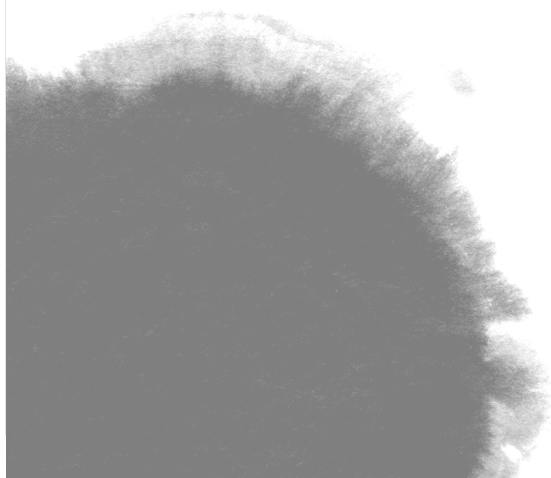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사업 개수	목표 90% 이상 달성	예산		예산 90% 이상 집행	성과지표	지표값		성과 점수
			억원	%			2008	2009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8	83.3	310	1.8	100				5.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6	66.7	134	0.8	100				5.0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0	0.0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증가율	21.3	33.5	5.0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 표시제도 도입			0	0.0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지정·표시건수	296	297	5.0
고령친화제품 종합제품관 설립			134	0.8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8	87.5	146	0.8	100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46	0.8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2	100	0.2	0.0	100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14	9	5.0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0.2	0.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2	100	30	0.2	100	역모기지대출건수 증가율	35.0	61.7	5.0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0	0.2					
장기주택시장 육성			0	0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에서 실시한 “전략적 홍보·교육”과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모두 당초목표를 100% 달성하고 비예산 사업을 제외한 예산 사업은 예산을 전액 집행

05

결론



제5장 결론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서는 4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11.8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총 226개 사업 추진
 - 저출산분야 90개(4.6조원), 고령사회분야 56개(5.4조원), 성장동력분야 77개(1.7조원), 사회적분위기조성분야 3개 등
 - 전체사업 중 88.1%가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저출산 85.6%, 고령사회 89.3%, 성장동력 89.6%, 사회적분위기조성 100.0%), 145개 예산사업 중 91.0%(132개)가 당초예산율 90%이상 집행(저출산 89.1%, 고령사회 100.0%, 성장동력 89.3%, 사회적분위기조성 100.0%)
- 저출산분야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
 - 저출산분야 정책들 대부분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높은 수준으로 추진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 방과후학교 참여율, 세제지원금액, 불임부부 지원건수 등 증가 및 산모도우미 수혜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일·가정양립 제고와 관련하여 육아휴직률, 가족친화지수 등 증가
 - 그러나 일부 정책(10%이상)의 목표달성 실패 및 예산집행 미흡, 사업 영세성, 예산 편중,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추진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실정
 - 전체사업 중 14.4%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의 목표달성도 미진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중영역)’의 경우 장애아 무상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직장보육시설 확충,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등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의 경우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 예산사업 중 약 11%인 7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부진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등
- 전체예산 중 상당비중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중영역)’에 집중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에는 미약한 수준
 - ‘보육·교육비지원의 선진화’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개 정책에만 총예산의 약 80% 집중
 - 전체 정책 중 2/3가 비예산 사업이거나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구성
- 높은 추진실적(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 정책대상 한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에 한계
 - 자녀양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등
 - 일·가정 양립 제고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확대,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등

□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

- 고령사회정책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실적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가입률, 노인기초노령연금수급률, 퇴직연금가입자증가율 등 증가
 -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치매검진을,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노인요양시설구축율 등 증가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률이 높고, 고령층 정보격차지수가 현저히 감소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저상 버스 도입률, 노인주택만족도 등 높은 수준 유지
- 그러나 일부 정책들의 경우 목표달성 미흡, 영세성, 목표수준 비현실성, 대상 한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 문제점 노정
 - 전체 예산 중 상당비중이 소수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은 비예산이거나 소규모 영세성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독거노인 보호 강화 2개 정책에 총예산의 약 80% 집중
 - 전체 사업 중 비예산 혹은 소규모 사업의 비중은 약 90%
 - 6개 사업은 목표 달성 미진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중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공공부문 퇴직연금가입 유도,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중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 정책대상 한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추진성과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구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등
-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
 -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실적 우수
 - 여성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임금피크제보전수당수급자수 증가율, 재직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증가율,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지정·표시건수,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 등에서의 성과 우수

○ 그러나 비예산 및 소규모 사업 위주, 높은 예산집중도, 일부 주요 사업들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실적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성과는 높지 않은 수준

-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부진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의 경우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를 위한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편의 제공,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의 경우 생애단계별 진로 개발표준모델 개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통합DB 개발 및 구축,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등
- 정년제도 개선,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등 예산집행실적 상대적 미흡
- 전체 사업 중 80% 수준이 비예산 혹은 소규모 사업들로 구성
 - 수요자중심 직업능력개발 기회확대,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 자격제도 혁신 등 2개 정책에 총예산의 80% 이상 집중
- 그 결과 일부 정책의 추진성과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
 - AA사업장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고용률, 퇴직자 평균 연령증가율, 고용장려금 수혜자증가율,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 방문취업 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등 미흡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에서 실시한 “전략적 홍보·교육”과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당초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을 전액 집행(비예산 사업 제외)

- 이상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시행 계획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 모두를 포함하도록 향후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26개 정책들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핵심정책과 기초정책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정책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목표달성도나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심층분석하여 환류 필요
 - 추진성고가 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대상, 지원수준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 강화 필요
 - 저출산분야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확대,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사업 등
 - 고령사회분야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구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등
 - 성장동력분야의 경우 AA사업장여성고용 촉진, 장년연령 증가, 고용 장려금 제공, 산업재해 예방, 방문취업시중 소지자 증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 등
 - 추진성고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정책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노력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분야의 경우 홍보·교육 강화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등 필요

부록

1. 성과지표 체계 (점수부여 기준, 5점 만점)

가. 저출산분야

평가항목	척도
	현년도 '합계출산율'
A.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⑤ 1.20명 이상 달성 ④ 1.19명 이상 ~ 1.20명 미만 달성 ③ 1.17명 이상 ~ 1.18명 미만 달성 ② 1.16명 이상 ~ 1.17명 미만 달성 ① 1.16명 미만
A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육아서비스 이용률 $[(\text{보육시설 아동 수} + \text{유치원 이용 아동 수}) \div \text{전체 영유아 수}] \times 100$ ⑤ 61.7% 이상 달성 ④ 60.5% 이상 ~ 61.7% 미만 달성 ③ 59.3% 이상 ~ 60.5% 미만 달성 ② 58.0% 이상 ~ 59.3% 미만 달성 ① 58.0% 미만
A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text{보육비 지원아동 수} + \text{교육비 지원아동 수}) \div \text{전체 영유아 수}] \times 100$ ⑤ 50% 이상 ④ 46.67% ~ 49.99% ③ 43.34% ~ 46.68% ② 40% ~ 43.33% ① 40% 미만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 $(\text{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수} \div \text{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times 100$ ⑤ 60% 이상 ④ 56.5% 이상 ~ 60.0% 미만 ③ 53.0% 이상 ~ 56.5% 미만 ② 49.6% 이상 ~ 53.0% 미만 ① 49.6% 미만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text{현년도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목표치} - \text{현년도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⑤ 0원 이하 달성 ④ 0원 초과 ~ 15만원 이하 달성 ③ 15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달성 ② 35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달성 ① 50만원 초과 달성

평가항목	척도	
A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i 척도값+ ii 척도값)÷2	
	i. 국공립시설수 증가율	ii.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
육아지원시설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⑤ 7% 이상 ④ 5% 이상 ~ 7% 미만 ③ 3% 이상 ~ 5% 미만 ② 1% 이상 ~ 3% 미만 ① 1% 미만	⑤ 전년도 증가율의 80%이상 달성 ④ 전년도 증가율의 80%~60%미만 달성 ③ 전년도 증가율의 40%~60%미만 달성 ② 전년도 증가율의 20%~40%미만 달성 ① 전년도 증가율의 20% 미만 달성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차이 = 현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 현년도 '민간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⑤ 4.2% 미만 달성 ④ 4.2%이상 5.5% 미만 달성 ③ 5.5%이상 6.7% 미만 달성 ② 6.7%이상 8.0% 미만 달성 ① 8.0% 이상 달성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휴일)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이용이동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⑤ 5%p 이상 ④ 3.75%p ~ 5.0%p미만 ③ 2.5%p 이상 ~ 3.75%p 미만 ② 1.25%p 이상 ~ 2.50%p 미만 ① 1.25%p 미만 증가	
A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모도우미 수혜비율(목표치 대비)	
산전검사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⑤ 사업목표치 달성 100.0% 이상 ④ 사업목표치 달성 80% ~100.0% 미만 ③ 사업목표치 달성 60% ~80% 미만 ② 사업목표치 달성 40% ~60% 미만 ① 사업목표치 달성 40% 미만	
	불임부부 지원건수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화	⑤ 1.5만건 이상 ④ 1.5만건 ~ 12,500건 ③ 12,500건 ~ 10,000건 ② 10,000건 ~ 7,500건 ① 7,500건 미만	
	주출산 연령층(25~34세) 여성고용률 - 남성고용률	
A2.	⑤ 17.7% 미만 달성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④ 17.7% 이상 ~ 18.2% 달성 ③ 18.2% 이상 ~ 18.7% 미만 달성 ② 18.7% 이상 ~ 19.2% 미만 달성 ① 19.2% 이상	
A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전년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100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⑤ 전년대비 10% 이상 ④ 전년대비 7% 이상 ~ 10% 미만 ③ 전년대비 3% 이상 ~ 7%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3%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육아휴직률 (현년도 '육아휴직자수'÷현년도 '산전후 휴가자수')×100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⑤ 39.0% 이상 달성 ④ 38.1% 이상 ~ 39.0% 미만 달성 ③ 37.2% 이상 ~ 38.1% 미만 달성 ② 36.3% 이상 ~ 37.2% 미만 달성 ① 36.3% 미만 달성	

평가항목	척도
A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지수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⑤ 42점 이상 ④ 40.3점 이상~42점 미만 ③ 38.7점 이상~40.3점 미만 ② 37.0점 이상~38.7점 미만 ① 37.0점 미만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text{현년도-전년도 '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수'} \div \text{전년도 '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수'}) \times 100]$ ⑤ 전년대비 20% 이상 달성 ④ 전년대비 13% 이상 ~ 20% 미만 달성 ③ 전년대비 7% 이상 ~ 13% 미만 달성 ② 전년대비 0% 이상 ~ 7% 미만 달성 ① 전년대비 0% 미만 달성
A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결혼필요성+자녀필요성) ÷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⑤ 90% 이상 ④ 80% 이상~90% 미만 ③ 70% 이상~80% 미만 ② 60% 이상~70% 미만 ① 60% 미만
	미혼남녀 자녀필요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⑤ 90% 이상 ④ 80% 이상~90% 미만 ③ 70% 이상~80% 미만 ② 60% 이상~70% 미만 ① 60% 미만
A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A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text{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div \text{만14세이하 전체 아동수}) \times 100,000$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⑤ 7.7명 이하 달성 ④ 7.7명 초과 ~ 7.77명 이하 달성 ③ 7.77명 초과 ~ 7.81명 이하 달성 ② 7.81명 초과 ~ 7.90명 이하 달성 ① 7.9명 초과 달성
	학생대상 전문상담간수 증감률 $[(\text{현년도-전년도 '학생대상 전문상담간수'} \div \text{전년도 '학생대상 전문상담간수'}) \times 100]$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⑤ 전년도 실적의 40% 이상 ④ 전년도 실적의 30~40% 미만 ③ 전년도 실적의 20~30% 미만 ② 전년도 실적의 10~20% 미만 ① 전년도 실적의 10% 미만

평가항목	척도
A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보호기능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자 수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100
	⑤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10% 이상
	④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7.5% 이상 ~ 10% 미만
	③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5.0% 이상 ~ 7.5% 미만
	②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2.5% 이상 ~ 5.0% 미만
	①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2.5% 미만
유해환경 차단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실적 현년도 감시단활동 실적 중 신고·고발 건수
	⑤ 4000건 이상 달성
	④ 3,900건 이상 ~ 4000건 미만 달성
	③ 3,800건 이상 ~ 3,900건 미만 달성
	② 3,700건 이상 ~ 3,800건 미만 달성
	① 3,700건 미만 달성

나. 고령화분야

평가항목	척도
B1.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강화	a)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수혜율(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및 기초노령)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공무원·군인·사학·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총합) \div 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⑤ 70% 이상 ④ 60% 이상 ~ 70% 미만 ③ 50% 이상 ~ 60% 미만 ② 40% 이상 ~ 50% 미만 ① 40% 미만
	b)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율 ⑤ 120% 이상 ④ 115% 이상 ~ 120% 미만 ③ 110% 이상 ~ 115% 미만 ② 105% 이상 ~ 110% 미만 ① 105% 미만
B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보노력 ⑤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지 3년 이내 ④ 개혁방안 합의안이 마련되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 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20-59세 공적연금가입자수 \div 20-59세 근로연령인구) \times 100$ ⑤ 80% 이상 ④ 70% 이상 ~ 80% 미만 ③ 60% 이상 ~ 70% 미만 ② 50% 이상 ~ 60% 미만 ① 50% 미만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직역연금 재정안정화보노력 ⑤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지 3년 이내 ④ 개혁방안 합의안이 마련되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 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div 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법정 비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연계 ⑤ 가입기간 연계방안이 제도화된 경우 ④ 가입기간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가입기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 ① 가입기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나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1-2.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 제도 확대	20-59세 퇴직연금가입률 증가율 $(\text{현년도-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 / \text{전년도 퇴직연금가입률}) \times 100$ ⑤ 120% 이상 ④ 115% 이상 ~ 120% 미만 ③ 110% 이상 ~ 115% 미만 ② 105% 이상 ~ 110% 미만 ① 105% 미만

평가항목	척도
B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B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p>노인건강검진율 $(65\text{세 이상 노인 중 1년간 건강검진자수} \div 65\text{세 이상노인}) \times 100$</p> <p>⑤ 전체노인의 60% 이상 ④ 전체노인의 50% 이상 ~ 60% 미만 ③ 전체노인의 40% 이상 ~ 50% 미만 ② 전체노인의 30% 이상 ~ 40% 미만 ① 전체노인의 30% 미만</p>
	<p>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text{현년도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div \text{현년도 '노인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목표치}) \times 100$</p> <p>⑤ 목표치 100.0% 이상 달성 ④ 목표치 96.7% ~ 100.0% 미만 달성 ③ 목표치 93.3% ~ 96.7% 미만 달성 ② 목표치 90.0% ~ 93.3% 미만 달성 ① 목표치 90.0% 미만 달성</p>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p>노인치매검진율 $(65\text{세 이상 노인중 1년간 치매검진자수} \div 65\text{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p> <p>⑤ 전체노인의 6% 이상 ④ 전체노인의 5% 이상 ~ 6% 미만 ③ 전체노인의 4% 이상 ~ 5% 미만 ② 전체노인의 3% 이상 ~ 4% 미만 ① 전체노인의 3% 미만</p>
B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p>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5\text{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 \div 65\text{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p> <p>⑤ 2.0% 이상 달성 ④ 1.8% 이상 ~ 2.0% 미만 달성 ③ 1.6% 이상 ~ 1.8% 미만 달성 ② 1.4% 이상 ~ 1.6% 미만 달성 ① 1.4% 미만 달성</p>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p>노인요양시설 구축률 $(\text{현 병상수} \div \text{목표 병상수}) \times 100$</p> <p>⑤ 목표치 100.0% 이상 달성 ④ 목표치 90%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③ 목표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② 목표치 70% 이상 ~ 80% 미만 달성 ① 목표치 70% 미만 달성</p>
B2-3. 노인 권익 증진	<p>노인 삶의 만족도 $(\text{생활 전반만족도} \times 0.4 + \text{건강상태만족도} \times 0.2 + \text{주관적본인경제상태} \times 0.2 + \text{자녀관계} \times 0.2)$</p> <p>⑤ 4점 이상 ④ 3점 이상 ~ 4점 미만 ③ 2점 이상 ~ 3점 미만 ② 1점 이상 ~ 2점 미만 ① 1점 미만</p>

평가항목	척도	
B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B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률 (현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수’÷현년도‘노인일자리 창출 수’목표치)×100	
	⑤ 100.0% 이상 달성	
	④ 95% 이상~100.0% 미만 달성	
	③ 90% 이상~95% 미만 달성	
	② 85% 이상~90% 미만 달성	
	① 85% 미만 달성	
B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조성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현년도 ‘노인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수’÷현년도 ‘노인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수’ 목표치)×100	
	⑤ 100.0% 이상 달성	
	④ 95%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③ 90% 이상 ~ 95% 미만 달성	
	② 80% 이상 ~ 90% 미만 달성	
	① 80% 미만 달성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현년도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⑤ 44.0점 이하 달성	
	④ 44.0점 초과 ~ 46.2점 이하 달성	
	③ 46.2점 초과 ~ 48.5점 이하 달성	
	② 48.5점 초과 ~ 50.7점 이하 달성	
	① 50.7점 초과 달성	
B4. 고령친화 생활 환경 조성	a) 노인의 주택만족도	
	⑤ 74.2% 이상 달성	
	④ 70.9% 이상 ~ 74.2% 미만 달성	
	③ 67.5% 이상 ~ 70.9% 미만 달성	
	② 64.2% 이상 ~ 67.5% 미만 달성	
	① 64.2% 미만 달성	
	b)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교통사고사망자수 ÷ 노인인구) × 100,000	
	⑤ 28명 이하 달성	
	④ 28명 초과 ~ 30.66명 이하 달성	
	③ 30.66명 초과 ~ 33.32명 이하 달성	
	② 33.32명 초과 ~ 36명 이하 달성	
	① 36명 초과	
B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노인의 주택만족도	
	⑤ 74.2% 이상 달성	
	④ 70.9% 이상 ~ 74.2% 미만 달성	
	③ 67.5% 이상 ~ 70.9% 미만 달성	
	② 64.2% 이상 ~ 67.5% 미만 달성	
	① 64.2% 미만 달성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i + ii)÷2	
	i.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현년도 ‘지하철역 승강시설 수’÷현년도‘지하철역 승강시설 수’목표치)×100	ii. 저상버스 도입률 (현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현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목표치)×100
	⑤ 100% 이상	⑤ 100% 이상
	④ 80% 이상~100% 미만	④ 80% 이상~100% 미만
	③ 60% 이상~80% 미만	③ 60% 이상~80% 미만
	② 40% 이상~60% 미만	② 40% 이상~60% 미만
	① 40% 미만	① 40% 미만

다. 성장동력분야

평가항목	척도	
	(i 척도값+ ii 척도값)÷2	
C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i.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1%p×100	ii. 고령자 고용률 (55-64세 취업자수÷55-64세 생산가능인구수)×100
	⑤ 100.0% 이상 달성	⑤ 59.2% 이상 달성
	④ 70%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④ 59.1% 이상 ~ 59.2% 미만 달성
	③ 30% 이상 ~ 70% 미만 달성	③ 58.9% 이상 ~ 59.1% 미만 달성
	② 0% 이상 ~ 30% 미만 달성	② 58.7% 이상 ~ 58.9%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① 58.7% 미만 달성
C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감률 (i 척도값+ ii 척도값)÷2	
	i.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증감률 (현년도 - 전년도 ‘AA제도 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1%p×100	ii.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AA제도 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 고용률’)=1%p×100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⑤ 100.0% 이상 달성	⑤ 100.0% 이상 달성
	④ 70% 이상~100.0% 미만 달성	④ 70% 이상~100.0% 미만 달성
	③ 30% 이상~70% 미만 달성	③ 30% 이상~70% 미만 달성
	② 0% 이상~30% 미만 달성	② 0% 이상~3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현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여성 수 ÷ 현년도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 수)×100	
	⑤ 24.0% 이상	
	④ 22.3% 이상 ~ 24.0% 미만	
	③ 20.6% 이상 ~ 22.3% 미만	
	② 18.9% 이상 ~ 20.6% 미만	
	① 18.9% 미만	
C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정년연령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정년제도 채택사업장 평균 정년연령)÷1세}×100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⑤ 50% 미만	
	④ 50% 이상 ~ 100% 미만	
	③ 100% 이상 ~ 150% 미만	
	② 150% 이상 ~ 200% 미만	
	① 200% 미만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수’÷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100	
	⑤ 전년대비 +6% 이상	
	④ 전년대비 +4% 이상 ~ +6% 미만	
	③ 전년대비 +2% 이상 ~ +4%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2%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강화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수’÷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수’}×100	
	⑤ 전년대비 +20% 이상	
	④ 전년대비 +15% 이상 ~ +20% 미만	
	③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②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① 전년대비 +5% 미만	

평가항목	척도
고령근로자 직무수행 환경 개선	<p>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 $\{(\text{현년도}-\text{전년도 } 50\text{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div\text{전년도 } 50\text{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times 100$</p> <p>⑤ 증가율 0% 미만 ④ 증가율 0% 이상 ~ 5.0% 미만 ③ 증가율 5.0% 이상 ~ 10.0% 미만 ② 증가율 10.0% 이상 ~ 15.0% 미만 ① 증가율 15.0% 이상</p>
C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	
외국적동포의 활용	<p>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text{현년도}-\text{전년도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건수'})\div\text{전년도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건수'}\}\times 100$</p> <p>⑤ 전년도 누적건수 대비 +5% 이상 ④ 전년도 누적건수 대비 +4% 이상 ~ +5% 미만 ③ 전년도 누적건수 대비 +3% 이상 ~ +4% 미만 ② 전년도 누적건수 대비 +2% 이상 ~ +3% 미만 ① 전년도 누적건수 대비 +2% 미만</p>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	<p>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률 $\{(\text{현년도}-\text{전년도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div\text{전년도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times 100$</p> <p>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p>
C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p>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text{현년도}-\text{전년도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div\text{전년도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times 100$</p> <p>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p>
C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p>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 $\{(\text{현년도}-\text{전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div 1\text{p}}\}\times 100$</p> <p>⑤ 100% 이상 달성 ④ 70% 이상 ~ 100% 미만 달성 ③ 30% 이상 ~ 70% 미만 달성 ② 0% 이상 ~ 3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p>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p>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frac{\text{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장려금+유급휴가훈련) 참여자 수}}{\text{고용보험 피보험자 수}}\times 100$</p> <p>⑤ 32.6% 이상 달성 ④ 31.7% 이상 ~ 32.6% 미만 달성 ③ 30.9% 이상 ~ 31.7% 미만 달성 ② 30.1% 이상 ~ 30.9% 미만 달성 ① 30.1% 미만 달성</p>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p>평생학습참여율 $\{(\text{형식교육참여자수}+\text{비형식교육참여자수})\div 25\sim 64\text{세 인구수}}\}\times 100$</p> <p>⑤ 28% 이상 달성 ④ 26% 이상 ~ 28% 미만 달성 ③ 24% 이상 ~ 26% 미만 달성 ② 22% 이상 ~ 24% 미만 달성 ① 22% 미만 달성</p>

평가항목	척도
C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산업재해율 (현년도 '산업재해율' 목표치÷현년도 '산업재해율')×100
	⑤ 목표치의 100.0% 이상 ④ 목표치의 95% 이상 ~ 100.0% 미만 ③ 목표치의 90% 이상 ~ 95% 미만 ② 목표치의 85% 이상 ~ 90% 미만 ① 목표치의 85% 미만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100
	⑤ 전년대비 5% 이상 ④ 전년대비 3.5% 이상 ~ 5% 미만 ③ 전년대비 1.5% 이상 ~ 3.5%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1.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C3. 고령친화산업 육성	
C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본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100
	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우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표시 제도 도입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서비스) 지정·표시 건수
	⑤ 25건 이상 달성 ④ 20건 이상 ~ 25건 미만 달성 ③ 15건 이상 ~ 20건 미만 달성 ② 10건 이상 ~ 15건 미만 달성 ① 10건 미만 달성
C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⑤ 5건 재개정 ④ 4건 재개정 ③ 3건 재개정 ② 2건 재개정 ① 1건 재개정
C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
	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2. 성과지표 산정 결과

가. 저출산분야 (2006~2009)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A.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A. 합계출산율	1.12	1.25	1.19	1.15	1.0	5.0	4.0	1.0	
A1.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육아서비스 이용률	53.2	58.0	59.4	62.6	1.0	2.0	3.0	5.0	5.0
A1-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4.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30.5	40.0	41.0	45.6	1.0	2.0	2.0	3.0	4.0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	41.6	49.8	52.8	59.5	1.0	2.0	2.0	4.0	4.0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목표치 대비 차액)			0		-	-	5.0	5.0	2.0
	①현년도 세제지원 금액			620 만원	870 만원					
	②현년도 목표치			620 만원	870 만원					
A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4.0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①점수+②점수)/2					5.0	5.0	3.0	4.5	3.0
	①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11.5	6.4	4.5	5.0	5.0	5.0	3.0	4.0	
	②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	47.1	55.6	60.2	66.2		5.0	3.0	5.0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총족률 차이	7.2	6.1	8.5	10.2	2.0	3.0	1.0	1.0	4.0
	①국공립보육시설 정원 총족률	89.1	88.1	87.3	88.5					
	②민간보육시설 정원총족률	81.9	82.0	78.8	78.3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보육 시설증가율	14.8	7.0	14.1	4.7	5.0	5.0	5.0	4.0	3.0
A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0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수혜율(목표대비)	99.5	108.3	144.6	91.0	4.0	5.0	5.0	4.0	5.0
	①현년도 지원건수	10,411	40,087	62,899	53,401					
	②현년도 목표치	10,464	37,000	43,471	58,698					
불임부부 지원	불임부부 지원건수	19137	14337	13269	17238	5.0	4.0	4.0	5.0	5.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A2.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주출산연령층(25-34세) 여성 고용률 - 남성고용률	21.3	19.1	19.0	19.6	1.0	2.0	2.0	1.0	3.0
	①여성고용률	57.7	58.7	59.2	58.3					
	②남성고용률	79.1	77.8	78.3	77.9					
A2-1. 모성보호 강화										3.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19.1	19.2	17.4	2.97	5.0	5.0	5.0	2.0	3.3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률	27.9	36.3	42.5	50.2	1.0	2.0	5.0	5.0	6.7
A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4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가족친화지수	37	41	44	49.2	2.0	4.0	5.0	5.0	5.0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임대채용정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	-	291.6	-25.5	*	*	5.0	1.0	5.0
A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70.9	70.9	70.9	70.9	3.0	3.0	3.0	3.0	5.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	-	-		81.9	*	*		4.0	5.0
A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0
A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5.0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7.2	6.3	6.0	6.0	5.0	5.0	5.0	5.0	5.0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가율	*	41.9	141.6	-44.1	*	5.0	5.0	1.0	5.0
A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5.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28.8	67.3	59.9	43.0	5.0	5.0	5.0	5.0	5.0
유해환경 차단 강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4,011	3,672	830	730	5.0	1.0	1.0	1.0	5.0

나. 고령화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①점수+②점수)/2					3.0	3.0	3.5	5.0	3.0
B1.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① 65세이상 공적소득보장수혜율	33.8	36.5	83.1	98.3	1.0	1.0	5.0	5.0	
	② 퇴직연금가입율 증가율	4120.9	151.3	107.4	121.0	5.0	5.0	2.0	5.0	
B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7.0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법개 정안 국회 통과	재정계 산실시, 공시 완료	법안심 사, 검토	*	5.0	5.0	4.0	2.8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64.1	65.6	66.0	66.3	3.0	3.0	3.0	3.0	1.8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직역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법개 정안 국회 통과	공무원 사각지대 개량 마련 군인연금 개량 마련 TF운영	공무원 사각지대 개량 마련 군인연금 개량 마련	*	5.0	3.7	4.0	2.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13.4	12.7	57.8	69.9				5.0	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 기간 연계			연계방안 협의안 도출, 법률제정	연계에 관한 법률시행	*	*	5.0	5.0	2.1
B1-2.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										3.0
퇴직연금제도 확대	20-59세 퇴직연금가입률 증가율	4121	151.3	107.4	121.0	5.0	5.0	2.0	5.0	10.0
B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보장	65세 기대수명	18.41	18.72	18.72	19.15					3.0
B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4.0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노인건강검진율	*	50.1	50.1	50.1	*	4.0	4.0	4.0	6.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노인치매검진율	0.5	2.0	2.9	9.7	1.0	1.0	1.0	5.0	4.0
B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3.9	5.0	*	*	5.0	5.0	5.0
노인 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노인요양시설 구축률	*	*	110.6	116.6	*	*	5.0	5.0	5.0
	① 노인요양시설 구축	*	*	68,581	88,266					
	② 목표치	*	*	62,027	75,722					
B2-3. 노인 권익 증진	노인 삶의 만족도	43.1	43.1	3.1	3.1	3.0	3.0	4.0	4.0	3.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B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2.0
B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률	103.8	105.1	107.7	107.1	5.0	5.0	5.0	5.0	5.7
B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4.3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110.0	169.4	133.0		5.0	5.0	5.0	5.0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6,362	10,288	8,484					
	-목표치		5,785.5	6,075	6,378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41.6	37.4	35.8	34.1	5.0	5.0	5.0	5.0	5.0
B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2.0	2.0	3.0	3.0	2.0
	노인의 주택만족도	64.2	64.2	69.7	69.7	2.0	2.0	3.0	3.0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37.7	37.1	34.6	35.2	1.0	1.0	2.0	2.0	
B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0.0
고령자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노인의 주택만족도	64.2	64.2	69.7	69.7	2.0	2.0	3.0	3.0	5.0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①+②)/2					4.6	5.0	4.4	5.0	5.0
	①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100.0	100.0	91.5	134.3	5.0	5.0	4.0	5.0	
	-승강시설 설치 수	2,844	2,988	3,029	5,157					
	-목표치	2,844	2,988	3,123	840					
	②저상버스 도입률	158.4	156.7	111.4	105.8	4.0	5.0	5.0	5.0	

다. 성장동력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C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①척도값+②척도값)/2					3.5	3.0	3.0	3.0	5.0
	①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	20.0	-10.0	-20.0	-80.0	2.0	1.0	1.0	1.0	
	②고령자 고용률	59.3	60.6	60.6	60.4	5.0	5.0	5.0	5.0	
C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0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①척도값+②척도값)/2					2.5	2.5	2.5		5.0
	①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증감률	30.7	32.3	33.6	34.0	3.0	3.0	3.0	3.0	
	②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감률	10.2	11.0	12.5	14.1	2.0	2.0	2.0	2.0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23.6	28.4	33.3	33.3	4.0	5.0	5.0	5.0	5.0
C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성 고령화시스템 구축										4.0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 연령증가율	11.0	2.0	2.0	17.0	1.0	1.0	1.0	1.0	3.0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수 증감률		157.7	70.4	47.9	*	5.0	5.0	5.0	3.0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강화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17.1	2.3	4.7	-4.0	4.0	1.0	1.0	1.0	2.0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	9.9	7.1	11.4	13.8	3.0	3.0	2.0	2.0	2.0
C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										2.0
외국적동포의 활용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30.9	2.4	*	*	5.0	2.0	5.0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률	17.1	15.5	11.3	9.1	5.0	5.0	4.0	3.0	5.0
C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11.0	6.8	0.9	2.1	4.0	3.0	2.0	2.0	3.0
C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6.0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률 증가율	170.0	30.0	60.0	-30.0	5.0	3.0	3.0	1.0	3.0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34.1	39.5	42.0	41.3	5.0	5.0	5.0	5.0	4.0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 자격제도 혁신	평생학습참여율		29.8	26.4	28.0	*	5.0	4.0	5.0	3.0
C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4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94.8	95.8	91.5	97.1	3.0	4.0	3.0	4.0	6.0
	①목표치	0.73	0.69	0.65	0.68					
	②산업재해율	0.77	0.72	0.71	0.7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25.1	17.0	9.7	-3.8	5.0	5.0	5.0	1.0	4.0
C3. 고령친화산업 육성										2.0
C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강화										3.0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로드맵 작성추진			21.3	33.5	*	*	5.0	5.0	5.0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서비스) 지정·표시 건수			296	297	*	*	5.0	5.0	5.0
C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4	13	14	9	*	5.0	5.0	5.0	4.0
C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5.0	61.7	*	*	5.0	5.0	3.0